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유입유형별 지역정착 사례분석

An Analysis of Regional Settlement Cases by Population Influx Patterns
in Jeonbuk State

김동영 박지애 최지훈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김동영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지애

University of Florida 사회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지훈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전북자치도 인구유입유형별 지역정착 사례분석

An Analysis of Regional Settlement Cases by Population Influx Patterns
in Jeonbuk State

김동영 박지애 최지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김동영	책임연구위원	연구총괄
공동연구	박지애	연구위원	제3장
	최지훈	연구원	제2장

자문위원	전대성	전주대학교 교수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김대성	전남연구원 인구전략추진센터장
	윤정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25JU0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배경 및 목적

- 기존의 인구정책 연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유출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지방으로 이주를 통한 정착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정착 실증연구는 부재한 상황임
- 전국적으로 전북자치도 및 시군으로 이동한 총전입자는 2024년 기준 19만 9천 명에 달하며, 이들의 전북 전입 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순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자치도 정착인구를 일자리, 교육, 귀농·귀촌, 은퇴자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전북자치도로의 인구유입정착을 위한 정책발굴, 세부적으로 전북 정착 사유, 지역이동 경로, 지역선택과 정착 과정의 어려움, 지속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사례조사를 통해 이들이 가진 사회문화적 속성들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전북자치도 전입·전출인구 현황을 시·도간 이동과 전북자치도 내 시군 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전입인구의 지역 및 원인 등 특성분석
- 전북자치도 인구유입유형을 일자리(취·창업), 교육(자녀교육, 본인교육), 귀촌(귀농, 귀어, 귀산촌), 은퇴자(은퇴 후 귀촌/활동, 고향 U턴 등) 등 크게 4개로 구분하고, 14개 시군의 유형별 대표적 정착사례 조사
- 선정된 지역정착 사례에 대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FGI 또는 개별 심층인터뷰를 병행

2.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정착 유형별 정책사례 조사 결과분석

- (일자리) 수도권외 취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이직이나 로컬창업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북으로 이주
- (교육) 학령기 자녀 교육이나 본인의 학위 취득뿐 아니라 가족 돌봄의 재구성, 심리·정서적 치유, 자아실현 등 복합적인 계기가 전북 지역으로의 이주 실현으로 이어짐
- (귀농·귀촌) 귀농, 귀어, 귀산촌을 포함하는 귀촌은 삶의 질 향상이나 생계 대안 확보를 위한 지역살이의 선택으로 전북에 정착
- (은퇴) 은퇴자는 제2의 삶 실현을 위해 전북 지역의 자연 친화적 환경, 저렴한 토지, 조용한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으로 이주

■ 전북자치도 지역정착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8대 추진과제

- (초기정착지원) 전북자치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
 - 원스톱 인구정책 지원센터 운영, 초기 정착 코디네이터 운영, 주거와 일자리 패키지 지원
- (유형별 맞춤형전략) 전북자치도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 교육, 귀농·귀촌·귀어, 은퇴 등 다양한 동기와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이루어져 유형별 특성화 전략 필요
 - (일자리) 작은창업 지원, 여성 친화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확대
 - (교육) 지방교육 경쟁력 강화, 배움·돌봄·치유 통합케어, k-컬처 활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귀농·귀촌) 성장 육성 단계별 지원, 귀농 중심에서 귀어와 귀촌 지원으로 전환, 선별적 집중지원
 - (은퇴) 지역 유입 은퇴자 자존감 회복, 필수 생활 인프라 확충, 갈등 조정을 통한 상호존중 공동체 조성
- (통합형 거버넌스) 지역 정착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및 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필수
 - 지역정착 지원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이주민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정책 공감대 확산

차 례

CONTENTS

요약	i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8
4.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전북자치도 인구이동 현황

1.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19
2. 전북자치도 인구이동 현황	29
3. 소결 및 시사점	59

제3장 전북자치도 인구유입유형별 정착사례

1. 지역정착 유형화	63
2. 인구유입유형별 정착사례	68
가. 일자리	68
나. 교육	81
다. 귀촌(귀농, 귀어, 귀산촌)	94
라. 은퇴자	102
3. 소결 및 시사점	111

제4장 전북자치도 지역정착 정책 방안

1. 정책방향	119
가. 전입·전출 요인분석	119
나. 인구유입 유형분석	121
다. 정책방향 설정	127
2. 추진과제	132
가. 정착초기 지원체계 구축	132
나. 유형별 맞춤형 전략	141
다. 통합형 인구정책 거버넌스 형성	176

참고문헌	184
------------	-----

영문요약 (Summary)	186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시도별 전입·전출 및 순이동	4
[표 1-2] 전북자치도 인구이동의 전출입 사유(2024)	6
[표 1-3] 인구유입 및 지역정착 관련 선행연구 검토	12
[표 2-1] 전국 시도별 이동자 수(2024)	19
[표 2-2] 시도별 주요 전입지 및 전출지(2024)	20
[표 2-3] 시도별 이동자 수 추이(2014~2024)	21
[표 2-4] 전국 시도별 전입 사유(2024)	22
[표 2-5] 전국 시도별 전출 사유(2024)	24
[표 2-6] 전국 시도별 연령대별 전입자(2024)	25
[표 2-7] 전국 시도별 연령대별 전출자(2024)	27
[표 2-8] 전북 연도별 전입·전출 추이(2015~2024)	29
[표 2-9] 전북 시군별 전입·전출 현황(2024)	31
[표 2-10] 전북 시군별 전입·전출 추이(2016~2024)	33
[표 2-11] 전북 연령대별*성별 전입자 추이(2015~2024)	35
[표 2-12] 전북 시군별 성별*연령대별 전입자(2024)	37
[표 2-13] 전출지별 전북 전입자 수 추이(2014~2024)	39
[표 2-14]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역(2024)	41
[표 2-15] 전북 연도별 전입 사유 추이(2015~2024)	43
[표 2-16] 전북 연도별 전출 사유 추이(2015~2024)	44
[표 2-17] 전북 시군별 전입 사유(2024)	46
[표 2-18] 전북 연령대*전입사유별 이동건수(2024)	47
[표 2-19] 전북 전입사유별 읍면동 주요 순위(2024)	48
[표 2-20] 전북 읍면동별*전입사유별 전입자 현황(2024)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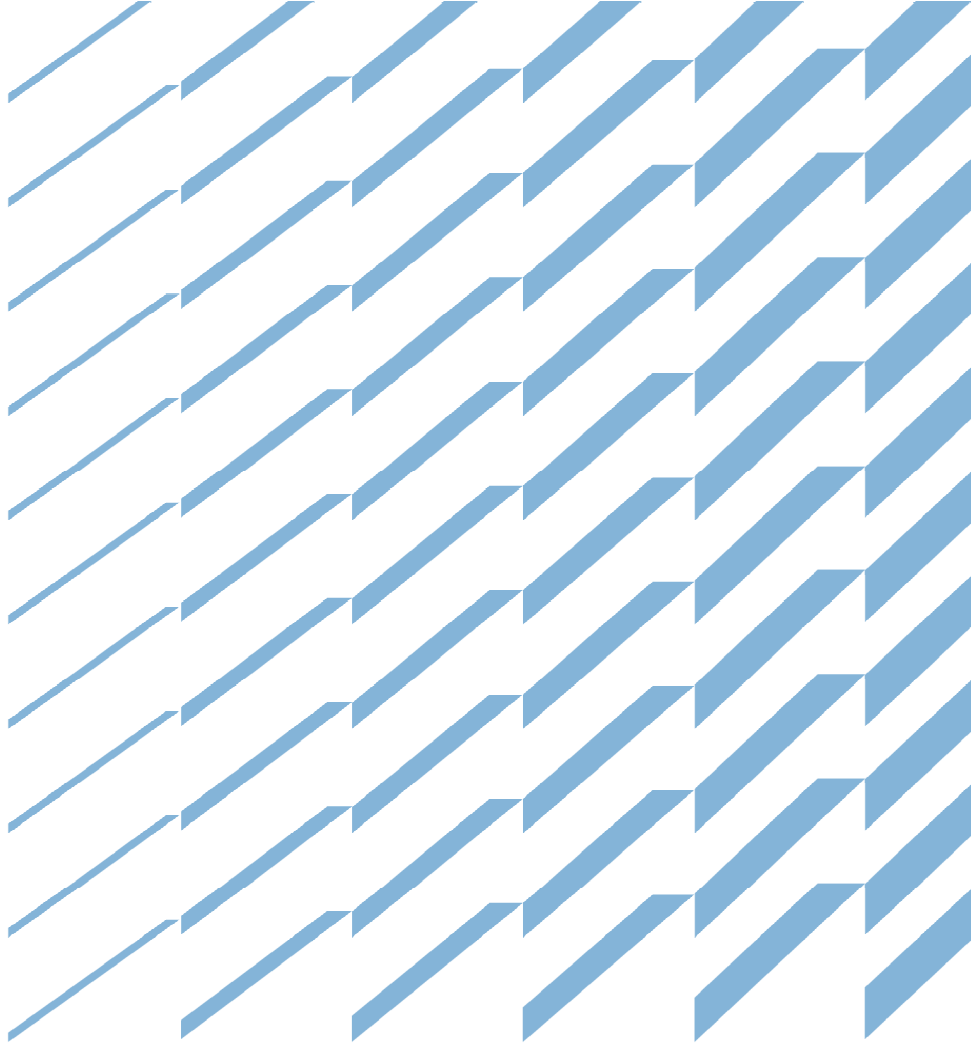
[표 4-1] 전북자치도 인구요인 분석결과	119
[표 4-2] 지역정착 유형별 주요 이슈	126
[표 4-3] 전북 지역 정착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	131
[표 4-4]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례	143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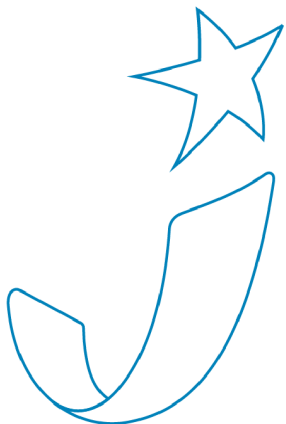
[그림 1-1] 전북자치도 전출입 사유별 구성비 추이(2015~2024)	6
[그림 2-1] 시도별 전입사유별 구성비(2024)	23
[그림 2-2] 시도별 전출사유별 구성비(2024)	24
[그림 2-3] 시도별 전입 연령대별 구성비(2024)	26
[그림 2-4] 시도별 전출 연령대별 구성비(2024)	27
[그림 2-5]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률(2024)	28
[그림 2-6] 최근 10년간 전북 인구이동 추이(2015~2024)	30
[그림 2-7] 최근 10년간 전북 인구이동(전입-전출) 구성비 추이(2015~2024) ·	30
[그림 2-8] 전북 시도간 전입-전출 인구의 시군별 구성비(2024)	32
[그림 2-9] 전북 시군별 전입인구의 전출지역 비중(2024)	32
[그림 2-10] 전북 시도간 전입자수의 시군별 구성비 추이(2016~2024)	34
[그림 2-11] 전북 시도간 전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2016~2024)	34
[그림 2-12] 전북 시도간 전입자의 연령대별*성별 구성비(2024)	35
[그림 2-13] 전북 시도간 (남성)전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2016~2024)	36
[그림 2-14] 전북 시도간 (여성)전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2016~2024)	36
[그림 2-15]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성별 구성비(2024)	38
[그림 2-16] 전북 시군별 전입자 성별의 연령대별 구성비(2024)	38
[그림 2-17] 전북 전입자의 전출지별 구성비 추이(2014~2024)	40
[그림 2-18]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 주요 순위(2024)	41
[그림 2-19]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 구성비(2024)	42
[그림 2-20]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권역 구성비(2024)	42
[그림 2-21] 전북 전출입 사유별 구성비 추이(2015~2024)	44
[그림 2-22] 전북 전입-전출 사유 비교(2024)	44

[그림 2-23] 전북 시군별 전입 사유 구성비(2024)	45
[그림 2-24] 전북 전입 사유별 시군 구성비(2024)	46
[그림 2-25] 전북 연령대*전입사유별 이동건수(2024)	47
[그림 3-1] 지역정착 사례 추천 양식(예시)	63
[그림 3-2]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과정	67
[그림 3-3] 일자리 유형 내용 유목화	112
[그림 3-4] 교육 유형 내용 유목화	113
[그림 3-5] 귀촌(귀농, 귀어, 귀산촌) 유형 내용 유목화	115
[그림 3-6] 은퇴자 유형 내용 유목화	116
[그림 4-1] 전북자치도 지역정착 정책방향 체계도	127
[그림 4-2] 전북자치도 지역정착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30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4.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2020년 이후 시작된 본격적인 총인구 감소에 의한 생산인구 급감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출산율 회복에 집중하고 있음
- 지방인구정책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특히, 20~30대의 인구유출에 의한 급속한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임
-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정책의 초점에서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인 수도권에서 인구유출과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임
- 정책연구기관의 연구 또한 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주를 이루는 반면, 지방으로 이주를 통한 정착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정착사례 연구는 부재한 상황임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전출인구와 총 전입인구는 628만3천명에 달하며, 이 중 20대 23.9%, 30대 21%로 20-30대의 인구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서울에서 이동한 총전출자는 2024년 기준 126만 6천명에 이르며, 경기도(166만2천명)와 인천(37만2천명)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다른 시도로 총 전출자는 330만명에 달함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북자치도 및 시군으로 이동한 총전입자는 2024년 기준 19만9천명에 달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로 유입된 인구 중 지역에 정착한 유형별 사례연구를 통해 전북자치도로의 인구유입정착을 위한 정책수립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표1-1] 시도별 전입·전출 및 순이동

(단위: 천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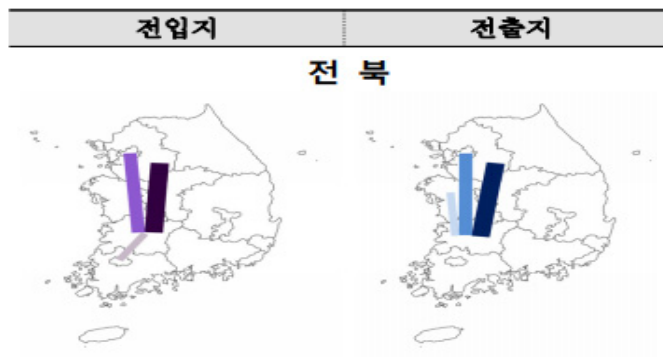
	이동자 수(천 명)												전년대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증감률(%)		증감
	2014	2019	2023	2024	2014	2019	2023	2024	2014	2019	2023	2024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전 국	7,629	7,104	6,129	6,283	7,629	7,104	6,129	6,283	0	0	0	0	2.5	2.5	0
서울	1,574	1,426	1,207	1,221	1,661	1,476	1,238	1,266	-88	-50	-31	-45	1.2	2.2	-13
부산	486	412	364	379	501	435	376	392	-15	-23	-11	-14	3.9	4.4	-2
대구	350	312	296	304	366	336	302	308	-16	-24	-5	-5	2.4	2.2	1
인천	452	420	424	398	443	422	391	372	9	-2	34	26	-6.2	-4.7	-8
광주	243	217	163	172	246	221	172	180	-3	-4	-9	-8	5.8	4.9	1
대전	240	212	186	196	248	229	189	198	-9	-16	-2	-2	5.3	4.8	1
울산	176	142	117	113	173	152	123	118	3	-10	-6	-5	-2.8	-3.8	1
세종	57	82	56	61	23	59	54	58	33	24	2	3	8.9	7.1	1
경기	1,892	1,941	1,681	1,726	1,834	1,806	1,637	1,662	57	135	45	64	2.7	1.6	20
강원	228	218	173	184	226	216	175	187	2	2	-1	-3	6.3	6.9	-1
충북	216	211	186	190	214	209	182	187	2	3	4	3	1.8	2.2	-1
충남	290	259	266	267	280	260	250	252	10	-1	16	15	0.3	0.8	-1
전북	274	229	189	199	277	242	193	205	-3	-13	-4	-6	5.3	6.0	-2
전남	260	224	184	184	261	233	185	188	-1	-9	-2	-4	0.2	1.3	-2
경북	337	307	254	278	338	311	262	286	-1	-5	-8	-8	9.4	9.1	0
경남	462	396	300	329	456	406	317	338	6	-9	-16	-9	9.7	6.9	7
제주	93	95	82	82	81	92	83	85	11	3	-2	-3	0.2	2.2	-2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전북자치도 전입·전출인구 현황분석

- 전북자치도 전입·전출인구의 연령별·지역별 현황분석을 통한 전입인구의 특성분석
 - 전북자치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경기 23.9%, 서울 18.1%, 광주 9.5%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출인구는 경기 23.8%, 서울 19.2%, 충남 10%로 나타남
 - 전북자치도의 연령별 순이동률을 보면, 2030대는 순유출되었으며, 405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순유입됨. 특히, 20대 연령층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유출률을 기록함



- 전북자치도 전입·전출인구의 현황분석으로 지역별 인구이동 및 연령별 인구이동 등의 기본적인 인구이동 패턴 분석

■ 전북자치도 전입사유를 통한 인구유입유형 구분

- 전북자치도 인구이동의 전출입 사유를 보면, '직업' 사유가 전출입의 가장 주된 사유로 나타남
 - '직업'을 이유로 17,427명이 전북도로 전입한 반면, 24,822명이 전출하여 -7,395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음. 다음으로는 '교육' 사유로 -1,831명이, '주거환경' 사유로 -412명이 순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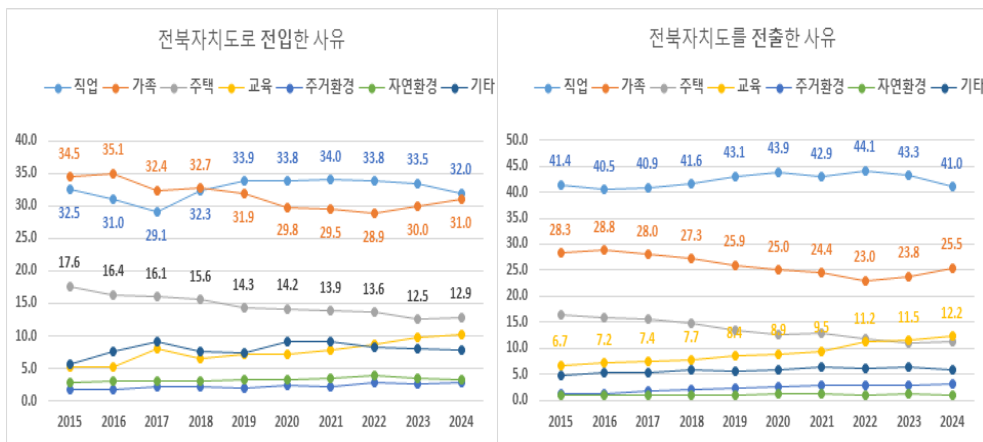
- ‘가족’을 이유로 16,916명이 전북도로 전입한 반면, 15,417명이 전출하여 1,499명이 순유입되었음.
다음으로는 ‘자연환경’ 사유로 1,163명이, ‘주택’ 사유로 238명이 순유입됨

[표1-2] 전북자치도 인구이동의 전출입 사유(2024)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시도간 전입(a)	17,427	16,916	7,006	5,583	1,533	1,750	4,271
시도간 전출(b)	24,822	15,417	6,768	7,414	1,945	587	3,593
순이동(a-b)	-7,395	1,499	238	-1,831	-412	1,163	678

출처: 통계청, 2025

- 최근 10년간 전북도로 전입한 사유의 구성비 추이를 보면, ‘직업’과 ‘가족’ 사유가 주된 사유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 사유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 사유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반면, 전북도를 전출한 사유의 구성비 추이를 보면, ‘직업’ 사유가 꾸준히 주된 사유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 목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림 1-1] 전북자치도 전출입 사유별 구성비 추이(2015~2024)

- 전북자치도 전·출입 현황과 사유분석을 통해 전북자치도 인구유입유형을 일자리(창업, 취업), 교육(자녀교육, 본인교육), 귀촌(귀농, 귀어, 귀산촌), 은퇴자 등 크게 4개, 세부적으로는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 검토
- 인구유입유형은 현황분석과 사유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

■ 전북자치도 인구유입유형별 정착사례 조사

- 타 시군에서 전북자치도 시군으로 이주한 사람 중에 유형별로 지역에 정착한 사례를 선정하여 서면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조사
 -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협조를 통해 정착사례 선정
- 전북자치도로 유입된 배경과 이전 지자체와의 전북의 경쟁력 등 정착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이전 주거지역에서 전북자치도로 이주한 배경
 - 전북자치도로 이주하는데 영향을 미친 정책 또는 사람
 - 전북자치도의 이주정착의 장단점
 - 지속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
 - 유형별 특성화 질문지 별도 구성 등

나. 연구방법

■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문헌조사
 - 전출입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조사 및 위탁계획

- 서면조사 및 심층인터뷰
 - 유형별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서면조사 및 유형별 1개 사례 이상은 심층인터뷰 병행
 - 유형별 구분 후에 지역, 성별, 나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대표적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

■ 전문가 자문 방법

- 인구이동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인구정책 담당자 업무협의

3.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기대효과

- 유형별 지역정착 사례를 분석하면 어떤 요인이 정착률을 높이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령대별, 직업군별, 생활패턴별 맞춤형 정책 개발가능
- 정착사례를 홍보하여 전북의 생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수 있으며, 정착을 고려하는 외부 인구층(청년, 신혼부부, 창업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에게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 가능
- 정착사례를 기반으로, 전출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인구 유출 방지 대책 마련 및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설계

■ 연구성과 활용계획

- 전북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전입 희망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및 상담 서비스 구축에 기여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
- 유형별 정착사례 분석 → 정책수립 → 지원 플랫폼 구축 → 홍보 및 마케팅 → 지속적인 피드백 반영 등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

4.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 도시민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방안 연구(문준경 외, 2024)

- 도시권 인구의 지방 정착을 목적으로 정책 현안과 사업의 실행여건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전략과 실행력 향상 방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이를 위해 첫째, 지역활력타운 정책의 독특성을 확립하고 초기 문제를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하고, 둘째, 대도시권 인구(은퇴자와 청년 등)의 지역정착을 위해 주거 선호도와 지역 매력 향상 방안 도출, 셋째, 수요에 맞는 특화 공모로 사업 유형 재편 및 확장 전략 제시, 넷째, 주거단지의 적기 조성 및 장기정착 지원, 그리고 운영관리 방안을 통한 정책 실행력 향상 방안을 연구내용으로 설정하였음
- 연구결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실행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위해 이주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선 방향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사업시행자 사업성 보완을 위해서 재정 보조 및 기금·펀드 등 금융 지원방안, 기반시설 조성 비용의 공적 지원, 토지 확보 지원, 미분양 주택의 매입 확약, 세제감면 외 추가 특례 발굴 지원 등을 제안함
- 둘째, 지방으로 이주하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취득 관련 규제 완화, 이주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및 입주 우선권 부여 등 초기 정착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기적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일자리 알선 등을 제안하였음

■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역선택요인과 정착 지원방안(민연경, 2023)

-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정책의 범위를 출생과 청년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지역특성 기반 귀농귀촌인 인구유입 전략 마련으로 확대 필요성에 착안하여 강원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구유입 확대전략으로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귀농귀촌인은 왜 타시도가 아닌 강원도를 선택하였는지, 강원도로 이주한 이후에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 연구결과 ‘강원도 귀농귀촌 유치 ‘전국 TOP5+연 4만명’ 유치 달성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정책목표와 3대 추진전략,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귀농귀촌 정책 강화,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등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 귀농귀촌 시군센터 운영 지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연계사업 추진, 광역 통합플랫폼 관리·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예비 귀농인 대상 농지임대 및 임차료 지원, 귀농귀촌인 안심일자리 추진, 청년 귀농귀촌인 소모임 지원 등 총 11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 경기도 귀농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분석 및 지원방안(이원석 외, 2020)

- 본 연구는 경기도 농가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 등 외부 인구의 농촌 유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이에 귀농인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프로그램 제시를 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경기도 시군별로 농가인구 및 귀농인구 변화를 살펴보고, 귀농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귀농인 영농정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영농 준비 과정, 농업소득, 농촌생활 및 삶의 질,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음
- 연구결과,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시설 접근성, 복지시설 이용 및 농촌복지정책, 자녀교육여건, 대중교통 여건, 농작업 안전, 경제적 생활수준, 근로시간 및 작업환경, 육체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도출됨
- 성공적 영농 정착을 위해 실습중심교육, 공정기회, 규제완화, 협동과 공유, 농산물판매, 멘토링, 컨설팅, 기본소득, 인큐베이터, 농촌일자리, 농산물가공제조, 생활여건개선, 영농기술상담 등이 제시되었음

■ 귀농·귀촌 성공사례 조사분석 종합보고서(박대식 외, 2018)

- 본 연구는 지역개발, 6차 산업화, 사회적 경제, 교육·사회복지·문화 부문에 있어서 국내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귀농·귀촌정책에 함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귀농·귀촌의 성공요인을 관심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정착단계로 구분하였음. 특히, 실행단계의 주요 성공요인은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노력,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 노력, 도시생활에서의 경험이나 재능의 활용 등으로 나타남. 그리고 정착단계의 주요 성공요인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귀농·귀촌 정책의 적극적 활용 등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박진경·김도형, 2020)

- 본 연구는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특히,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30세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유출이 심화되어 지역의 존폐위기 상황에 대응 필요성을 제기함
- 이에 청년세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지방 인구이동의 큰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청년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청년유입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자 하였음
 - 특히, 그동안에는 청년유출의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왔으나, 유출의 원인분석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장소(지역)의 속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유입촉진을 고려한 문화작·사회적 환경적 속성분석으로 관점을 확장할 것에 주목하고자 하였음
 - 지자체가 청년인구를 새롭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떠나는 원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가는 인구의 타겟 연령, 직업군, 선호하는 특성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층이 잠재적으로 중소도시나 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청년인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비중을 두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을 전제로 정책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지역특성과 타겟 도시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정착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을 제안함
- 또한, 청년일자리·주거·교통 복합사업 추진, 지역뉴딜일자리 창출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지역 내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제공,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기존 지역주민과의 통합(갈등관리)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음

■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김정섭 외, 2018)

-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지자체들은 청년층 인구 유입이라는 정책 과제를 추진중이며, 이러한 정책 사업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책 사업 실행 현장에서의 경험과 성찰을 현실감 있게 포착하고 살펴보고자 하였음. 따라서 정책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는지, 관련된 청년이나 지역사회 주민 등은 어떤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 탐색: 이주 동기, 정보획득 경로, 탐색 활동 내용 등
 - 결심 및 이주: 지역 결정 요인, 준비 과정/주거, 생계, 일자리, 지역사회 관계 등
 - 정착: 초기 생계비 해결 방법, 지역 이해 과정, 자기 이해 과정, 지역사회 내 관계망 편입 과정 등
- 연구결과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지원 정책의 추진 방안으로 첫째, 청년 이주를 위한 정책은 ‘간단한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하고, 둘째,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셋째, 지역주민이나 단체들의 집합적 활동을 매개로 이주 청년들과의 사회연결망 구축을 제시함

[표1-3] 인구유입 및 지역정착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도시민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방안 연구	•지역활력타운 조성 목적인 수도권 인구의 지방 중소 도시로 이주 정착	•지역활력타운 정책의 정체성 확립 및 사업 추진 방향성 •지방 이주 수요계층의 주거 선호 특성	•재정보조 및 금융지원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행정 지원 •세제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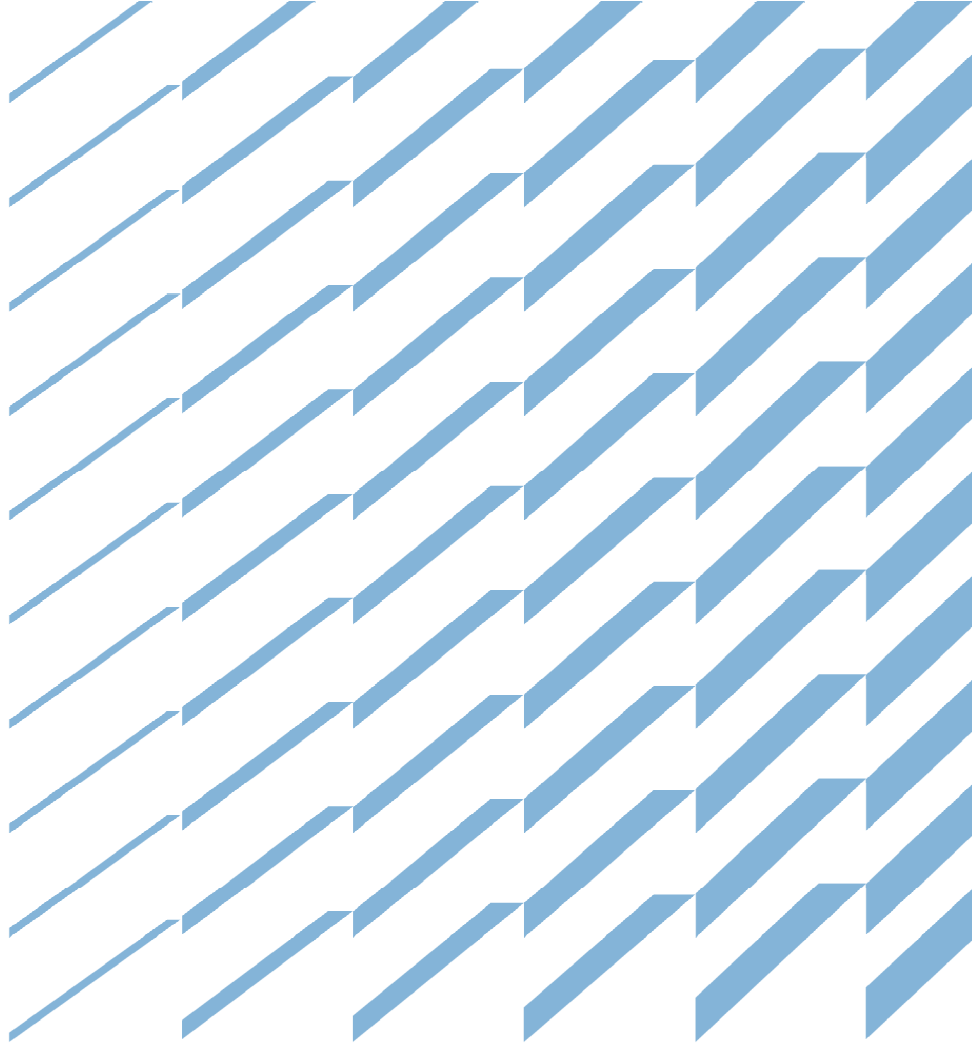
문준경 외 (2024)	유도를 위하여 수요자 측면의 이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FGI 및 설문조사 •농촌지역의 입지·수요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사업 개발 -수요계층 특성을 고려한 사업유형 재편 및 특화방안 제시(은퇴자 휴양형, 교육연계형, 일자리연계형 등)	•이주자의 주택 취득 규제 완화 •외지인 특별공급 및 장기 정착 인센티브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체험주택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역선택요인과 정착 지원방안 민연경 (2023)	•강원도 귀농귀촌인의 지역선택요인과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유치 활성화 및 정착률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함	•강원도 귀농귀촌인 현황 및 생활실태조사 •강원도 귀농귀촌인 및 현장 전문가 정책평가 및 수요조사 •강원도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 추진과제 개발	•귀농귀촌 전담기관 유치지원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귀농귀촌 시군센터 운영 지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연계사업 추진 •강원 농촌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실시 및 관계인구 발굴 •광역 통합플랫폼 관리운영 •‘강원에서 살아보기’ 운영 •예비 귀농인 대상 농지임대 및 임차료 지원 •귀농귀촌인 4시간 안심일자리 추진
경기도 귀농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분석 및 지원방안 이원석 외 (2020)	•경기도 귀농인 조사를 통해 귀농실태 분석과 영농정착의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찾고자함	•농업소득(경제적 요인)과 농촌생활의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 탐색 •귀농인이 원하는 요구도 및 타 지역 우수사례 비교를 통해 농촌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발굴	•실습중심교육, 공정기회, 규제완화, 협동과 공유, 농산물판매, 멘토링, 컨설팅, 기본소득, 인큐베이터, 농촌일자리, 농산물가공제조, 생활여건개선, 영농기술상담 등이 필요함
귀농·귀촌 성공사례 조사분석 종합보고서 박대식 외 (2018)	•지역개발, 6차 산업화, 사회적 경제, 교육·사회복지·문화 부문에 있어서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귀농·귀촌정책에 함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함	•지역개발 부문 성공사례 13개 •6차 산업화 부문 성공사례 13개 •사회적경제 부문 성공사례 18개 •귀농·귀촌인의 교육·사회복지·문화 부문 성공사례 15개 등 성공사례 분석	•관심단계 성공요인 -철저하고 계획적인 귀농·귀촌 준비, -가족과의 협조체제 구축, 역할 분담 -창의력과 도전 정신 •실행단계 성공요인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노력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 노력 -도시생활에서의 경험/재능의 활용 •정착단계 성공요인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협력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귀농·귀촌 관련 정책의 적극적 활용

인구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박진경·김도형 (2020)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청년 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청년유입정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층이 잠재적으로 중소도시나 소도시·농어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동과정에서 청년인구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에 비중을 크게 두는지 공간의 선호도를 파악 •중앙 및 지자체의 제도개선 방안 도출	•핵심추진전략 -청년일자리·주거·교통 복합사업 우선 추진, 지역뉴딜일자리 창출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지역 내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제공, 청년혁신복합 공간 조성, 기존 주민과의 갈등관리 •지자체 제도개선 방안 -(가칭)청년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 제정, 협력·연대·공조를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타겟이 되는 청년유입 및 정착과 관련된 시책 지속 발굴·추진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김정섭 외 (2018)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유입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경험과 성찰을 살펴보는 경험적 분석이 부족함. 이에 청년이나 선주민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함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경험 분석을 통해 지방 이주 및 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발굴 -탐색(이주 동기, 정보획득 경로, 탐색 활동이 내용) -결심 및 이주(지역 결정 요인, 준비 과정/주거, 생계, 일자리, 지역사회 관계 등) -정착(초기 생계비 해결 방법, 지역 이해 과정, 자기 이해 및 확산 과정, 지역사회 내 관계망 편입 과정 등)	•정책 추진단계 -프로그램 구성(지자체, 서울시, 주민) -지역사회 주민/단체 참여분위기 조성 -비전 공유, 전략적 방향 설정 -개별 세부사업 기획 -공동학습 -실행조직 구성 및 조직 관리 -개별 세부사업 실행 -기술적 문제 해결 -전문적 교육·훈련과 자문 -재정 관리 -평가(서울시, 지자체, 지역사회)

나. 연구의 차별성

- 그동안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구들은 주로 인구유출에 초점을 두고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어왔음(박진경·김도형, 2020). 그러나 유출의 원인 파악만으로는 지역 간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찾아 떠나는지, 그들이 선택하는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차원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입을 이끄는 요인과 특성, 그리고 장기적 정착을 이끌 수 있는 정책욕구와 특성을 찾아내어 이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이동 현황에 집중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양적 연구데이터를 중심으로 인구유입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인구의 이동을 이끄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응답을 통해서는 객관화된 공통응답이 제시될 수 있으나, 심도 있는 원인들을 규명하기에는 필연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자치도로 유입된 인구의 지역정착 사례분석을 통해 무엇이 그들을 전북으로 유입하게 했는지, 어떠한 경로로 유입이 되는지, 이동과정 상 경험했던 어려움은 무엇인지, 향후 지속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사례조사를 통해 이들이 가진 사회문화적 속성들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이주 전 배경-이주 탐색과 준비기-이주기-정착기와 정주 순으로 조사 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함. 연구에 투여할 수 있는 역량을 이에 집중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 특히, 인구유입 유형별(일자리/교육/귀농/은퇴)로 구분하여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더해 이들의 생애주기적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전북자치도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가 본 연구가 갖는 의의이자, 기존 선행연구와 대비하여 갖는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음



제2장

전북자치도 인구이동 현황



1.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2. 전북자치도 인구이동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제 2 장 전북자치도 인구이동 현황

1.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 전국 시도별 이동자 수

-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등 4개 지역은 순유입이 일어났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순유출을 기록하였음
- 전북자치도의 경우 54,486명이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하였고, 60,546명이 전북에서 타 시도로 전출되어 순이동은 -6,060명으로 나타남

[표 2-1] 전국 시도별 이동자 수(2024)

	총전입(A)	총전출(B)	순이동 (A-B) or (a-b)	시도간 전입(a)	시도간 전출(b)
전국	6,283,319	6,283,319	0	2,174,527	2,174,527
서울	1,221,380	1,266,072	-44,692	428,448	473,140
부산	378,597	392,254	-13,657	104,765	118,422
대구	303,544	308,256	-4,712	86,505	91,217
인천	397,818	372,175	25,643	155,630	129,987
광주	172,439	180,401	-7,962	54,779	62,741
대전	195,980	197,673	-1,693	75,945	77,638
울산	113,332	118,186	-4,854	39,510	44,364
세종	61,022	58,214	2,808	35,946	33,138
경기	1,726,287	1,662,069	64,218	557,609	493,391
강원	184,339	186,866	-2,527	68,817	71,344
충북	189,758	186,513	3,245	74,956	71,711
충남	266,831	252,167	14,664	118,285	103,621
전북	198,792	204,852	-6,060	54,486	60,546
전남	183,834	187,822	-3,988	70,234	74,222
경북	278,273	286,276	-8,003	109,655	117,658
경남	329,398	338,467	-9,069	109,912	118,981
제주	81,695	85,056	-3,361	29,045	32,406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도별 주요 전입지 및 전출지

-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7개 시도의 전입 및 전출 1순위 지역은 모두 경기도로 나타남
- 전북 전입자 54천명의 23.9%는 경기에서 이동, 전출자 61천명의 23.8%는 경기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지역은 경기(23.9%), 서울(18.1%), 광주(9.5%) 순이며, 전북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지역은 경기(23.8%), 서울(19.2%), 충남(10.0%) 순이었음

[표 2-2] 시도별 주요 전입지 및 전출지(2024)

(단위: 천 명, %)

	타시도에서 전입(IN)				타시도로 전출(OUT)			
	전입자수	1위	2위	3위	전출자수	1위	2위	3위
서울	428	경기 (53.0)	인천 (7.7)	부산 (4.2)	473	경기 (61.3)	인천 (9.5)	충남 (3.8)
부산	105	경남 (39.3)	서울 (11.6)	경기 (10.9)	118	경남 (37.7)	서울 (15.2)	경기 (12.7)
대구	87	경북 (46.4)	경기 (10.5)	서울 (10.0)	91	경북 (40.1)	서울 (14.4)	경기 (13.1)
인천	156	경기 (44.6)	서울 (28.8)	충남 (4.2)	130	경기 (45.5)	서울 (25.4)	충남 (5.9)
광주	55	전남 (47.7)	경기 (12.2)	서울 (11.6)	63	전남 (41.8)	서울 (15.2)	경기 (14.0)
대전	76	충남 (17.4)	경기 (17.2)	서울 (13.6)	78	경기 (18.6)	충남 (17.5)	서울 (16.7)
울산	40	부산 (22.2)	경북 (16.8)	경남 (16.6)	44	부산 (20.9)	경북 (16.1)	경남 (15.2)
세종	36	대전 (25.4)	경기 (15.1)	충남 (13.6)	33	대전 (21.5)	경기 (15.7)	충남 (15.3)
경기	558	서울 (52.0)	인천 (10.6)	충남 (5.8)	493	서울 (46.0)	인천 (14.1)	충남 (7.7)
강원	69	경기 (38.4)	서울 (23.9)	인천 (6.4)	71	경기 (37.2)	서울 (24.0)	인천 (6.4)
충북	75	경기 (28.5)	서울 (15.0)	대전 (10.2)	72	경기 (27.7)	서울 (16.3)	대전 (10.8)
충남	118	경기 (32.1)	서울 (15.0)	대전 (11.5)	104	경기 (31.5)	서울 (16.6)	대전 (12.7)
전북	54	경기 (23.9)	서울 (18.1)	광주 (9.5)	61	경기 (23.8)	서울 (19.2)	충남 (10.0)
전남	70	광주 (37.4)	경기 (16.1)	서울 (12.1)	74	광주 (35.2)	경기 (16.3)	서울 (13.4)
경북	110	대구 (33.3)	경기 (14.3)	서울 (10.0)	118	대구 (34.1)	경기 (15.0)	서울 (11.5)
경남	110	부산 (40.6)	경기 (11.9)	서울 (9.5)	119	부산 (34.6)	경기 (13.4)	서울 (12.6)
제주	29	경기 (27.3)	서울 (24.4)	부산 (6.8)	32	경기 (25.7)	서울 (24.8)	부산 (7.1)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도별 전입·전출 추이

- 세종, 경기, 충북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으로 전입인구가 타 시도로의 전출보다 많아 순유입을 기록하였음
- 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특광역시와 더불어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해당지역으로의 전입인구보다 타 시도로의 전출인구가 많아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음

[표 2-3] 시도별 이동자 수 추이(2014~2024)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순이동		
	2014	2019	2024	2014	2019	2024	2014	2019	2024
서울	475,571	475,866	428,448	563,402	525,454	473,140	-87,831	-49,588	-44,692
부산	132,428	109,594	104,765	147,520	132,948	118,422	-15,092	-23,354	-13,657
대구	97,571	81,250	86,505	113,097	104,923	91,217	-15,526	-23,673	-4,712
인천	156,922	143,933	155,630	147,598	146,270	129,987	9,324	-2,337	25,643
광주	78,745	67,778	54,779	81,722	71,653	62,741	-2,977	-3,875	-7,962
대전	82,598	78,429	75,945	91,436	94,771	77,638	-8,838	-16,342	-1,693
울산	53,882	40,073	39,510	51,096	50,245	44,364	2,786	-10,172	-4,854
세종	46,071	54,017	35,946	12,615	30,293	33,138	33,456	23,724	2,808
경기	616,703	639,254	557,609	559,307	504,588	493,391	57,396	134,666	64,218
강원	83,119	77,945	68,817	81,034	76,284	71,344	2,085	1,661	-2,527
충북	79,330	78,012	74,956	76,963	75,447	71,711	2,367	2,565	3,245
충남	124,526	114,837	118,285	114,716	115,631	103,621	9,810	-794	14,664
전북	70,612	58,418	54,486	73,175	71,166	60,546	-2,563	-12,748	-6,060
전남	98,787	88,069	70,234	99,383	96,857	74,222	-596	-8,788	-3,988
경북	135,782	120,812	109,655	136,770	125,383	117,658	-988	-4,571	-8,003
경남	142,314	121,503	109,912	136,239	130,813	118,981	6,075	-9,310	-9,069
제주	32,835	35,158	29,045	21,723	32,222	32,406	11,112	2,936	-3,361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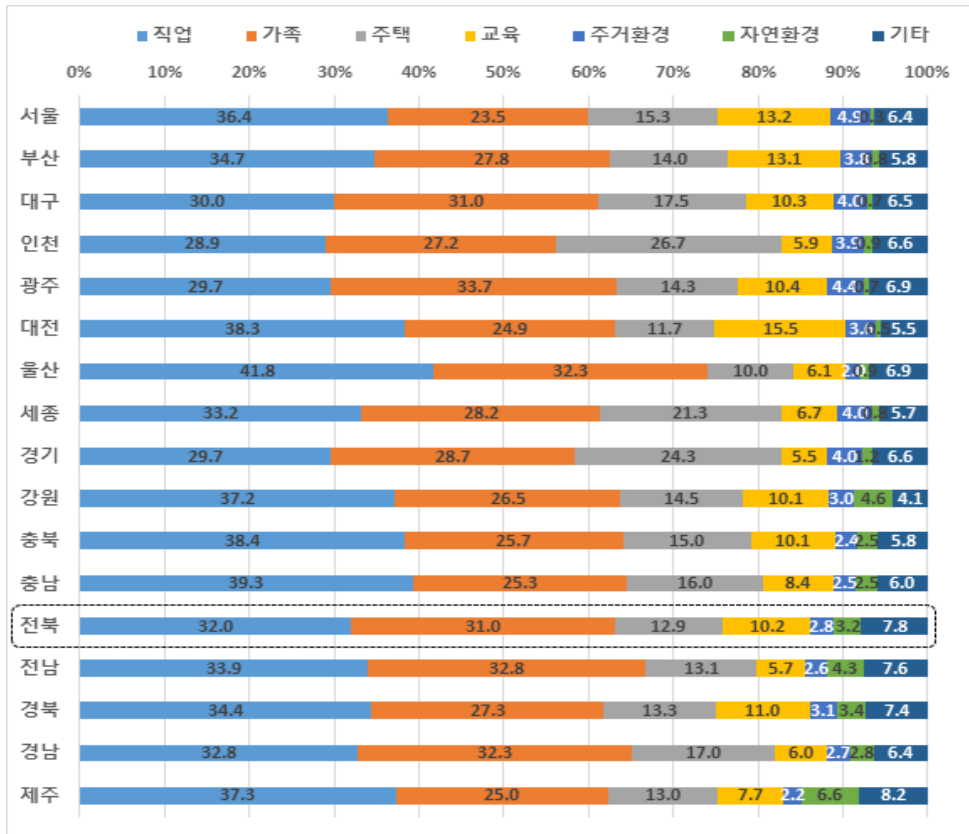
■ 시도별 전입·전출 사유

- 전국 시도간 전·출입자는 2,174,527명이 이동을 하였고, 이 중 직업으로 인한 사유가 33.5%로 가장 많았고, 가족 27.6%, 주택 18.1%로 직업/가족/주택 사유로 인한 인구 이동이 전체 전·출입 사유의 약 80%를 차지하였음
- 시도별 전입인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으로 인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울산(41.8%), 충남(39.3%), 충북(38.4%), 대전(38.3%) 순으로 높았고, ‘가족’ 사유는 광주(33.7%), 전남(32.8%), 울산/경남(32.3%), 대구/전북(3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2-4] 전국 시도별 전입 사유(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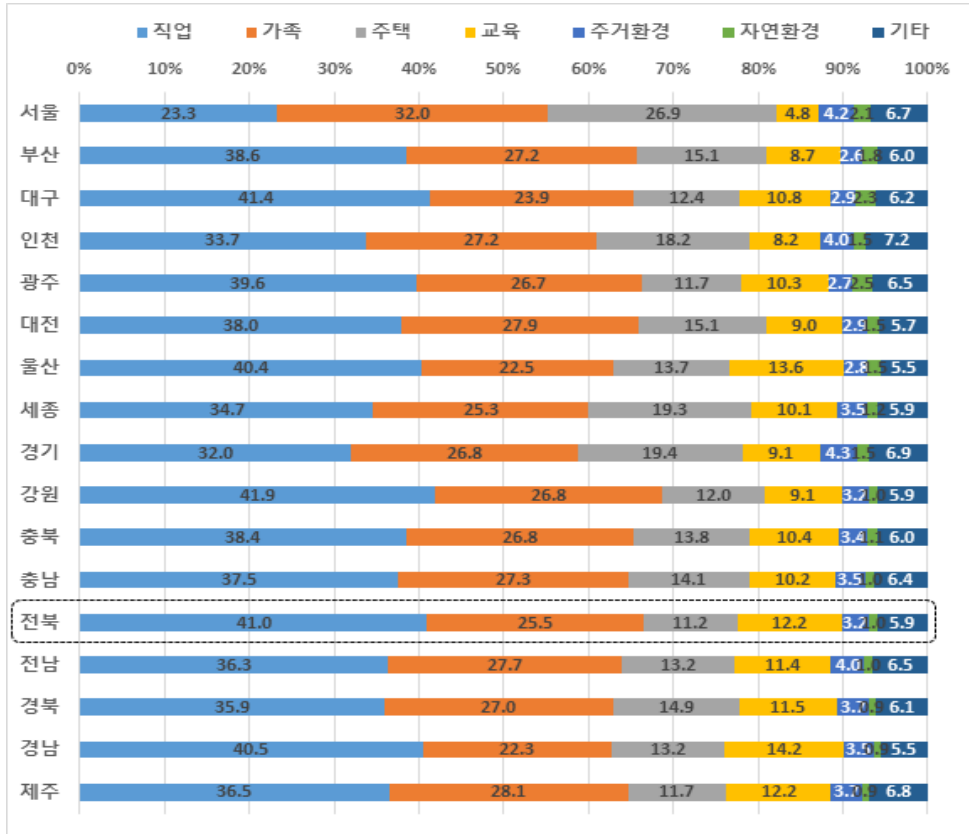
	시도간 전입자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국	2,174,527	729,248	599,701	394,364	196,198	81,750	33,297	139,969
서울	428,448	155,989	100,773	65,732	56,517	20,959	1,095	27,383
부산	104,765	36,393	29,095	14,679	13,723	4,019	804	6,052
대구	86,505	25,956	26,855	15,147	8,878	3,433	570	5,666
인천	155,630	45,035	42,302	41,572	9,110	6,042	1,349	10,220
광주	54,779	16,257	18,470	7,829	5,670	2,396	377	3,780
대전	75,945	29,066	18,899	8,903	11,748	2,757	414	4,158
울산	39,510	16,504	12,756	3,968	2,421	776	365	2,720
세종	35,946	11,926	10,134	7,660	2,418	1,442	305	2,061
경기	557,609	165,463	160,269	135,480	30,726	22,565	6,509	36,597
강원	68,817	25,599	18,270	9,985	6,931	2,044	3,163	2,825
충북	74,956	28,759	19,279	11,266	7,536	1,825	1,909	4,382
충남	118,285	46,453	29,924	18,899	9,981	3,011	2,963	7,054
전북	54,486	17,427	16,916	7,006	5,583	1,533	1,750	4,271
전남	70,234	23,817	23,027	9,222	4,007	1,846	3,007	5,308
경북	109,655	37,740	29,962	14,598	12,082	3,453	3,740	8,080
경남	109,912	36,021	35,515	18,654	6,617	3,004	3,067	7,034
제주	29,045	10,843	7,255	3,764	2,250	645	1,910	2,378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1] 시도별 전입사유별 구성비(2024)

- 반대로 시도별 전출인구의 사유를 비교해 보면, ‘직업’으로 인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41.9%), 대구(41.4%), 전북(41.0%), 경남(40.5%), 울산(40.4%) 순으로 높았고, ‘가족’ 사유는 서울(32.0%), 제주(28.1%), 대전(27.9%), 전남(27.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그림 2-2] 시도별 전출사유별 구성비(2024)

[표 2-5] 전국 시도별 전출 사유(2024)

	시도간 전출자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국	2,174,527	729,248	599,701	394,364	196,198	81,750	33,297	139,969
서울	473,140	110,279	151,288	127,490	22,752	19,953	9,705	31,673
부산	118,422	45,652	32,258	17,920	10,340	3,056	2,140	7,056
대구	91,217	37,768	21,814	11,336	9,894	2,685	2,059	5,661
인천	129,987	43,776	35,360	23,664	10,690	5,215	1,897	9,385
광주	62,741	24,863	16,736	7,341	6,480	1,693	1,547	4,081
대전	77,638	29,515	21,626	11,690	7,020	2,256	1,135	4,396
울산	44,364	17,909	9,984	6,065	6,026	1,255	667	2,458

세종	33,138	11,484	8,382	6,390	3,361	1,166	402	1,953
경기	493,391	157,769	132,207	95,755	44,880	21,462	7,505	33,813
강원	71,344	29,886	19,127	8,569	6,521	2,315	700	4,226
충북	71,711	27,562	19,243	9,910	7,450	2,468	762	4,316
충남	103,621	38,822	28,311	14,660	10,566	3,624	1,009	6,629
전북	60,546	24,822	15,417	6,768	7,414	1,945	587	3,593
전남	74,222	26,929	20,524	9,785	8,476	2,966	706	4,836
경북	117,658	42,224	31,807	17,538	13,506	4,360	1,080	7,143
경남	118,981	48,160	26,501	15,703	16,873	4,123	1,090	6,531
제주	32,406	11,828	9,116	3,780	3,949	1,208	306	2,219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도별 연령별 이동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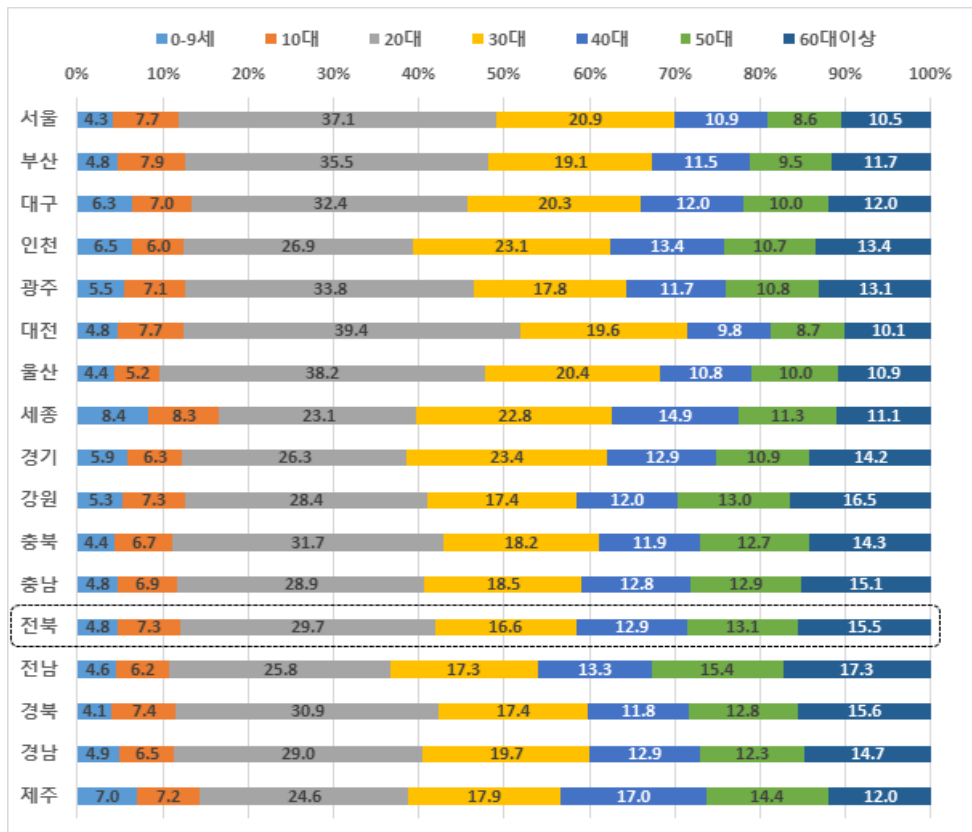
- 전국 시도간 전·출입자는 2,174,527명이 이동을 하였고, 이 중 20대(30.8%)의 인구가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남. 다음으로 30대 20.7%, 60대 이상 13.3%, 40대 12.2% 순임. 2030대의 이동이 전체 이동의 51.5%를 차지하였음
- 시도별 전입인구의 연령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전입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39.4%), 울산(38.2%), 서울(37.1%), 부산(35.5%), 광주(33.8%) 등의 순으로 높았고, 30대 비중은 경기(23.4%), 인천(23.1%), 세종(2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한편, 60대 이상 비중은 전남에서 17.3%로 가장 높았고, 강원(16.5%), 경북(15.6%), 전북(15.5%), 충남(1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 전국 시도별 연령대별 전입자(2024)

	시도간 전입자	0~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국	2,174,527	113,818	150,456	669,145	449,432	266,317	237,024	288,335
서울	428,448	18,248	32,910	158,873	89,716	46,796	36,764	45,141
부산	104,765	5,059	8,256	37,180	19,992	12,100	9,956	12,222
대구	86,505	5,480	6,048	28,046	17,577	10,350	8,616	10,388
인천	155,630	10,118	9,359	41,794	35,938	20,819	16,695	20,907
광주	54,779	2,999	3,916	18,539	9,775	6,429	5,933	7,188
대전	75,945	3,650	5,815	29,899	14,874	7,473	6,577	7,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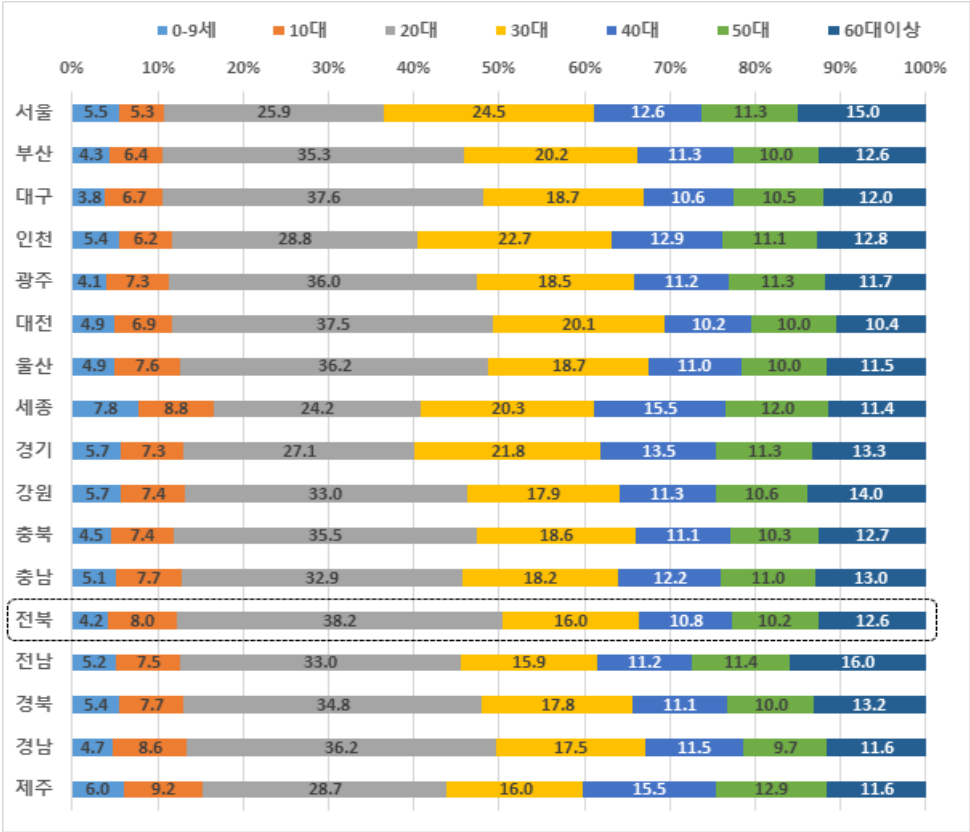
울산	39,510	1,735	2,066	15,085	8,068	4,265	3,967	4,324
세종	35,946	3,010	2,974	8,318	8,205	5,372	4,064	4,003
경기	557,609	33,140	35,245	146,588	130,705	71,854	61,015	79,062
강원	68,817	3,659	5,015	19,577	11,942	8,271	8,970	11,383
충북	74,956	3,329	5,021	23,764	13,641	8,929	9,552	10,720
충남	118,285	5,697	8,175	34,140	21,860	15,192	15,310	17,911
전북	54,486	2,615	3,996	16,201	9,055	7,032	7,122	8,465
전남	70,234	3,242	4,342	18,134	12,174	9,374	10,786	12,182
경북	109,655	4,443	8,103	33,937	19,125	12,916	14,026	17,105
경남	109,912	5,362	7,114	31,927	21,600	14,218	13,496	16,195
제주	29,045	2,032	2,101	7,143	5,185	4,927	4,175	3,482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3] 시도별 전입 연령대별 구성비(2024)

- 시도별 전출인구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20대 전출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전북(38.2%), 대구(37.6%), 대전(37.5%), 울산/경남(36.2%), 광주(36.0%) 등의 순으로 높았고, 30대 비중은 서울(24.5%), 인천(22.7%), 경기(21.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한편, 60대 이상 비중은 전남에서 16.0%로 가장 높았고, 서울(15.0%), 강원(14.0%), 경기(13.3%), 경북(1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4] 시도별 전출 연령대별 구성비(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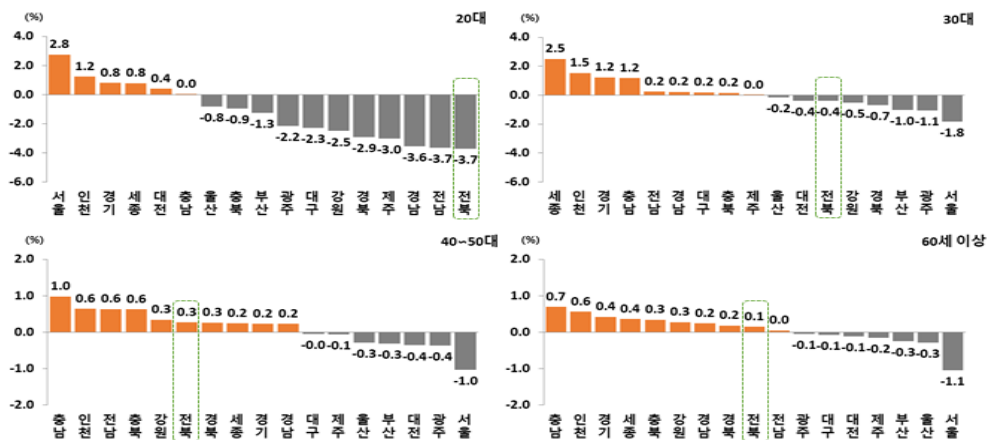
[표 2-7] 전국 시도별 연령대별 전출자(2024)

	시도간 전출자	0~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국	2,174,527	113,818	150,456	669,145	449,432	266,317	237,024	288,335
서울	473,140	25,865	24,935	122,312	115,940	59,660	53,471	70,957

부산	118,422	5,057	7,547	41,777	23,945	13,354	11,848	14,894
대구	91,217	3,479	6,144	34,323	17,040	9,698	9,607	10,926
인천	129,987	7,059	8,118	37,421	29,540	16,814	14,406	16,629
광주	62,741	2,558	4,562	22,576	11,598	7,017	7,067	7,363
대전	77,638	3,792	5,349	29,111	15,598	7,945	7,760	8,083
울산	44,364	2,188	3,380	16,059	8,289	4,878	4,446	5,124
세종	33,138	2,572	2,924	8,026	6,732	5,139	3,976	3,769
경기	493,391	28,349	36,228	133,467	107,367	66,565	55,926	65,489
강원	71,344	4,092	5,292	23,570	12,763	8,073	7,596	9,958
충북	71,711	3,198	5,310	25,440	13,339	7,935	7,414	9,075
충남	103,621	5,267	7,970	34,069	18,882	12,612	11,348	13,473
전북	60,546	2,543	4,869	23,109	9,717	6,510	6,197	7,601
전남	74,222	3,823	5,551	24,479	11,773	8,282	8,427	11,887
경북	117,658	6,384	9,012	40,987	20,896	13,099	11,761	15,519
경남	118,981	5,643	10,290	43,110	20,836	13,697	11,582	13,823
제주	32,406	1,949	2,975	9,309	5,177	5,039	4,192	3,765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전북의 연령별 순이동률¹⁾을 보면, 2030대는 순유출되었으며, 405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순유입됨. 특히, 20대 연령층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5]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률(2024)

1) 1) 순인구이동률=(전입인구-전출인구)÷주민등록연앙인구×100.

2. 전북자치도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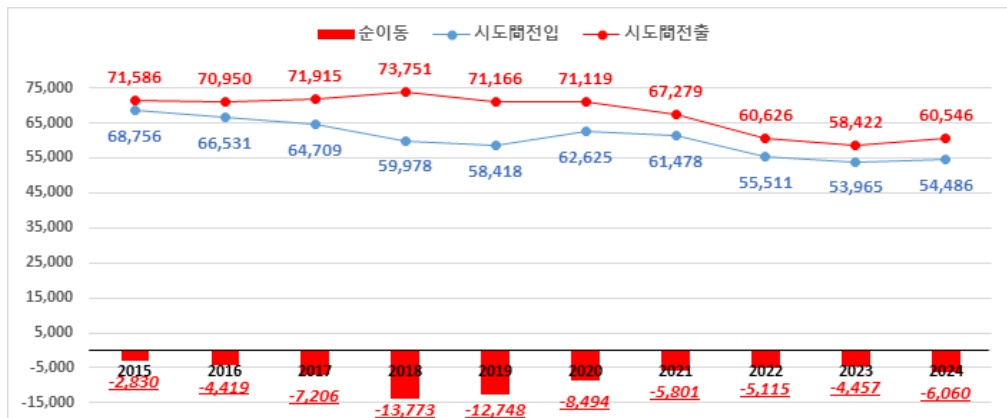
■ 전북 연도별 전입·전출 추이

-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의 시도간 총 이동자수는 115,032명이며, 이 중 54,486명(47.4%)이 전북으로 전입하였고, 60,546명(52.6%)이 전북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음(순이동 -6,060명)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인구는 '15년 68,756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19년 58,418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년과 '21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2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임
 - 전북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15년 71,586명에서 '18년에 정점(73,751명) 기록한 뒤, '23년 58,422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4년 60,546명으로 다시 증가함
- 최근 10년간의 순이동 추이를 보면, 전북도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은 순유출 상태가 매년 지속되고 있음. 2015년 -2,830명에서 2018년 -13,773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섬
 - 최근 10년('15~'24) 동안 누적 -70,903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연평균 -7,090명씩 순유출이 일어남

[표 2-8] 전북 연도별 전입·전출 추이(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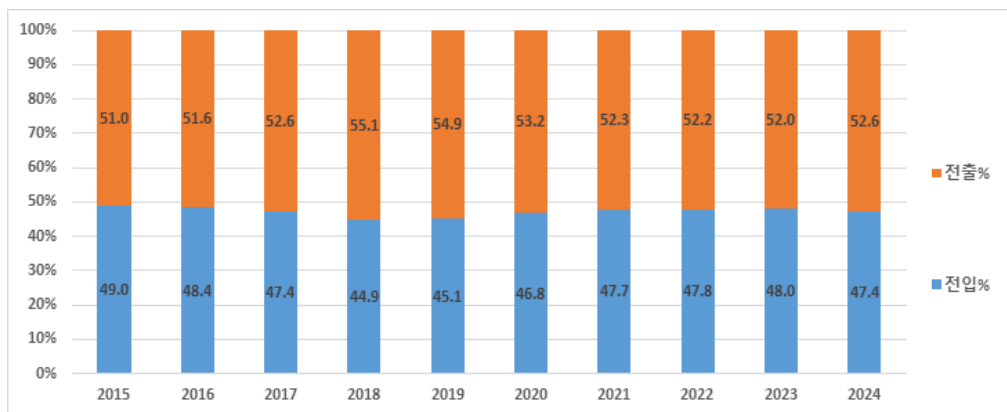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간전입	시도간전출	도내이동 (전입)	도내이동 (전출)
2015	261,832	264,662	-2,830	68,756	71,586	193,076	193,076
2016	248,188	252,607	-4,419	66,531	70,950	181,657	181,657
2017	232,047	239,253	-7,206	64,709	71,915	167,338	167,338
2018	243,324	257,097	-13,773	59,978	73,751	183,346	183,346
2019	228,775	241,523	-12,748	58,418	71,166	170,357	170,357
2020	249,083	257,577	-8,494	62,625	71,119	186,458	186,458
2021	223,710	229,511	-5,801	61,478	67,279	162,232	162,232
2022	199,432	204,547	-5,115	55,511	60,626	143,921	143,921
2023	188,788	193,245	-4,457	53,965	58,422	134,823	134,823
2024	198,792	204,852	-6,060	54,486	60,546	144,306	144,306
누적(계)	2,273,971	2,344,874	-70,903	606,457	677,360	1,667,514	1,667,514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6] 최근 10년간 전북 인구이동 추이(2015~2024)

- '14년 전북도 시도간 이동자(전입·전출)는 총 140,342명으로 이 중 51.0%(71,586명)이 전출인구이고, 49.0%(68,756명)가 전입인구임. 전입인구비는 '18년 가장 적었다가 증가추세를 보임



[그림 2-7] 최근 10년간 전북 인구이동(전입·전출) 구성비 추이(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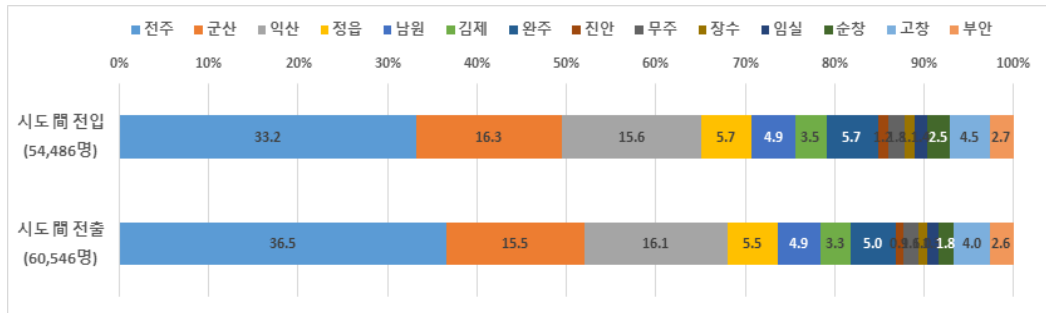
■ 전북 시군별 전입·전출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54,486명의 시군별 유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로 18,088명(33.2%)이 유입되었고, 군산시 8,891명(16.3%), 익산시 8,473명(15.6%), 완주군 3,125명(5.7%), 정읍시 3,079명(5.7%) 등의 순이었음
- 전북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60,546명의 시군별 유출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에서 22,104명(36.5%)이 전출하였고, 익산시 9,723명(16.1%), 군산시 9,371명(15.5%), 정읍시 3,352명(5.5%), 완주군 3,053명(5.0%), 남원시 2,959명(4.9%), 고창군 2,441명(4.0%) 등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완주, 김제, 무주, 순창 지역은 순유입, 그 외 10개 지역은 순유출을 기록하였음

[표 2-9] 전북 시군별 전입·전출 현황(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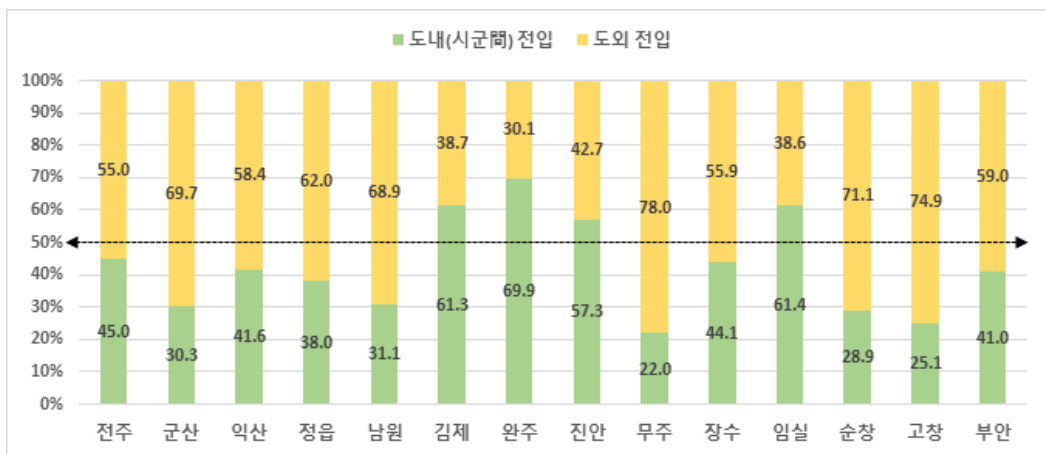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내- 시군구내	시도내- 시군구간 전입	시도내- 시군구간 전출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전북	198,792	204,852	-6,060	101,048	43,258	43,258	54,486	60,546
전주	74,815	80,560	-5,745	41,952	14,775	16,504	18,088	22,104
군산	32,637	33,205	-568	19,877	3,869	3,957	8,891	9,371
익산	35,636	36,194	-558	21,122	6,041	5,349	8,473	9,723
정읍	9,328	9,749	-421	4,358	1,891	2,039	3,079	3,352
남원	7,534	7,939	-405	3,676	1,199	1,304	2,659	2,959
김제	8,666	8,603	63	3,765	3,005	2,853	1,896	1,985
완주	12,545	10,719	1,826	2,166	7,254	5,500	3,125	3,053
진안	1,861	1,879	-18	323	881	985	657	571
무주	1,674	1,619	55	387	283	291	1,004	941
장수	1,312	1,391	-79	252	467	528	593	611
임실	2,285	2,327	-42	311	1,212	1,242	762	774
순창	2,483	2,126	357	562	556	502	1,365	1,062
고창	4,422	4,493	-71	1,163	817	889	2,442	2,441
부안	3,594	4,048	-454	1,134	1,008	1,315	1,452	1,599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8] 전북 시도간 전입전출 인구의 시군별 구성비(2024)

- 한편, 시군별 전입인구의 전출지역을 보면, 전주시의 경우 전북도 외에서 18,088명, 전북 관내 타 시군에서 14,775명이 전입하여 전북도 외에서 전입한 인구 비중이 55.0%로 더 높았음
- 시군별 전입인구 중 전북도 외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은 무주(78.0%), 고창(74.9%), 순창(71.1%), 군산(69.7%), 남원(68.9%), 정읍(62.0%), 부안(59.0%), 익산(58.4%), 장수(55.9%), 전주(55.0%) 등 10개 시군임
- 시군별 전입인구 중 전북 내 타 시군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은 완주(69.9%), 임실(61.4%), 김제(61.3%), 진안(57.3%) 등 4개 시군임



[그림 2-9] 전북 시군별 전입인구의 전출지역 비중(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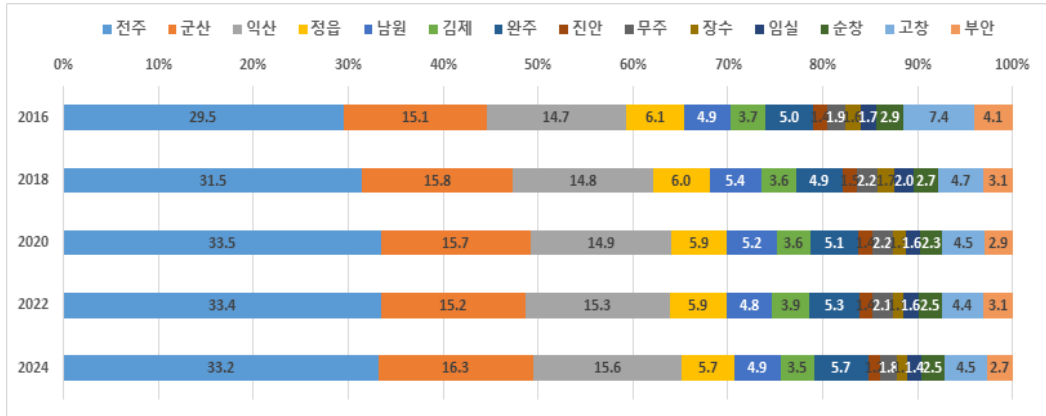
■ 전북 시군별 전입·전출 추이

- 전국적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인해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하는 인구는 '16년 66,531명에서 '24년 54,486명으로 감소(-18.1%, -12,045명)추세를 보임에 따라 모든 시군으로의 유입도 감소하고 있음. 특히, 고창(-50.4%, -2,485명), 부안(-46.3%, -1,253명), 장수(-44.2%, -470명) 지역은 큰 폭의 감소를 보였음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하는 인구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주요 도시 지역으로 계속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10] 전북 시군별 전입·전출 추이(2016~2024)

	시도간 전입자 수					시도간 전출자 수				
	2016	2018	2020	2022	2024	2016	2018	2020	2022	2024
전북	66,531	59,978	62,625	55,511	54,486	70,950	73,751	71,119	60,626	60,546
전주	19,609	18,869	20,953	18,566	18,088	22,105	22,376	23,209	21,655	22,104
군산	10,074	9,498	9,855	8,454	8,891	11,209	11,849	11,781	9,618	9,371
익산	9,775	8,895	9,300	8,472	8,473	11,293	12,352	11,818	9,896	9,723
정읍	4,066	3,599	3,681	3,281	3,079	4,309	4,415	4,357	3,507	3,352
남원	3,237	3,248	3,242	2,671	2,659	3,338	3,466	3,263	2,943	2,959
김제	2,447	2,183	2,235	2,167	1,896	2,564	2,669	2,485	1,846	1,985
완주	3,357	2,952	3,170	2,952	3,125	3,415	3,445	3,258	2,732	3,053
진안	923	908	908	776	657	853	841	876	671	571
무주	1,297	1,316	1,356	1,138	1,004	1,295	1,323	1,278	1,006	941
장수	1,063	1,025	839	635	593	869	918	824	627	611
임실	1,113	1,199	974	875	762	1,156	1,225	1,169	874	774
순창	1,938	1,603	1,449	1,384	1,365	1,920	1,795	1,622	1,201	1,062
고창	4,927	2,808	2,836	2,442	2,442	4,141	4,648	3,015	2,436	2,441
부안	2,705	1,875	1,827	1,698	1,452	2,483	2,429	2,164	1,614	1,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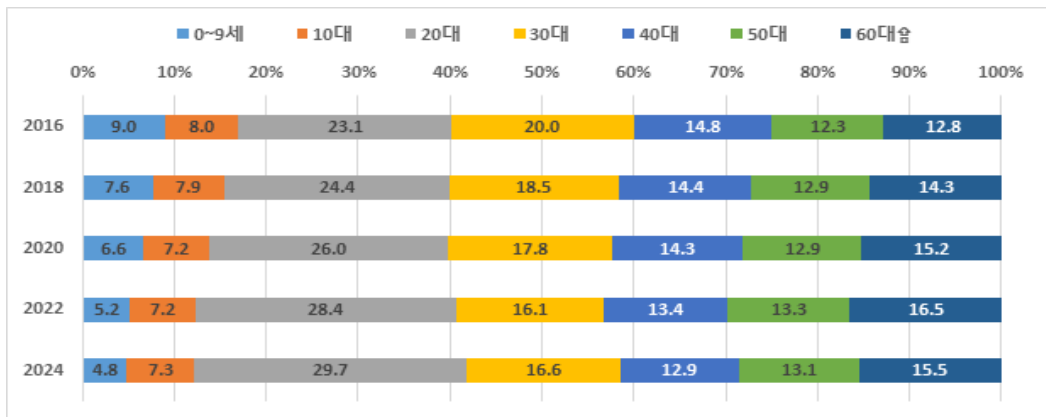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10] 전북 시도간 전입자수의 시군별 구성비 추이(2016~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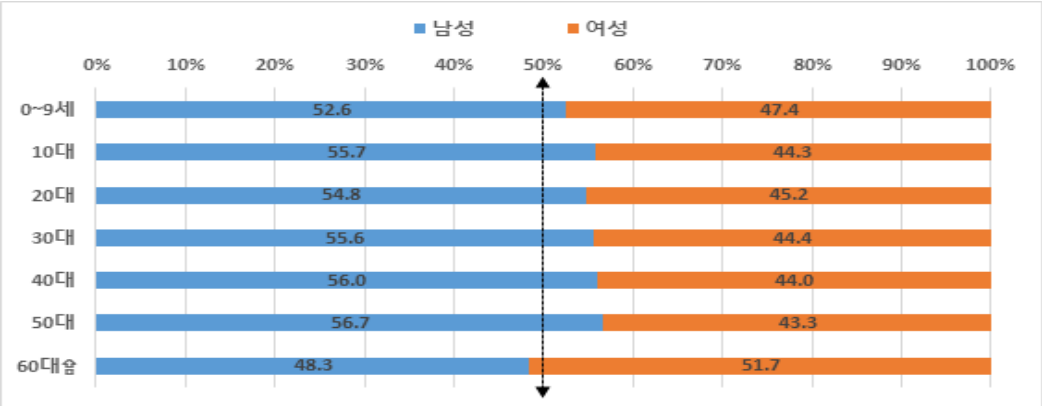
■ 전북 연령대별*성별 전입자 추이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인구의 연령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0~9세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20대 인구 비중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3040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60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11] 전북 시도간 전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2016~2024)

- 한편, 연령별 전입자수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연령 구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60대 이상의 경우 여성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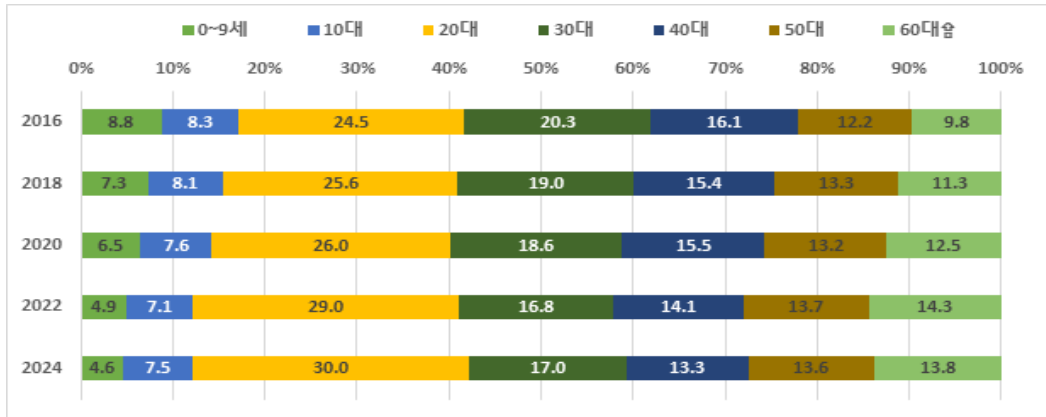
[그림 2-12] 전북 시도간 전입자의 연령대별*성별 구성비(2024)

[표 2-11] 전북 연령대별*성별 전입자 추이(2015~2024)

		시도간 전입자	0~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 체	2016	66,531	6,010	5,312	15,338	13,285	9,878	8,194	8,514
	2018	59,978	4,577	4,715	14,642	11,088	8,636	7,758	8,562
	2020	62,625	4,138	4,534	16,278	11,136	8,937	8,092	9,510
	2022	55,511	2,859	3,971	15,746	8,920	7,455	7,393	9,167
	2024	54,486	2,615	3,996	16,201	9,055	7,032	7,122	8,465
남 성	2016	35,091	3,077	2,910	8,614	7,127	5,637	4,294	3,432
	2018	31,802	2,323	2,567	8,135	6,056	4,891	4,240	3,590
	2020	33,145	2,153	2,528	8,625	6,169	5,141	4,385	4,144
	2022	30,099	1,485	2,149	8,716	5,063	4,244	4,126	4,316
	2024	29,589	1,375	2,227	8,885	5,038	3,939	4,035	4,090
여 성	2016	31,440	2,933	2,402	6,724	6,158	4,241	3,900	5,082
	2018	28,176	2,254	2,148	6,507	5,032	3,745	3,518	4,972
	2020	29,480	1,985	2,006	7,653	4,967	3,796	3,707	5,366
	2022	25,412	1,374	1,822	7,030	3,857	3,211	3,267	4,851
	2024	24,897	1,240	1,769	7,316	4,017	3,093	3,087	4,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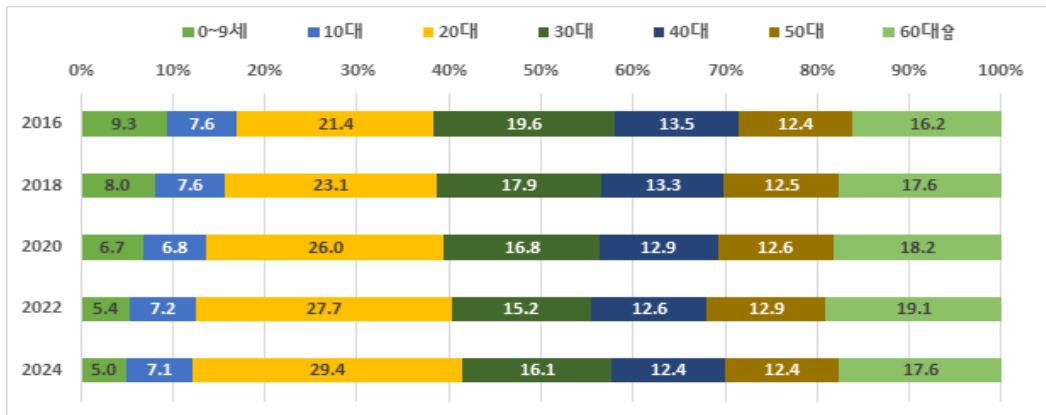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남성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20대, 50대, 60대 비중은 증가추세이며, 30대, 40대, 10대이하 비중은 감소추세임
- '16년에는 20대 > 30대 > 40대 > 50대 순이었으나, '24년에는 20대 > 30대 > 60대 > 50대 순으로 순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3] 전북 시도간 (남성)전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2016~2024)

- 여성의 경우 역시 20대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30대 비중은 감소추세임
- '16년에는 20대 > 30대 > 60대 > 40대 순이었으나, '24년에는 20대 > 60대 > 30대 > 40대 순으로 순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4] 전북 시도간 (여성)전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2016~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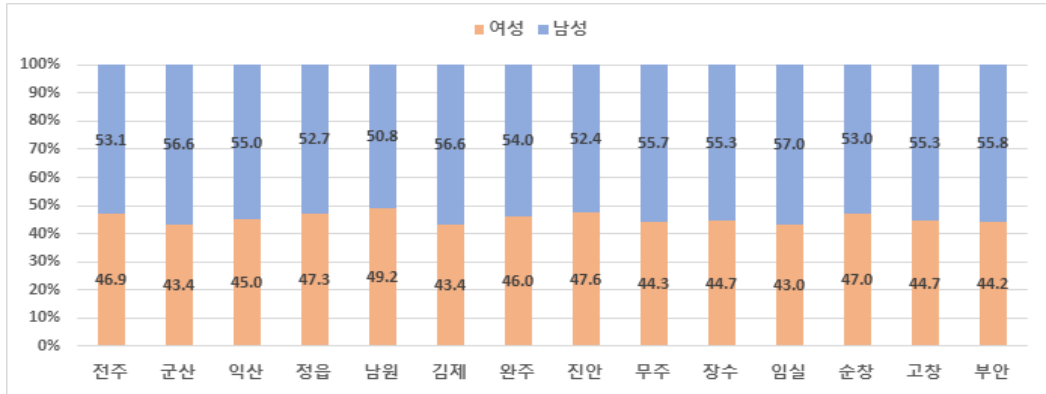
■ 전북 시군별 성별*연령대별 전입자

- 타 시도에서 전북 시군으로 전입한 인구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14개 모든 시군에서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14개 시군 가운데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남원시(49.2%)와 진안군(47.6%)이었으며, 반대로 임실군(43.0%)과 군산시/김제시(43.4%)는 가장 낮았음
- 한편, 전반적으로 시군별 전입자 비중은 10대 이하 및 2030대의 경우 시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며, 40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은 군 단위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12] 전북 시군별 성별*연령대별 전입자(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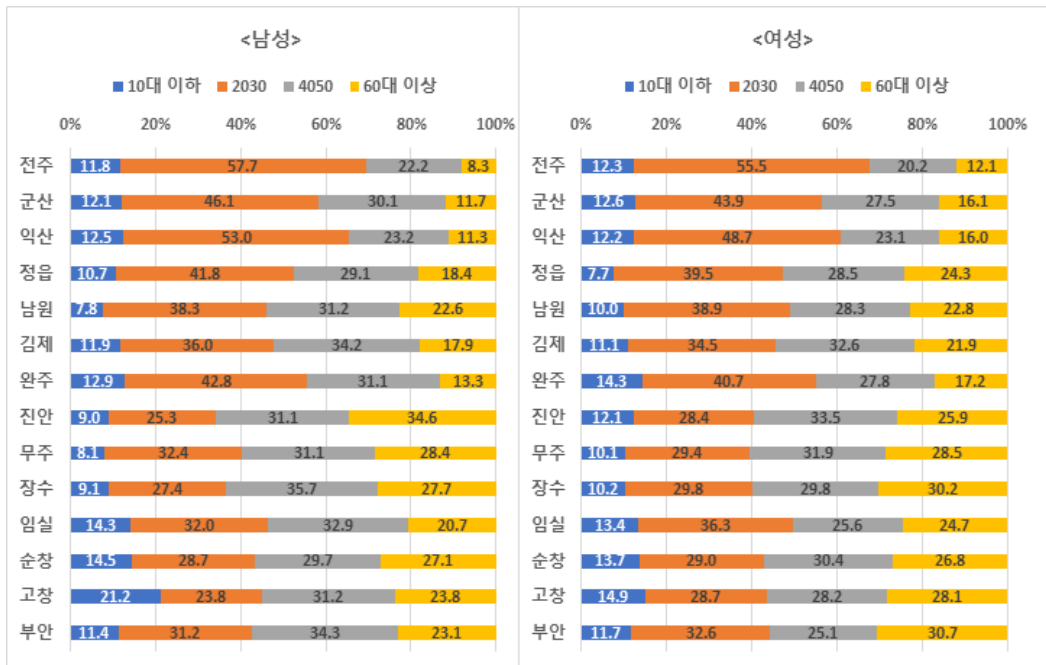
	남성					여성				
	시도간 전입자	10대 이하	2030	4050	60대 이상	시도간 전입자	10대 이하	2030	4050	60대 이상
전북	29,589	3,602	13,923	7,974	4,090	24,897	3,009	11,333	6,180	4,375
전주	9,609	1,130	5,549	2,136	794	8,479	1,039	4,703	1,714	1,023
군산	5,032	611	2,319	1,515	587	3,859	485	1,694	1,060	620
익산	4,663	585	2,470	1,082	526	3,810	465	1,857	880	608
정읍	1,623	173	679	472	299	1,456	112	575	415	354
남원	1,351	106	518	422	305	1,308	131	509	370	298
김제	1,073	128	386	367	192	823	91	284	268	180
완주	1,688	217	722	525	224	1,437	206	585	399	247
진안	344	31	87	107	119	313	38	89	105	81
무주	559	45	181	174	159	445	45	131	142	127
장수	328	30	90	117	91	265	27	79	79	80
임실	434	62	139	143	90	328	44	119	84	81
순창	724	105	208	215	196	641	88	186	195	172
고창	1,351	287	322	421	321	1,091	163	313	308	307
부안	810	92	253	278	187	642	75	209	161	197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15]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성별 구성비(2024)

- 남성 전입자의 연령별 비중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2030대 비중은 전주시에서 57.7%로 가장 높았고, 4050대 비중은 장수군에서 35.7%, 60대 이상 비중은 진안군에서 3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 전입자의 연령별 비중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2030대 비중은 전주시에서 55.5%로 가장 높았고, 4050대 비중은 진안군에서 33.5%, 60대 이상 비중은 부안군에서 30.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16] 전북 시군별 전입자 성별의 연령대별 구성비(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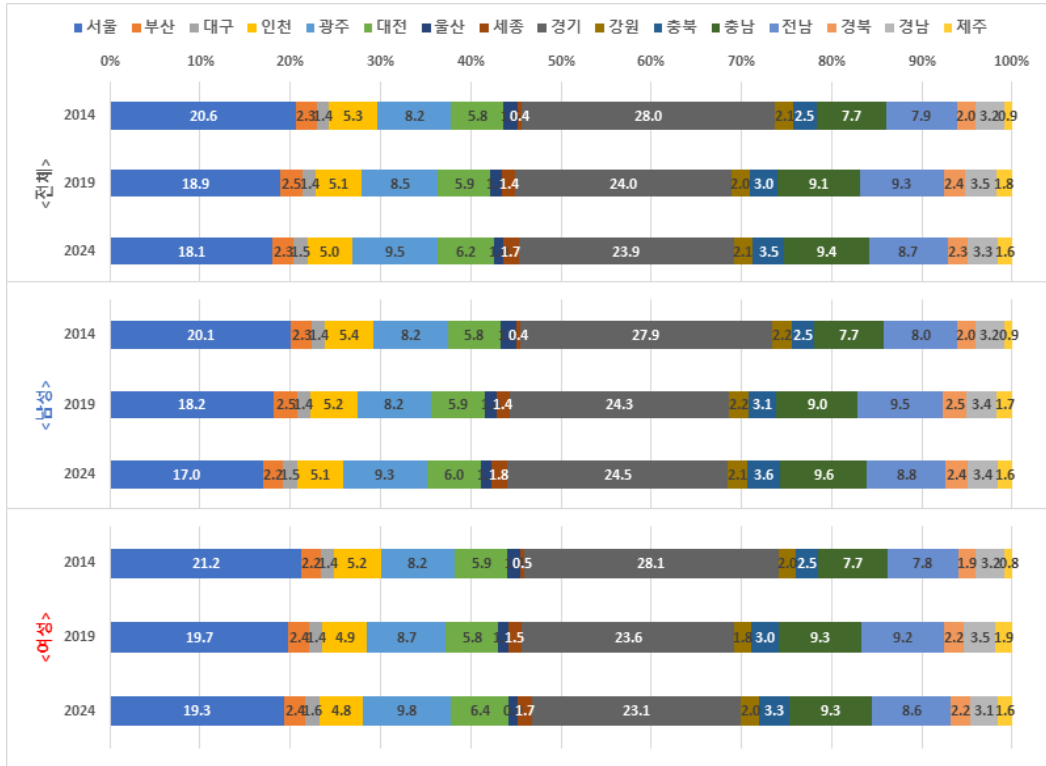
■ 전출지별 전북 전입자 추이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인구의 전출지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4년에는 (경기)-(서울)-(광주), '19년에는 (경기)-(서울)-(전남), '24년도에는 (경기)-(서울)-(광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와 서울 지역이 부동의 지역을 유지하고 있고, 광주와 전남이 순위변동이 나타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경기와 서울 지역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전북 평균과 달리 충남 지역에 서의 유입 비중이 증가하였음
-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기와 서울 지역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남성과는 달리 광주 지역의 비중이 다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3] 전출지별 전북 전입자 수 추이(2014~2024)

	계			남성			여성		
	2014	2019	2024	2014	2019	2024	2014	2019	2024
계	70,612	58,418	54,486	37,137	30,972	29,589	33,475	27,446	24,897
서울	14,566	11,058	9,842	7,460	5,642	5,037	7,106	5,416	4,805
부산	1,600	1,443	1,233	862	787	645	738	656	588
대구	996	828	841	528	436	449	468	392	392
인천	3,745	2,970	2,715	2,011	1,617	1,520	1,734	1,353	1,195
광주	5,798	4,940	5,181	3,056	2,541	2,743	2,742	2,399	2,438
대전	4,116	3,424	3,377	2,148	1,840	1,788	1,968	1,584	1,589
울산	1,134	737	545	664	423	318	470	314	227
세종	310	828	951	154	426	529	156	402	422
경기	19,776	14,014	13,001	10,362	7,528	7,246	9,414	6,486	5,755
강원	1,470	1,190	1,134	816	691	624	654	499	510
충북	1,773	1,775	1,890	944	950	1,073	829	825	817
충남	5,451	5,331	5,148	2,865	2,792	2,844	2,586	2,539	2,304
전남	5,584	5,448	4,727	2,987	2,935	2,590	2,597	2,513	2,137
경북	1,411	1,383	1,244	760	784	701	651	599	543
경남	2,273	2,017	1,781	1,195	1,061	997	1,078	956	784
제주	609	1,032	876	325	519	485	284	513	391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17] 전북 전입자의 전출지별 구성비 추이(2014~2024)

■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역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인구의 전출지역을 시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북 전체의 경우 경기(1위), 서울(2위), 광주(3위) 지역이 주로 나타난 가운데, 시군별로 구분할 경우 다소 차이를 보임
- 시군별로는 해당 시군의 인접 지역에서 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예를 들어,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의 경우 해당 시군의 인접 지역인 충남지역 전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남원시와 임실군의 경우 전남지역,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의 경우 대전지역, 순창군과 고창군의 경우 광주지역 전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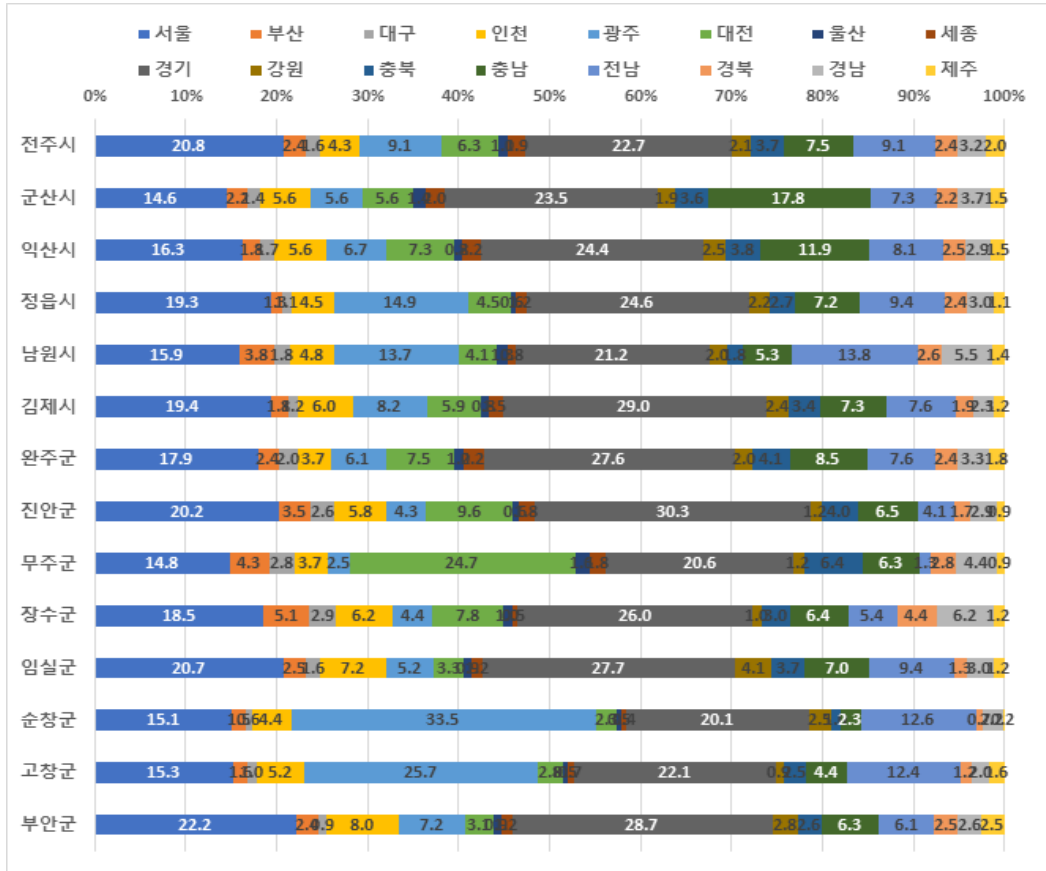
[표 2-14]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역(2024)

전입 전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18,088	8,891	8,473	3,079	2,659	1,896	3,125	657	1,004	593	762	1,365	2,442	1,452
서울	3,766	1,296	1,383	594	424	368	560	133	149	110	158	206	373	322
부산	427	194	154	40	101	34	74	23	43	30	19	21	38	35
대구	293	124	140	34	47	22	62	17	28	17	12	8	24	13
인천	775	501	474	140	127	113	115	38	37	37	55	60	127	116
광주	1,637	497	570	458	365	156	190	28	25	26	40	457	627	105
대전	1,135	500	620	140	110	112	233	63	248	46	25	32	68	45
울산	183	124	72	18	35	16	31	4	16	6	7	7	13	13
세종	342	180	189	36	22	29	70	12	18	3	9	6	18	17
경기	4,111	2,091	2,067	756	564	550	862	199	207	154	211	274	539	416
강원	372	168	210	68	52	46	64	8	12	6	31	34	23	40
충북	672	324	322	83	49	65	127	26	64	18	28	13	61	38
충남	1,362	1,579	1,010	222	142	139	265	43	63	38	53	32	108	92
전남	1,642	653	686	289	368	144	237	27	13	32	72	172	304	88
경북	430	198	210	75	68	36	75	11	28	26	10	10	30	37
경남	584	327	243	92	147	44	104	19	44	37	23	30	49	38
제주	357	135	123	34	38	22	56	6	9	7	9	3	4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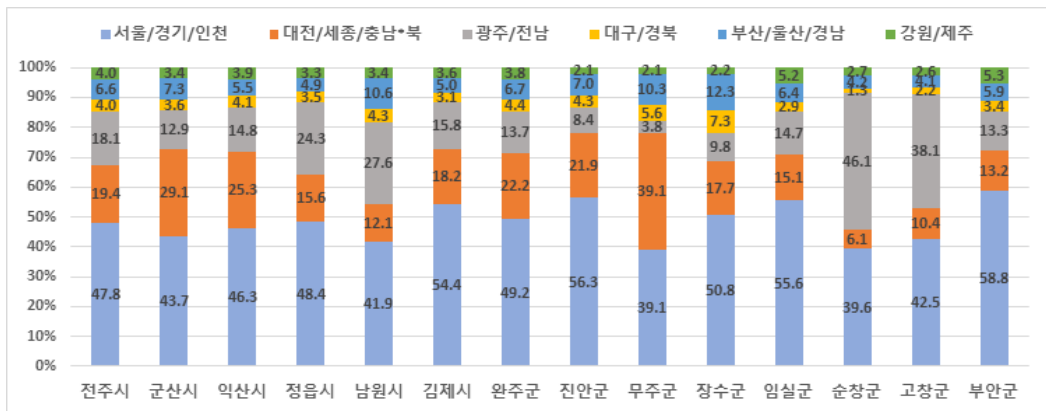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위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대전	경기	경기	광주	광주	경기
2위	서울	충남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경기	서울	서울	경기	경기	서울
3위	전남	서울	충남	광주	전남	광주	충남	대전	서울	대전	전남	서울	서울	인천
4위	광주	전남	전남	전남	광주	전남	전남	충남	충북	충남	인천	전남	전남	광주
5위	충남	인천	대전	충남	경남	충남	대전	인천	충남	인천	충남	인천	인천	충남
6위	대전	대전	광주	인천	충남	인천	광주	광주	경남	경남	광주	강원	충남	전남
7위	인천	광주	인천	대전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부산	전남	강원	대전	대전	대전
8위	충북	경남	충북	경남	대전	충북	인천	충북	인천	부산	충북	충남	충북	강원
9위	경남	충북	경남	충북	부산	강원	경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경남	충북
10위	경북	경북	강원	경북	경북	경남	경북	경남	경북	경북	경남	부산	제주	경남

[그림 2-18]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 주요 순위(2024)



[그림 2-19]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 구성비(2024)



[그림 2-20] 전북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권역 구성비(2024)

■ 전북 전출입 사유 추이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인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 가족, 주택, 자연환경 사유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교육, 주거환경 사유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전북도로 전입한 사유의 구성비 추이를 보면, '직업'과 '가족' 사유가 주된 사유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 사유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 사유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표 2-15] 전북 연도별 전입 사유 추이(2015~2024)

	시도간 전입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2015	68,756	22,369	23,741	12,122	3,628	1,159	1,895	3,842
2016	66,531	20,631	23,320	10,878	3,417	1,110	2,062	5,113
2017	64,709	18,836	20,954	10,400	5,148	1,411	2,021	5,939
2018	59,978	19,358	19,605	9,386	3,899	1,310	1,793	4,627
2019	58,418	19,785	18,647	8,350	4,199	1,184	1,894	4,359
2020	62,625	21,179	18,684	8,887	4,550	1,467	2,077	5,781
2021	61,478	20,917	18,147	8,533	4,800	1,388	2,148	5,545
2022	55,511	18,777	16,022	7,554	4,838	1,534	2,161	4,625
2023	53,965	18,103	16,207	6,767	5,236	1,433	1,897	4,322
2024	54,486	17,427	16,916	7,006	5,583	1,533	1,750	4,271
누적	606,457	197,382	192,243	89,883	45,298	13,529	19,698	48,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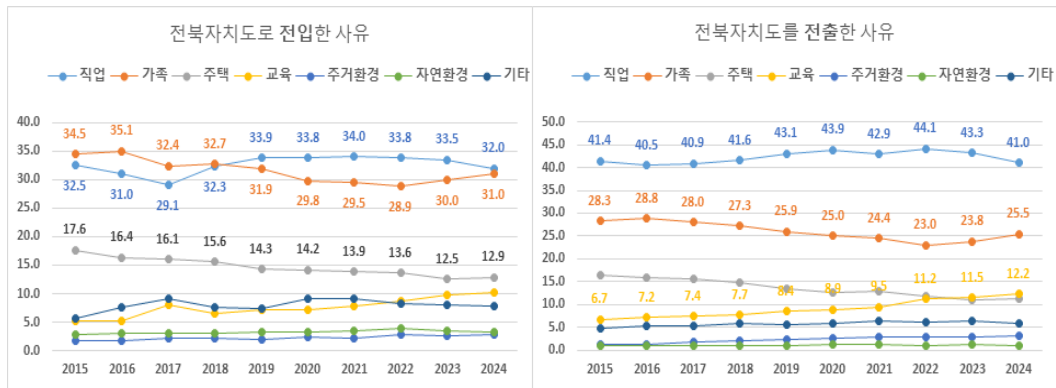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전북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 가족, 주택, 자연환경 사유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주택으로 인한 사유는 크게 감소하였음. 반면, 교육, 주거환경 사유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가세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전북도를 전출한 사유의 구성비 추이를 보면, '직업' 사유가 꾸준히 주된 사유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 목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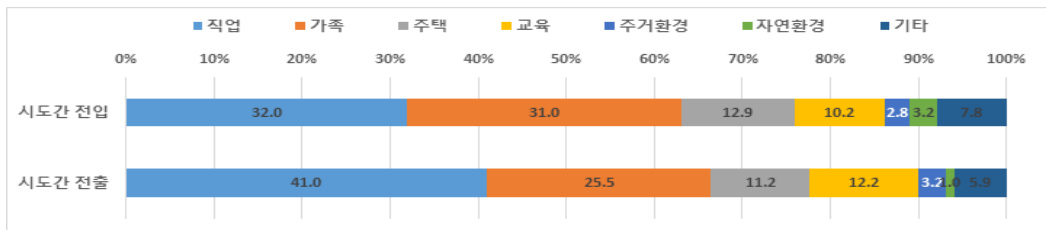
[표 2-16] 전북 연도별 전출 사유 추이(2015~2024)

	시도간 전입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2015	71,586	29,670	20,281	11,838	4,788	947	653	3,409
2016	70,950	28,724	20,442	11,329	5,092	893	666	3,804
2017	71,915	29,402	20,150	11,248	5,290	1,225	775	3,825
2018	73,751	30,652	20,104	10,904	5,642	1,418	772	4,259
2019	71,166	30,655	18,457	9,642	6,009	1,695	748	3,960
2020	71,119	31,228	17,807	9,025	6,354	1,842	786	4,077
2021	67,279	28,888	16,432	8,731	6,377	1,850	745	4,256
2022	60,626	26,758	13,919	7,185	6,794	1,685	633	3,652
2023	58,422	25,286	13,908	6,386	6,703	1,718	666	3,755
2024	60,546	24,822	15,417	6,768	7,414	1,945	587	3,593
누적	677,360	286,085	176,917	93,056	60,463	15,218	7,031	38,59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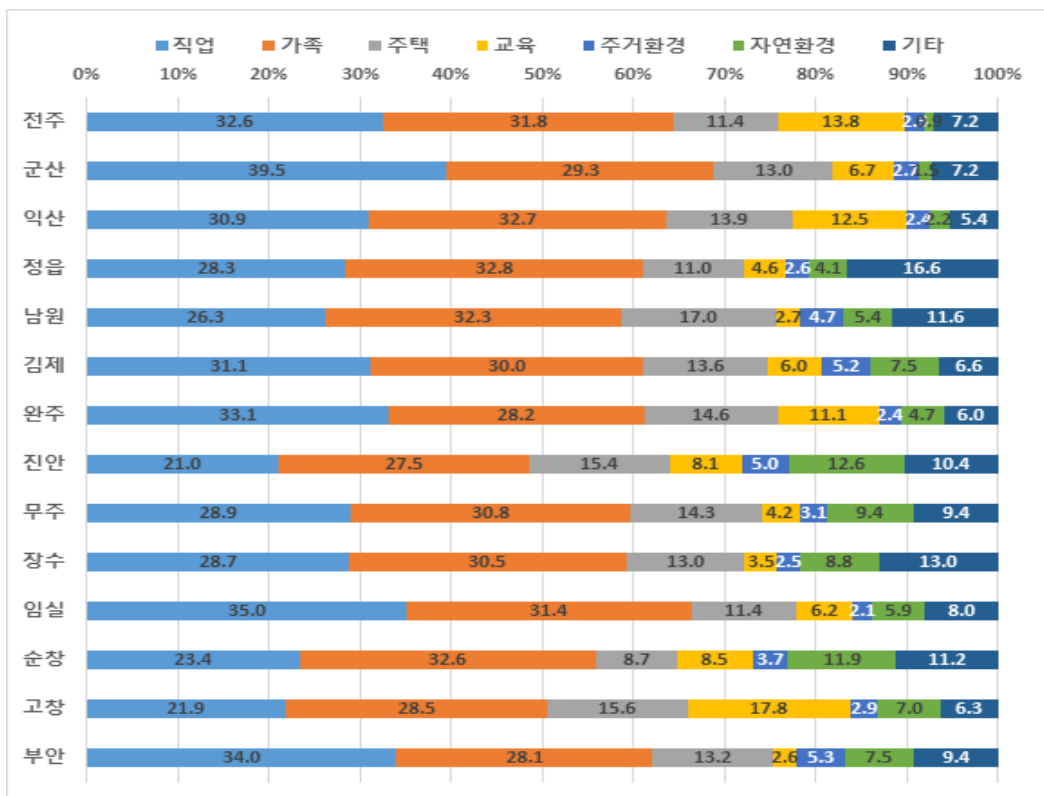
[그림 2-21] 전북 전출입 사유별 구성비 추이(2015~2024)



[그림 2-22] 전북 전입·전출 사유 비교(2024)

■ 전북 시군별 전입 사유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54,486명의 시군별 전입 사유를 살펴보면, 전주/군산/김제/완주/임실/부안 6개 시군은 '직업' 사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익산/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순창/고창 8개 시군은 '가족' 사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입사유별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직업 사유 비중은 군산, 가족 사유 비중은 정읍, 주택 사유 비중은 남원, 교육 사유 비중은 고창, 주거환경 비중은 부안, 자연환경 비중은 진안 지역에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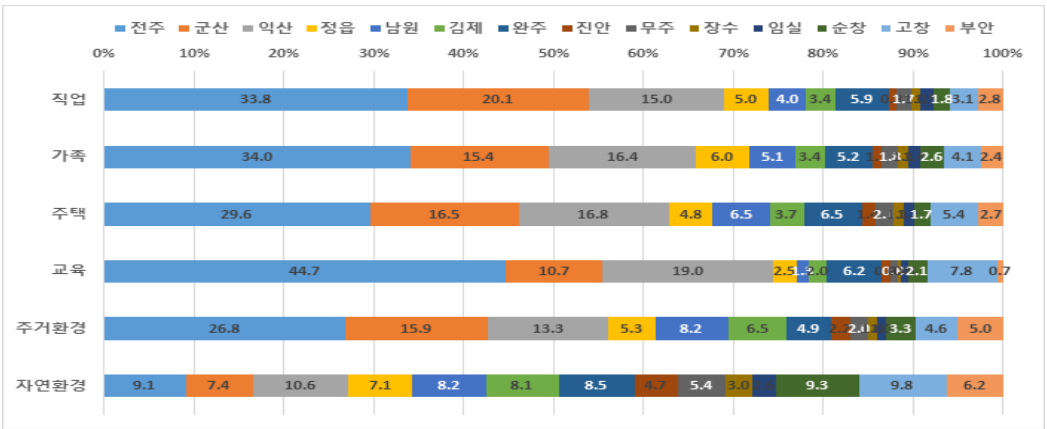
[그림 2-23] 전북 시군별 전입 사유 구성비(2024)

[표 2-17] 전북 시군별 전입 사유(2024)

	시도간 전입자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북	54,486	17,427	16,916	7,006	5,583	1,533	1,750	4,271
전주	18,088	5,895	5,757	2,071	2,497	411	159	1,298
군산	8,891	3,509	2,609	1,157	599	244	130	643
익산	8,473	2,618	2,772	1,175	1,061	204	186	457
정읍	3,079	872	1,009	338	142	81	125	512
남원	2,659	698	860	452	73	125	143	308
김제	1,896	589	569	258	114	99	142	125
완주	3,125	1,034	880	456	346	75	148	186
진안	657	138	181	101	53	33	83	68
무주	1,004	290	309	144	42	31	94	94
장수	593	170	181	77	21	15	52	77
임실	762	267	239	87	47	16	45	61
순창	1,365	319	445	119	116	51	162	153
고창	2,442	535	697	380	434	71	172	153
부안	1,452	493	408	191	38	77	109	136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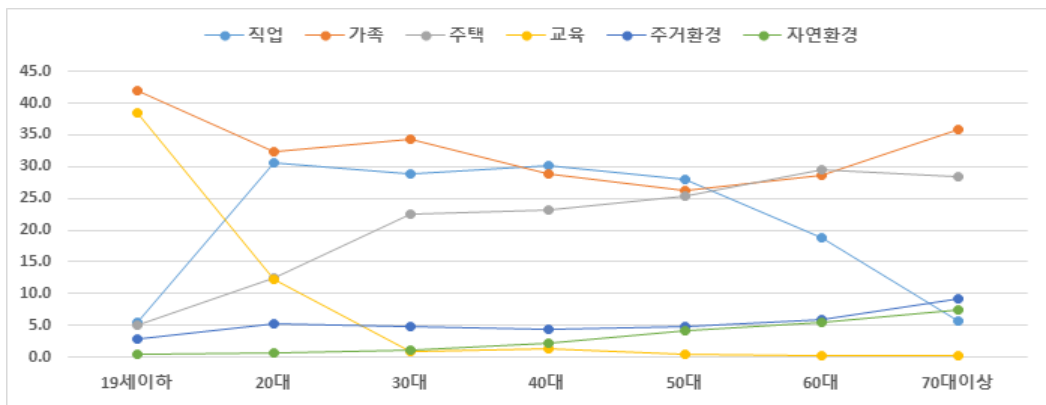
- 한편, 전입사유별 시군 구성비를 보면, 전입인구수 총수가 많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높은 비중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주와 익산은 교육, 군산은 직업 비중이 두드러지며, 자연환경 비중은 11개 시군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2-24] 전북 전입 사유별 시군 구성비(2024)

■ 전북 연령대*전입사유별 이동건수

- 전북 연령별·전입사유별 이동건수를 보면, 생애주기 과업에 따른 이동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직업의 경우 생산가능연령인구인 20~50세 구간에서 강하게 나타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주택의 경우 결혼/가정의 과업에 따라 30대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60대에 가장 높아지며 이 시기에는 가족, 자연환경, 주거환경에 대한 사유도 함께 증가하기 시작함



[그림 2-25] 전북 연령대*전입사유별 이동건수(2024)

[표 2-18] 전북 연령대*전입사유별 이동건수(2024)

	1인 이동 건수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117,753	29,903	37,350	24,092	7,006	6,153	2,861	10,388
19세이하	5,496	302	2,302	279	2,118	152	21	322
20대	35,435	10,840	11,488	4,427	4,346	1,819	203	2,312
30대	23,176	6,679	7,973	5,234	224	1,115	227	1,724
40대	14,061	4,246	4,053	3,256	177	612	311	1,406
50대	16,850	4,710	4,415	4,266	83	823	700	1,853
60대	14,032	2,640	4,006	4,148	44	839	755	1,600
70대이상	8,703	486	3,113	2,482	14	793	644	1,171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전북 읍면동별 전입 현황

○ 전북 읍면동별 전입 현황을 보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군산시 수송동, 익산시 신동,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직업 사유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군산시 수송동, 군산시 소룡동,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순임
- 가족 사유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군산시 수송동, 익산시 모현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순임
- 주택 사유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익산시 어양동, 군산시 구암동,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순임
- 교육 사유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익산시 신동,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순임
- 주거환경 사유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군산시 수송동, 김제시 교월동, 군산시 조촌동 순임
- 자연환경 사유는 고창군 고창읍, 순창군, 순창읍, 완주군 봉동읍, 무주군 무주읍, 부안군 부안읍 순임

[표 2-19] 전북 전입사유별 읍면동 주요 순위(2024)

순위	전체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1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고창군 고창읍
2	군산시 수송동	군산시 수송동	군산시 수송동	익산시 어양동	익산시 신동	군산시 수송동	순창군 순창읍
3	익산시 신동	군산시 소룡동	익산시 모현동	군산시 구암동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김제시 교월동	완주군 봉동읍
4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군산시 조촌동	무주군 무주읍
5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고창군 고창읍	군산시 나운3동	남원시 향교동	부안군 부안읍
6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군산시 수송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무주군 설천면
7	군산시 나운3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군산시 나운3동	완주군 삼례읍	군산시 나운3동	김제시 금산면
8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군산시 나운3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군산시 나운3동
9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군산시 조촌동	익산시 삼성동	익산시 삼성동	고창군 부안면	익산시 모현동	순창군 동계면
10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군산시 나운3동	완주군 봉동읍	고창군 무장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익산시 황등면
11	익산시 모현동	익산시 신동	고창군 고창읍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군산시 수송동	완주군 삼례읍	남원시 도통동
12	군산시 소룡동	군산시 미성동	군산시 나운2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고창군 신림면
13	군산시 조촌동	완주군 봉동읍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군산시 조촌동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순창군 순창읍	정읍시 신대인읍
14	고창군 고창읍	익산시 모현	군산시 조촌	전주시 완산	고창군 고창	고창군 고창	김제시 신흥

	읍	동	동	구 평화2동	읍	읍	동
15	전주시 완산 구 평화2동	전주시 덕진 구 인후3동	익산시 여양 동	익산시 모현 동	군산시 조촌 동	익산시 신동	순창군 인계 면
∴	∴	∴	∴	∴	∴	∴	∴

출처: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표 2-20] 전북 읍면동별*전입사유별 전입자 현황(2024)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 주 시	완산구 중앙동	198	65	84	24	6	10	2	7
	완산구 풍남동	73	25	24	10	3	3	2	6
	완산구 노송동	182	69	49	19	9	9	8	19
	완산구 완산동	59	14	24	8	2	0	1	10
	완산구 동서학동	141	22	48	13	40	2	8	8
	완산구 서서학동	127	24	54	20	17	7	3	2
	완산구 중화산1동	316	99	103	30	35	8	1	40
	완산구 중화산2동	551	222	183	57	40	20	3	26
	완산구 서신동	952	342	361	83	52	17	2	95
	완산구 평화1동	212	53	88	37	8	4	2	20
	완산구 평화2동	665	143	354	73	19	11	8	57
	완산구 삼천1동	198	48	99	25	7	2	1	16
	완산구 삼천2동	204	64	83	24	3	13	1	16
	완산구 삼천3동	325	78	159	23	5	4	4	52
	완산구 효자1동	214	47	106	28	11	7	1	14
	완산구 효자2동	186	42	86	22	16	2	0	18
	완산구 효자3동	282	44	127	66	19	3	2	21
	완산구 효자4동	1,066	330	308	81	250	26	6	65
	완산구 효자5동	1,518	637	367	197	200	38	4	75
	덕진구 진북동	211	74	86	13	12	15	1	10
	덕진구 인후1동	288	96	121	26	17	3	7	18
	덕진구 인후2동	295	97	83	45	33	6	5	26
	덕진구 인후3동	620	261	186	70	23	18	13	49
	덕진구 덕진동	1,039	324	146	34	457	23	8	47
	덕진구 금암1동	1,090	221	58	35	712	12	3	49
	덕진구 금암2동	335	73	61	19	132	7	3	40
	덕진구 팔복동	126	49	36	11	11	1	2	16
	덕진구 우아1동	294	99	89	54	6	2	2	42
	덕진구 우아2동	415	145	88	126	4	10	6	36
	덕진구 호성동	338	58	180	49	15	8	5	23
	덕진구 송천1동	1,230	429	544	108	48	28	6	67
	덕진구 송천2동	509	172	225	42	17	14	5	34
	덕진구 조촌동	227	92	72	27	6	2	2	26
	덕진구 여의동	274	78	106	59	12	4	2	13

군 산 시	덕진구 혁신동	897	398	335	52	38	15	8	51
	옥구읍	63	19	23	8	0	3	1	9
	옥산면	77	29	31	8	4	0	2	3
	회현면	44	8	20	3	0	0	5	8
	임피면	66	20	13	2	17	3	7	4
	서수면	58	19	20	7	1	4	3	4
	대야면	77	14	29	11	3	1	1	18
	개정면	58	10	22	13	3	4	2	4
	성산면	49	14	26	5	0	2	1	1
	나포면	41	4	12	14	0	3	3	5
	옥도면	49	27	14	1	1	0	1	5
	옥서면	99	65	22	2	1	4	2	3
	해신동	39	14	8	8	1	1	1	6
	월명동	96	43	26	9	3	3	0	12
	신평동	128	43	49	11	6	3	3	13
	삼학동	103	24	26	26	5	5	3	14
	중앙동	86	23	36	12	1	3	1	10
	흥남동	303	108	122	36	8	7	6	16
	조촌동	766	328	225	78	41	31	11	52
	경암동	205	68	49	30	17	6	1	34
	구암동	315	62	96	130	5	7	2	13
	개정동	59	15	25	8	5	2	2	2
	수송동	1,394	555	534	116	68	38	12	71
	나운1동	388	136	123	54	14	12	9	40
	나운2동	433	101	226	58	17	6	2	23
	나운3동	1,060	330	284	109	217	28	17	75
	소룡동	843	535	143	58	16	14	11	66
	미성동	462	296	84	30	17	8	7	20
익 산 시	함열읍	120	31	48	13	1	3	6	18
	오산면	95	18	56	8	2	1	6	4
	황등면	146	17	70	33	4	1	15	6
	함라면	46	14	19	4	0	3	3	3
	웅포면	38	6	15	2	4	4	7	0
	성당면	49	14	18	7	4	2	2	2
	용안면	46	15	14	9	2	1	3	2
	낭산면	52	10	25	14	2	0	0	1
	망성면	122	26	50	25	6	0	5	10
	여산면	138	66	45	14	2	1	5	5
	금마면	169	74	49	16	12	4	8	6
	왕궁면	206	90	57	28	10	4	7	10
	춘포면	136	28	37	43	4	10	6	8
	삼기면	58	12	26	8	2	0	6	4

정읍시	용동면	38	9	14	4	0	3	2	6
	중앙동	122	59	19	14	13	3	5	9
	평화동	87	29	32	14	3	7	2	0
	인화동	132	54	40	16	5	8	1	8
	동산동	372	109	165	43	15	8	12	20
	마동	311	100	78	51	33	12	7	30
	남중동	247	64	94	44	14	15	1	15
	모현동	862	267	409	72	32	24	10	48
	송학동	254	82	79	56	15	5	6	11
	영등1동	478	169	180	50	39	13	2	25
	영등2동	369	161	134	24	27	12	1	10
	어양동	563	141	219	132	26	4	3	38
	신동	1,243	316	103	42	684	19	13	66
	팔봉동	149	61	52	7	6	4	4	15
	삼성동	601	152	297	96	13	10	7	26
	신태인읍	137	29	39	12	13	1	14	29
	북면	97	32	39	7	1	2	5	11
	입암면	68	15	26	9	7	1	6	4
	소성면	49	16	16	4	0	2	5	6
	고부면	71	17	20	9	2	2	3	18
	영원면	47	12	22	6	0	0	2	5
	덕천면	49	13	17	5	3	2	3	6
	이평면	66	13	20	7	10	2	4	10
	정우면	54	8	15	18	1	2	4	6
	태인면	68	14	23	15	3	2	9	2
	감곡면	53	6	19	16	1	0	5	6
남원시	용동면	29	8	8	2	2	1	3	5
	칠보면	49	17	20	7	0	1	1	3
	산내면	28	7	11	1	0	1	4	4
	산외면	41	10	14	11	0	4	1	1
	수성동	497	184	160	34	8	15	8	88
	장명동	83	17	31	9	2	4	3	17
	내장상동	499	116	214	47	11	13	10	88
	시기동	78	18	23	10	2	0	2	23
	초산동	235	70	99	29	13	3	1	20
	연지동	164	48	33	9	3	8	3	60
	농소동	78	35	27	7	0	0	3	6
	상교동	152	67	38	8	8	1	9	21
	운봉읍	114	14	46	25	0	10	10	9
	주천면	76	21	21	5	2	4	12	11
	수지면	27	5	10	6	1	0	1	4
	송동면	54	15	20	10	0	0	7	2

김 제 시	주생면	45	8	10	5	1	3	4	14
	금지면	73	17	28	10	3	1	6	8
	대강면	43	8	10	9	2	1	6	7
	대산면	50	19	9	4	1	5	11	1
	사매면	61	1	27	19	2	3	5	4
	덕과면	17	8	6	0	0	1	1	1
	보절면	36	5	19	5	0	1	1	5
	산동면	37	9	16	5	1	3	3	0
	이백면	43	6	15	6	0	5	5	6
	아영면	67	19	21	15	2	2	3	5
	산내면	90	12	28	27	5	0	8	10
	인월면	107	33	33	11	4	4	6	16
	동충동	88	25	30	3	1	15	3	11
	죽향동	108	34	33	15	3	6	8	9
	노암동	158	27	53	40	3	1	7	27
	금동	132	23	39	30	3	1	0	36
	왕정동	156	36	60	38	7	3	2	10
	향교동	222	66	53	56	1	30	6	10
	도통동	519	207	186	42	5	11	15	53
	만경읍	58	23	14	10	5	0	5	1
	죽산면	44	10	11	3	7	2	6	5
	백산면	87	41	16	17	0	1	8	4
	용지면	46	16	16	2	1	1	7	3
	백구면	54	14	13	13	2	3	4	5
	부량면	28	4	13	3	1	2	4	1
	공덕면	32	10	8	4	0	5	2	3
완 주 군	청하면	40	9	21	5	0	0	3	2
	성덕면	28	5	8	1	6	0	3	5
	진봉면	46	12	14	9	3	0	3	5
	금구면	81	20	33	10	2	4	10	2
	봉남면	43	9	16	6	0	0	8	4
	황산면	36	9	21	2	0	1	1	2
	금산면	111	28	29	6	15	3	19	11
	광활면	16	5	4	1	0	1	4	1
	요촌동	261	125	88	22	6	8	2	10
	신평동	271	94	84	40	8	9	14	22
	검산동	194	59	64	40	10	1	3	17
	교월동	87	8	27	9	1	38	0	4
	삼례읍	574	149	142	67	160	23	7	26
	봉동읍	664	291	192	96	25	8	25	27
	용진읍	235	76	87	31	5	6	8	22
	상관면	83	17	34	16	1	2	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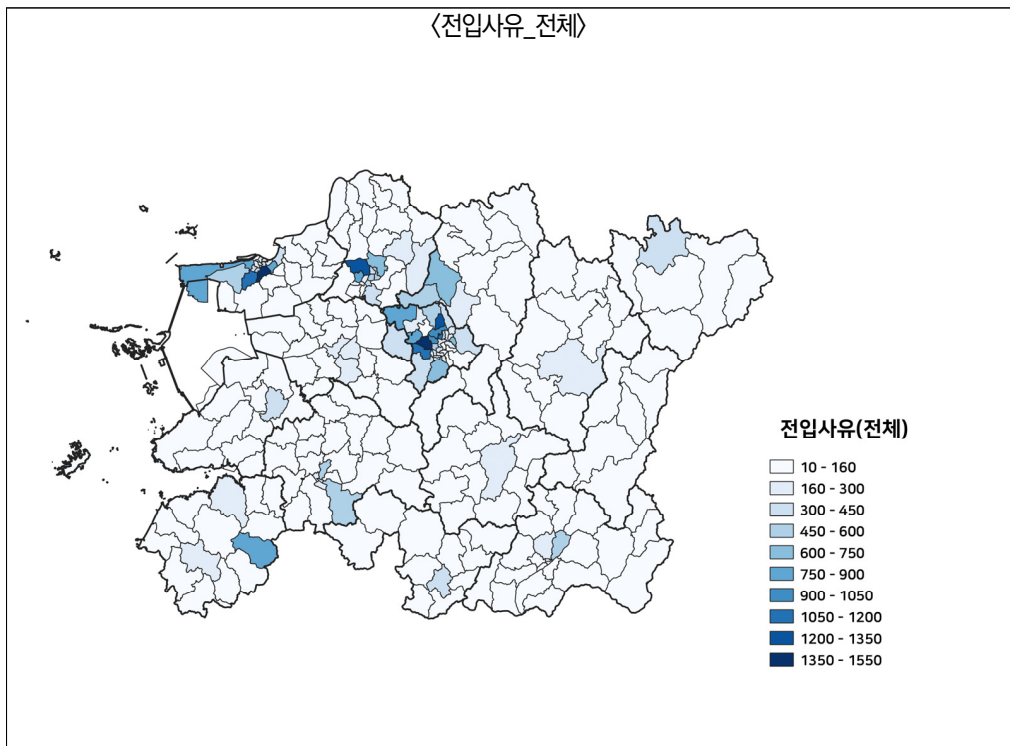
	이서면	423	174	142	58	6	6	5	32
	소양면	85	14	38	11	5	0	9	8
	구이면	98	14	42	15	3	5	11	8
	고산면	91	19	38	8	1	5	12	8
	비봉면	27	8	9	2	0	0	8	0
	운주면	94	31	20	11	10	4	8	10
	화산면	106	13	34	14	32	1	11	1
	동상면	25	7	5	2	3	1	5	2
	경천면	31	6	7	2	0	2	9	5
진안군	진안읍	193	62	55	32	3	12	12	17
	용담면	49	9	12	8	1	2	13	4
	안천면	34	6	7	6	0	0	7	8
	동향면	35	6	18	5	0	1	3	2
	상전면	13	3	3	1	2	2	2	0
	백운면	44	8	16	6	1	6	4	3
	성수면	41	8	8	7	0	4	8	6
	마령면	25	7	11	4	0	0	1	2
	부귀면	60	17	17	6	3	2	8	7
	정천면	39	1	13	6	11	0	4	4
무주군	주천면	36	2	13	8	0	1	8	4
	무주읍	313	105	99	32	11	6	23	37
	무풍면	89	31	31	9	0	2	8	8
	설천면	147	48	41	26	0	2	20	10
	적상면	108	32	36	18	5	3	9	5
	안성면	152	38	54	23	8	2	11	16
장수군	부남면	63	4	14	19	3	14	7	2
	장수읍	159	62	45	9	7	6	11	19
	산서면	48	5	18	17	1	1	1	5
	번암면	57	9	18	8	1	0	10	11
	장계면	101	34	35	10	4	0	6	12
	천천면	58	13	18	10	1	3	11	2
	계남면	55	23	19	5	0	1	3	4
임실군	계북면	39	8	11	6	2	1	3	8
	임실읍	240	116	78	17	6	3	8	12
	청웅면	18	5	9	3	1	0	0	0
	운암면	30	5	5	7	0	6	4	3
	신평면	37	17	10	1	6	1	0	2
	성수면	32	3	12	5	0	0	8	4
	오수면	85	17	40	10	2	0	6	10
	신덕면	10	1	5	2	0	1	1	0
	삼계면	33	7	8	1	3	3	3	8
	관촌면	51	11	21	12	0	0	4	3

	강진면	23	4	12	2	0	0	4	1
	덕치면	24	4	8	3	0	1	0	8
	지사면	24	6	8	4	6	0	0	0
순창군	순창읍	393	120	138	41	12	20	26	36
	인계면	68	14	23	8	2	4	14	3
	동계면	54	6	27	2	0	2	17	0
	풍산면	77	11	30	5	3	4	13	11
	금과면	109	28	40	7	9	4	11	10
	팔덕면	72	13	32	5	5	3	9	5
	쌍치면	61	9	22	5	5	1	12	7
	북흥면	83	21	25	3	8	3	6	17
	적성면	48	9	15	6	7	2	4	5
	유등면	60	5	27	8	1	3	10	6
	구림면	87	15	32	4	2	0	10	24
고창군	고창읍	756	234	227	119	48	20	52	56
	고수면	78	17	34	10	0	0	9	8
	아산면	82	20	41	10	1	2	3	5
	무장면	171	6	29	44	86	1	4	1
	공음면	66	8	31	21	1	1	0	4
	상하면	72	17	24	17	1	4	3	6
	해리면	77	18	29	7	1	7	6	9
	성송면	50	9	20	10	0	6	5	0
	대산면	90	22	29	17	8	2	4	8
	심원면	78	24	26	9	2	0	8	9
	흥덕면	88	20	41	9	1	1	7	9
	성내면	45	10	17	5	0	5	3	5
	신림면	72	11	23	13	3	4	15	3
	부안면	223	31	35	16	113	3	11	14
부안군	부안읍	418	166	138	35	14	9	21	35
	주산면	53	12	21	7	1	4	5	3
	동진면	54	7	13	5	1	17	5	6
	행안면	41	15	9	4	2	2	4	5
	계화면	59	17	26	3	0	0	5	8
	보안면	51	7	21	13	0	0	1	9
	변산면	154	84	35	17	0	4	11	3
	진서면	77	21	26	12	4	2	8	4
	백산면	52	10	7	11	1	18	1	4
	상서면	59	12	17	4	0	9	10	7
	하서면	72	15	22	18	0	0	1	16
	줄포면	69	16	19	10	0	0	3	21
	위도면	42	21	10	1	0	0	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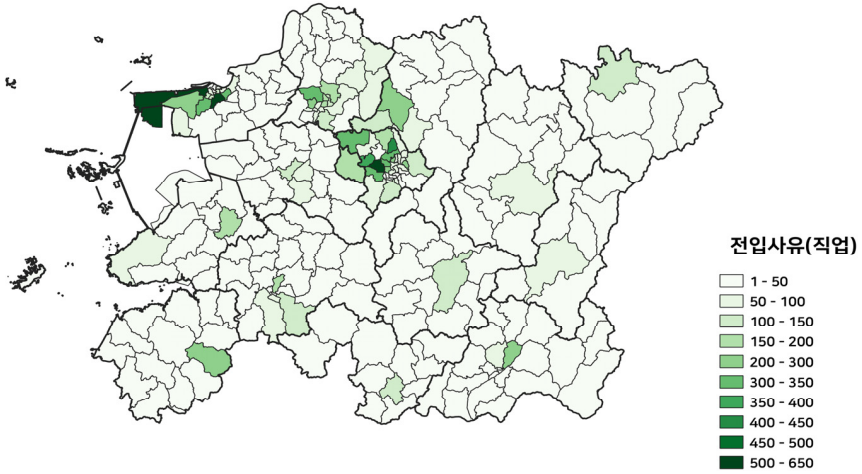
출처: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 전북 읍면동별 전입 현황_(GIS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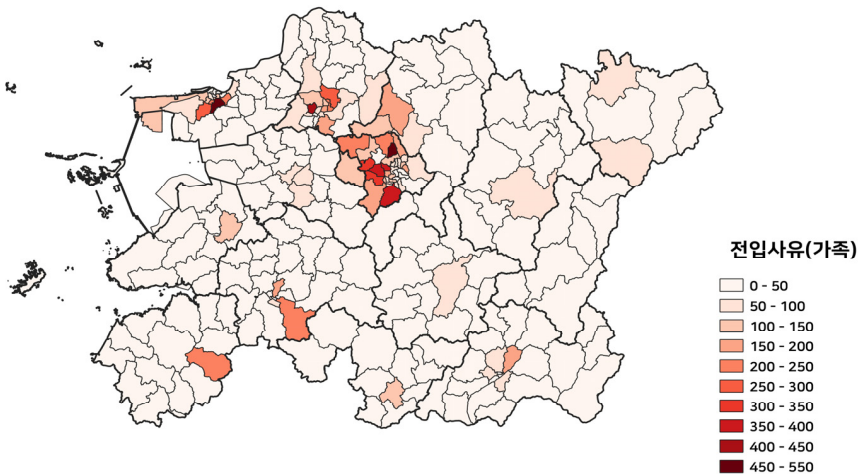
-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인구의 읍면동별 분포를 GIS를 통해 구현한 결과, 주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남
- 전입사유별로 구분해서 구현해보면, 직업, 가족, 교육 사유는 군 지역의 경우 읍 단위를 중심으로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반면, 주택, 주거환경, 자연환경 사유는 비교적 면 단위에서도 고르게 구현되며, 특히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의 경우 각 군 지역의 면 단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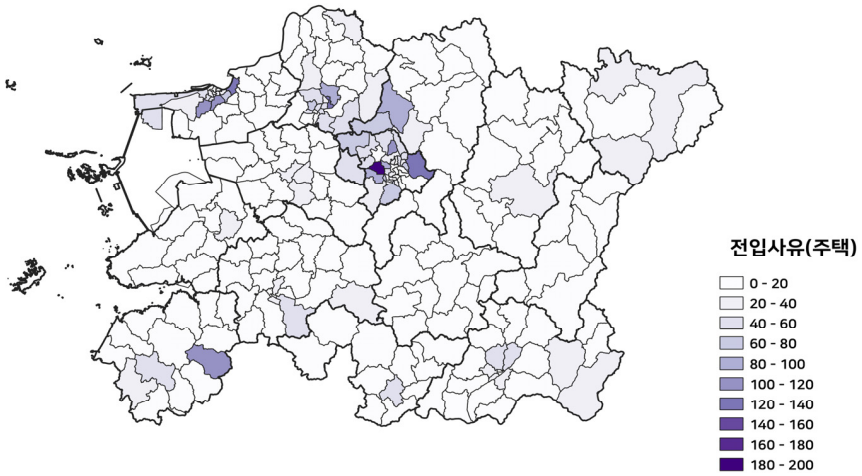
〈전입사유_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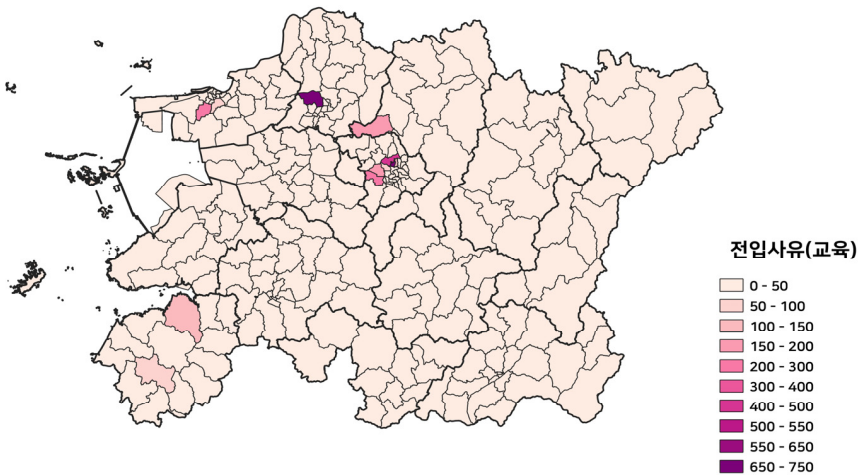
〈전입사유_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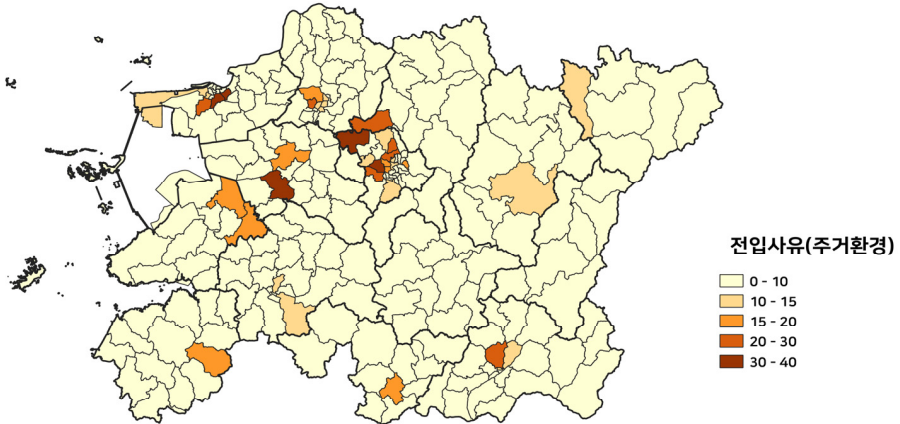
〈전입사유_주택〉



〈전입사유_교육〉



〈전입사유_주거환경〉



〈전입사유_자연환경〉



3. 소결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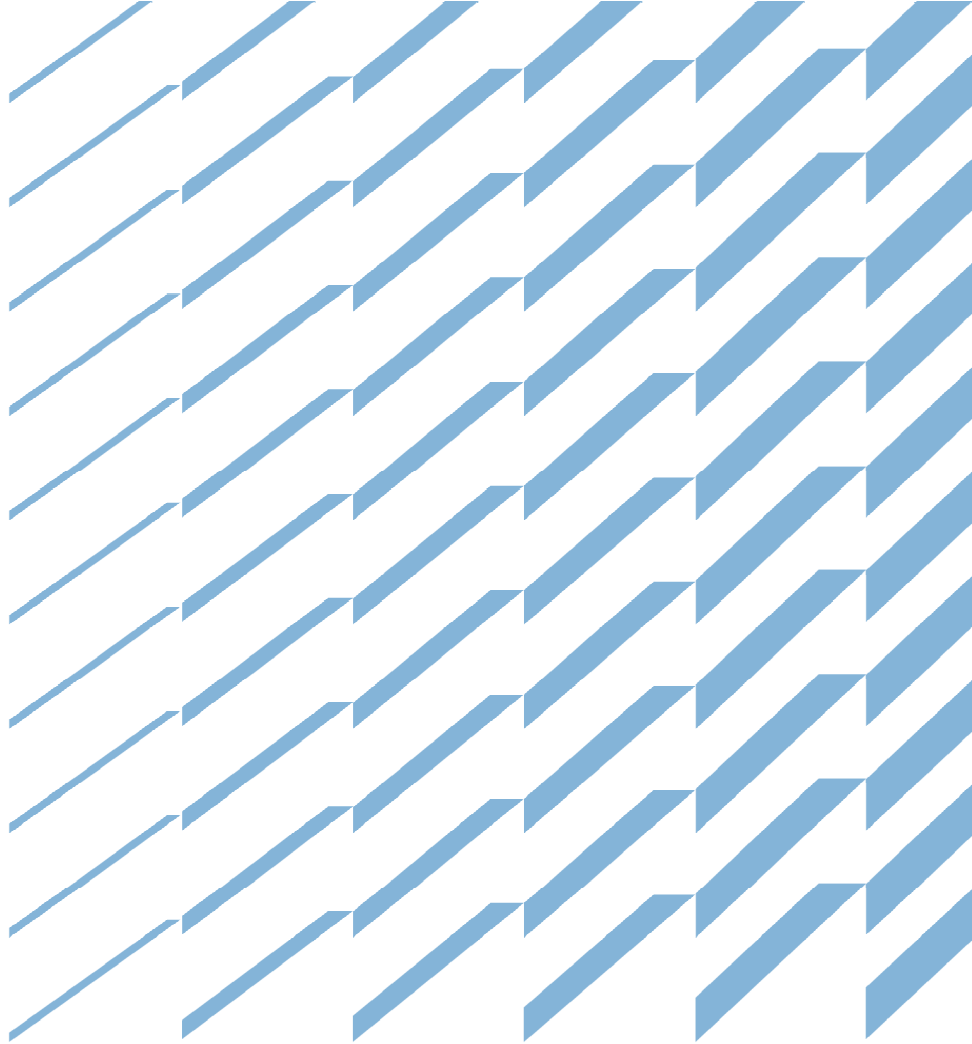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로 유입된 인구 중 지역에 정착한 유형별 사례연구를 통해 전북자치도로의 인구유입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과 전북자치도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전북자치도의 인구이동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특히, 전북으로의 인구유입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유입 특성을 분석하였음

■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등 4개 지역은 순유입이 일어났고, 그 외 지역은 순유출을 기록하였음. 전북의 경우 54,486명이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하였고, 60,546명이 타 시도로 전출되어 -6,060명의 순유출이 일어남
 - 전북으로 전입한 인구의 지역은 경기, 서울, 광주 순이었으며, 전북 외로 전출한 지역은 경기, 서울, 충남 등의 순임
 - 전북으로 전입한 경우의 사유는 '직업'으로 인한 사유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가족' 사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이에 전북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입 사유 항목에 따라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하나, 현재의 항목으로만은 전북으로의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인구유입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더욱이 유입 유형별로 가지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그간 진행되어 왔던 통계DB에 기반한 정책방향 제시보다는 인구유입 유형별로 구체적 정착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가 요구됨

■ 전북자치도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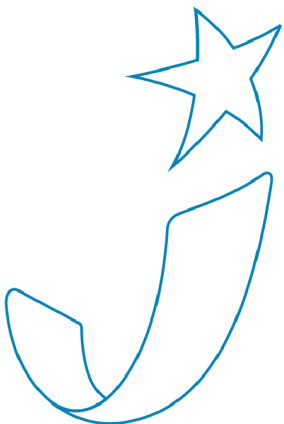
- 전북의 인구유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구분해보면, 완주, 김제, 무주, 순창 등 일부 지역은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음
- 한편, 연령별 인구이동을 보면, 전북의 경우 젊은층의 유출은 가속화되고, 반대로 고령층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더해 전입자 비중의 경우 10대 이하 및 2030대의 경우 시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40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은 군 단위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여 시군 간 연령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젊은세대의 인구유입도 적은 수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입 유형과 특성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전북으로 전입한 사유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 및 주거환경 사우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아직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증가폭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농촌유학’ 정책의 영향으로 사료됨
- 시군별로 전입한 인구의 전출지역을 살펴본 결과, 해당 시군의 인접 지역에서 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유입의 특성을 분석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전북으로 전입한 사유를 연령별로 한번 더 구분할 경우 생애주기 과업에 따른 인구이동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음. 예를 들어, ‘직업’의 경우 생산가능연령인구인 20~50세 구간에서 강하게 나타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주택’의 경우 결혼/가정의 과업에 따라 30대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60대에 가장 높아지며 이 시기에는 가족, 자연환경, 주거환경에 대한 사유도 함께 증가하기 시작함
- 따라서 인구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제3장

전북자치도 인구유입유형별 정착사례

1. 지역정착 유형화
2. 인구유입유형별 정착사례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전북자치도 인구유입유형별 정착사례

1. 지역정착 유형화

1) 조사방법 및 절차

■ 전북자치도 내 지역 정착사례 조사

- 전북자치도 인구유입유형을 일자리(창업, 취업), 교육(자녀교육, 본인교육), 귀촌(귀농, 귀어, 귀산촌), 은퇴자(은퇴 후 귀촌/활동, 고향 U턴 등) 등 크게 4개로 구분하고, 14개 시군의 유형별 대표적 정착사례를 조사함

지역정착 사례 추천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인구유입 정책발굴을 위한 「전북자치도 인구유입유형별 지역정착 사례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각 기초지자체의 지역정착 사례를 추천받아 서면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구유입 유형은 (1)일자리, (2)교육, (3)귀촌, (4)은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착 사례를 유형별로 1개 이상씩 '이름, 나이, 소속, 연락처, 추천사유'와 함께 추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 기관: 전북연구원 사회변화대응팀(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280-7197)

▶ 추천인

시·군	담당자	연락처

▶ 추천사례

1. 일자리(창업, 취업)

이름		나이	
소속		연락처	
추천사유			

[그림 3-1] 지역정착 사례 추천 양식(예시)

■ 정착사례 조사 대상 선정

-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지역정착 사례 중 일부를 서면조사 및 심층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함
 - 지역, 성별, 나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사례가 반영되도록 조사 대상 선정
 -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사례조사 대상 적합성 판단
- 유형별로 4~7건의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는 여건에 따라 유형별 FGI(Focus Group Interview) 또는 개별 심층인터뷰 대상으로 구분함
 - 최종 선정된 인구유입유형별 사례 수는 일자리(창업, 취업) 7건, 교육(자녀교육, 본인교육) 5건, 귀촌(귀농, 귀어, 귀산촌) 6건, 은퇴자(은퇴 후 귀촌/활동, 고향 U턴 등) 4건임

■ 정착사례 조사

- 선정된 지역정착 사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FGI 또는 개별 심층인터뷰를 병행함
 - 유형별로 4~7건의 사례에 대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FGI 또는 개별 심층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착사례를 조사함

2) 조사내용

■ 탐색·준비-이주-정착·정주로 실현되는 지역정착 단계에 따른 조사내용 구성

-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정착과 정주를 실현하기까지는 탐색·준비, 이주, 정착 기반 확보, 정착, 정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함
- 따라서 지역정착 사례에 관해 현 거주지역 정착에만 국한된 정보를 조사한다면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관련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전북자치도로 유입된 지역정착 사례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탐색·준비과정, 이주과정, 정착과정 관련 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함

- 누가, 왜, 어떻게 준비하여 전북자치도로 이주하고 있는지, 이주 후에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들의 정착과 정주에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주 전 배경과 정착에 도달하는 3단계(이주 탐색과 준비기, 이주기, 정착기와 정주)에 관한 질문들로 서면조사와 심층면접 질문 문항을 구성함
- 이주 전 배경-이주 탐색과 준비기-이주기-정착기와 정주 순으로 조사 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함

■ 전북자치도 이주 전 배경

- 전북자치도 이주 전 지역이동 전체 이력과 전북지역 방문 경험 여부 및 내용 등 사례자의 기본적 배경을 조사함
 - 전북자치도 이주 전 생활했던 지역(들)
 - 전북자치도 이주 전 일 또는 활동 내역
 - 과거 전북자치도 방문 또는 일시적 체류 경험 여부 및 내용

■ 전북자치도 이주 탐색과 준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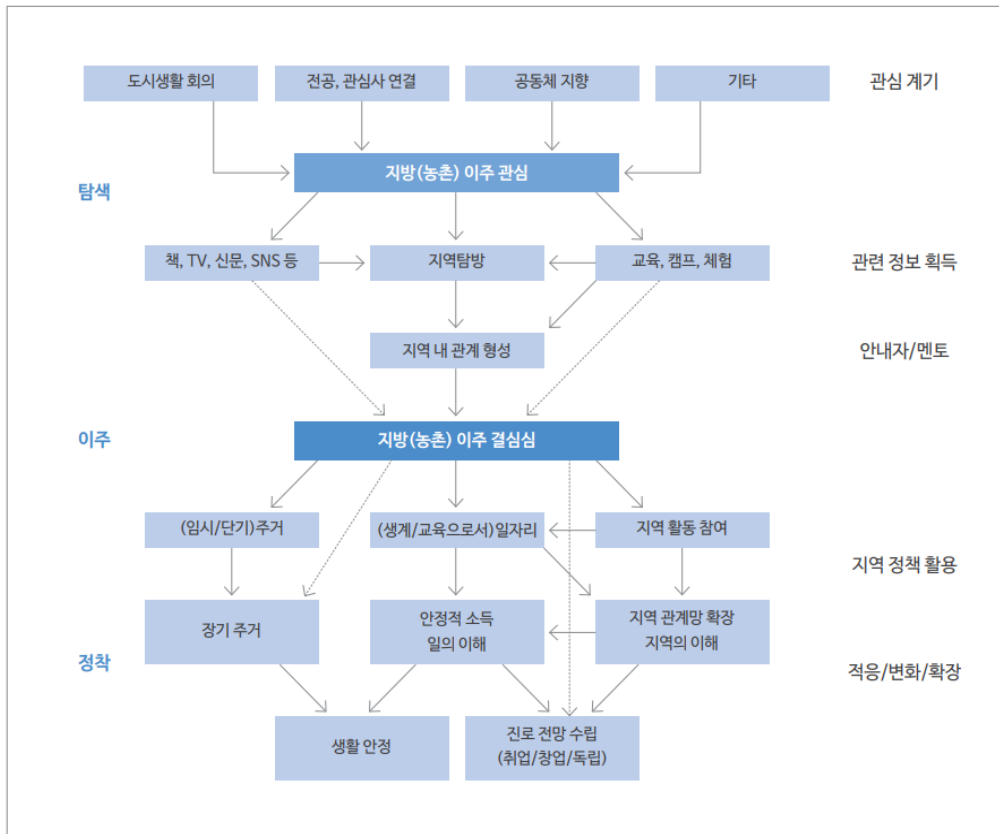
- 이전 거주지역에서 전북자치도로 이주하게 된 계기, 이주 결심에 영향을 미친 정책 또는 사람 등 전북자치도가 이주 지역으로서의 고려 대상이 되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요인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함
 - 전북자치도 이주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
 - 전북자치도 이주를 결심하게 된 동기
 - 전북자치도 이주를 선택 또는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준 사람
 - 전북자치도 이주를 선택 또는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준 정책과 지원내용
 - 전북자치도 외 이주 지역으로 고려되었던 타 지자체의 지역명과 이유
 - 전북자치도 이주 탐색과 준비에 필요했던 정보와 취득 경로
 - 전북자치도 이주 결심을 굳힌 데 가장 주요했던 점
 - 전북자치도 이주 결심을 굳히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

■ 전북자치도 이주기

- 이주기 동안 느꼈던 이전 거주지역 대비 전북자치도의 우위·열위, 영향을 미친 정책 등 실질적인 이주 과정에서의 경험과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조사함
 - 현 거주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주된 이유와 목적 달성 정도
 - 이주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과 내용
 - 이주기에 영향을 준 전북자치도 정책지원 프로그램
 - 이주기에 영향을 준 기초지자체의 지원정책
 - 이전 거주 지자체와의 비교 시 현 거주지역이 갖는 경쟁력

■ 전북자치도 정착기와 정주

- 이주 이후 생활실태와 정주여건 만족도, 정착·정주 관련 지원체계와 정책을 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함
 - 이주 이후 직업 또는 주된 활동과 만족도
 - 교육, 문화, 복지,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만족도
 - 지역사회 적응(수용성, 배타성) 정도
 - 정착 과정에 영향을 준 전북자치도 정책
 - 정착 과정에 영향을 준 기초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 지속적 정주 의향과 향후 계획
 - 정주에 필요한 지원체계와 생활인프라
 - 전북자치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자료: 마을학회 일소공도(2018),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정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그림 3-2]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과정

2. 인구유입유형별 정착사례

가. 일자리

■ 새로운 취·창업 기회와 정책지원 기반 지역 이주

- 전북 지역은 평균 급여 수준이 낮은 등 일부 근로 여건의 한계가 존재하나, 수도권 지역의 취업 경쟁 심화에 따라 지방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이직 및 지역 일자리 탐색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도내 인구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연고가 없는 청년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기회를 통해 지역에 유입·정착하는 양상을 보임. 이들은 지인 소개 등을 통한 도내 기업 취업을 계기로 유입되었으며, 지역살이 경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정주를 택하고 있음

“저는 고향은 전남 광양인데 군산에 있는 ○○○회사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서울에서 졸업했는데 코로나 시기랑 겹치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취업을 못 했어요.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예전에 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한 형이 자기네 회사가 괜찮다고 지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지원했죠. 근데 제가 면접에서 2등을 했다고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군산으로 내려가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군산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서울 아니면 연고가 있는 광양이나 여수 쪽으로 취업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군산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은 아예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마음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례자1)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중략) 저만 내려왔던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같이 왔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분들도 오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프로젝트는 끝났는데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군산에서 사는 방식이 좀 익숙해졌어요. 서울에 가면 이제 시끄럽다고 느껴져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이에 지하철역이 다 바뀌어서 어플이 없으면 도무지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게 불편하고 번잡하고… 군산은 훨씬 조용하고 괜찮아요.” (사례자4)

“전북은 여행조차도 안 와봤던 곳이에요. 그런데 친인척분 소개로 신량이 직장을 임실로 옮기게 되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신량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서울에서 직장을 새로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때 진안에 계신 시댁 식구들이 임실에 회사 하나가 생겼다고 알려주시길래 신량이 지원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중략) 저는 N잡러예요. 여기 평균 급여가 너무 낮아서 직장도 다니고, 지역 굿즈 만드는 공방에서 지역 기념품도 만들고, 아이들 체험이랑 학교 진로 직업 체험도 교육하고 있어요.” (사례자6)

- 더욱이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오늘날 청년들은 자신의 역할을 바탕으로 로컬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도적으로 탐색·창출하여 생계를 확보하고 지역에 정주하고 있음
- 이들은 본인의 전공 및 관심사에 더해 지역의 기후·환경, 특산물, 유통 접근성 등 지역 고유의 특성과 기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주지를 선택하는데, 전북 지역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환경과 풍부한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로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이주·정주 대상지가 되고 있음

“저는 장수에서 유기농 산양유 제조 목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엔 연고가 없는데 목장을 운영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중략) 저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입시 미술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그러다가 ‘내 인생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인구가 줄고 출산율이 줄어갈 거고, 교육사업은 온라인으로 변할 것 같았죠. 여행 하고 싶다는 욕구도 있었고요. ‘내가 동물 관리학을 전공했는데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고, 그러다 보니 ‘축산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을 죽이는 건 싫고…. 그러다 보니 방자유정란 아니면 낙농 아니면 산양 이런 거였는데…. 환경 규제라든지 자금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보니 산양을 키우는 게 나에게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합한 곳이 어디일까 찾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인구가 좀 적은 데를 찾았어요. 인구가 많은 곳은 경쟁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사실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인구가 없는 데 가서 잘해서 도드라지는 사람이 된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죠. 강원도 정선, 영월, 태백, 경북 영양, 봉화, 청송, 이런 곳을 좀 알아보다가 귀농 박람회 갔는데 거기서 장수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이었죠. 동물을 키우기 위한 환경이요. 온난화가 있으니까 온도에 대한 영향이 좀 적고 가축 질병에 이점도 있는 고산지대였으면 좋겠고, 대전, 광주, 대구 3대 광역시 중간에 있어 교통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에 산불 때문에 좀 난리였는데 산불이 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 이슈가 크게 없었던 곳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데 땅값이 좀 저렴하고….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서 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장수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사례자2)

“저도 서울에 살다가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귀농을 결심했어요. 여차저차 금산으로 귀농해서 망고를 했었는데, 재배 기술이랑 품종에 맞는 기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배 기술은 재능이 없는 편이라서 포기를 했고, 기후가 제일 적절한 데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니까 산간 지역이 제일 낫겠다고요. 왜냐하면 난방은 문제가 안 되고, 일교차나 이런 것들이 기술을 웃도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교차가 과일의 육질이나 당도에 주는 영향은 다른 길로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최근 농업 트렌드는 난방보다는 냉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난방은 요즘 기술로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고, 출하 시기를 당기면 조 수익이 확실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 실력이 부족한 만큼 그걸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인 무주에 와서 망고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자3)

“주류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법학을 전공해서 취업했었는데 일도 적었고 월급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창업해서 일도 마음껏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중략) 외가가 고창인데요. 사실은 명절 말고는 와본 적이 없었는데 외할머니가 담금주는 잘 담가서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려고 여기에 와서 제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아이템이 있으니 복분자주 담금주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 스토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고창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었죠. 지금은 국화, 해당화, 벚꽃, 목련, 아카시아 11도랑 15도 2개씩 해서 10개량 복분자주를 론칭했고...” (사례자5)

“전북은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존에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회사가 임실 관광을 많이 하는데 지역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갈 수 있어서 시너지를 얻게 되고요. 전북에 제 제품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요.” (사례자6)

- 또한, 전북 지역의 다양한 취·창업 및 주거 지원 정책은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과 생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며, 유입·정주의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생활비 및 창업지원금 보조, 사무공간 및 거주지 제공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은 유입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주로의 전환을 유도함. 아울러 ‘로컬라이즈 군산’과 같은 지역재생·창업 프로젝트와 지자체 담당자의 적극적인 멘토링 제공은 유입·정주 가능성을 높임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군산에 정착해서 지역과 관련된 로컬 관련 행사 기획이나 운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군산을 선택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언더독스(창업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 3개월 정도 단기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게 끝날 때쯤 ‘로컬라이즈 군산(SK E&S의 지역재생 프로젝트)’이라는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언더독스 내부에서 거기서 일할 사람을 찾겠다고 해서 군산으로 오게 됐어요. 안 잘리고 일할 수 있다면 그냥 다 괜찮았어요. 일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숙소랑 이런 지원들도 다 된다고 했거든요.” (사례자4)

“(이주를 고민하던) 당시에 전북에서 지원 사업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사례자3)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전북산학융합원에서 하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제가 구직하고 나서 집 근처 산책하다가 플랜카드 보고 직접 신청했어요. 여기로 이주한 중견기업이랑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2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 보조해 주고, 기업도 인당 160만 원 정도 주는... 또 계속 재직하고 있으면 1년을 추가로 연에 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고요. 회사는 인건비로 아마 3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착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례자1)

“장수군 사업 지원을 받았어요. 청년 사업. ‘청년 레벨업 사업’이라든지 청년 스타트업 같은 거요. 전북도 사업은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받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는 장수군 사업으로 3천만 원짜리 70% 보조사업이랑 천만 원짜리 100%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계를 늘린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대출이 아니라 지원이라서 진짜 좋은 혜택이었어요. 꼭 필요할 때, 진짜 조금씩 부족하다 싶은 것들을 채워줘서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장수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니까 알기도 쉬웠고요. 모를 수가 없어요. (중략) 제 사례는 아닌데 저를 보고 들어온 청년은 장수군에서 빈집을 수리해서 4년간 무료로 임대해주는 게 있어요. 임대료랑 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서 사실 거의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들어왔고...” (사례자2)

“아무것도 없이 차비만 들고 왔었는데 군청에 가서 주류 제조업하고 싶다 하니까 주무관님이 주류 창업하신 50~60대 어른을 소개해 주시면서 여쭙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더니 큰 도움이 되었어요. 땅 부지나 이런 정보들도 다 알음알음 네트워크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주무관님 도움이 컸어요.” (사례자5)

“저는 석사 과정 중에 만들어진 아이템으로 창업했어요.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시스템 솔루션이 제 아이템이었는데, 영업을하려고 익산에 방문했다가 역으로 영업을 당했어요. ‘우리가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에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당신 같은 청년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하면 지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잘해줄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청년시청 담당자가 저를 꼬신거죠. 사무실 임대료가 40만 원인가 그렇대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싸지 않다고 했더니 1년에 40만 원이래요. 제가 서울에서 졸업했는데 이게 서울이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공유오피스 한 자리당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제가 꼭 내려갈 테니 내년에 잘해봅시다’ 해서 이주 오게 되었어요. 건물 하나에 20개 기업 정도가 같이 입주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네트워킹도 잘 되고 정보 공유도 잘 되니까 협업하기도 하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공유하기도 해서 좋아요. 네트워킹 지원이나 행사가 따로 있진 않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알아서 잘 되더라고요. 동료 창업자들이 맛있는 곳도 데려가고 여행도 시켜주시고 멀리서 온 손님이나 떠나지 않게 잘 해줘야 한다면서... (중략) 서울에 사는 이유가 내 집이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서울에 집이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저도 없었고요. 직장이야 저는 창업했으니까 법인소재지 바꾸면 되어서 쉽게 이주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제가 이런 게 있어서 초기에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약속한 대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나 월세 지원 같은 것들을 지역에서 지원도 많이 해줬고, 생활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원래는 3일은 서울에 있다가 나머지는 여기에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대로 됐죠. 일주일 대부분을 여기에 있고, 하루 정도만 서울에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살고 있어요. (중략) 저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만하냐고 느낄 정도로 만족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전세로 원룸에 살 돈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데 주거 지원 사업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례자7)

■ 지역 일자리 관련 구조적 제약으로 인한 정착·정주 불안정

- 전북 지역 이주자들은 새로운 취·창업 기회와 정책지원이 있음에도, 지역 내 제한된 일자리 구조와 낮은 임금 수준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주자들은 직업 재탐색이나 다중직업 전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존 취·창업 정책지원의 확대·보완 없이는 정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여성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와 성별화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취업 기회의 제약이 두드러지며, 낮은 소득 보장성과 고용 불안정성, 경직된 일자리 구조 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재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다시 일자리 얻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 2년 동안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받았어요. 저는 좀 좋았던 케이스였는데도요. 처음 들어갔던 데가 축산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시골의 유지들이 보통 축산업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도량도 연결돼 있고, 전국이랑도 연결돼 있었어요. 서울도 가고, 전북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에 이런 데가 있구나’ 알게 되고…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데도요. (중략) 퇴근 후엔 작은 도서관에서 반장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페이가 너무 낮아요. 지금 제가 여기 내려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받았던 급여와 지금 최저임금 제로 계산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조금 조금씩 하는 알바식으로 짧게 짧게 하는 단기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N잡러로 살게 된…” (사례자6)

“지방에 살면 생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산 같은 경우는 완주, 익산이랑 해서 3대 제조업 도시잖아요. 여자들이 일할 만한 데가 많이 없어요. (중략) 서울에 살면 아무래도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라든가 그런 게 아무래도 인프라가 크다 보니까 많잖아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문화도 남성적이고… 그리고 새만금에 2차 전지 제조업 공장 같은 거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지지부진해요. 서비스업도 GM대우랑 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생계적인 부분이… 지방에선 여자들이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기 어려울 거예요. (중략) 일자리가 없는 걸 창업으로 자꾸 푸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역에서의 창업이라는 게… 저도 여기서 일을 다시 찾아야 했으면 내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창업은 그나마 지원이라도 있죠, ‘내가 그냥 지역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내려오면 할 게 없어요.” (사례자1)

“군산에 더 있을 방법이 없으면 그만두겠다 해서 그때 일은 그만뒀어요. 그런데 다른 일을 찾아볼 때 제가 해왔던 방식의 일자리가 지역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창업을 시작했어요. 명확하게 아이템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지역에서 오래 살려면 일을… 2차 전지이라고 해야 하나요? 직업을 아예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사례자4)

“제가 19년도 청창농 선정자인데, 교류하는 사람 중에 저 혼자 농업 해요. 다 그만두고 돌아가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흔히들 청창농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요. 지원금까지 반납하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생계유지가 안 되거든요. 지원 조건도 좋고, 대출 조건도 좋고, 너무 좋은데… 근데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받쳐줘야 하거든요. 소득만 좀 되면 아주 이상적이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소득을 못 버니까 사람들이 포기해요. 실제로 청창농 지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취직이 안 되는 조건이었는데 어느 정도 허용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어려워니까요.” (사례자2)

■ 제도 경직성과 시장 왜곡으로 인한 정착·정주 기반 약화

- 청년창업농 지원, 주거비 보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희망 키움 사업, 청년 스테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자체 지원은 이주 초기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나 거주 불안 없이 지역 탐색과 정착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지역 내 원활한 정착·정주를 촉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 운용의 경직성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실제 이주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이들이 정착·정주에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자격 요건의 획일적 적용은 실제 이주자들의 다양한 정착 경로와 전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저해하는 행정절차 및 해석의 보수성은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과 수혜 가능성을 제약하여 체감도와 정주 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청창농(청년창업농) 선정되는 건 다들 되는 거였고, 체류형 센터가 크게 도움이 됐어요.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데 나갈 때 사실은 안 나가고 싶었는데 겨울에 딱 끝나는 제도적인 문제는 있더라고요. 한 1~2월까지지만이라도 연장해 주면 좋는데 알뜰없이 12월에 나가라는 게… 아무튼 체류형 센터에 살면서 청창농 융자하는 거랑 땅도 알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유효했죠.” (사례자5)

“근데 근로하고 있으면 청창농 융자 안 되더라고요.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되고요. 물론 제도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이해하지만… 농업으로만 처음에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사례자6)

“행정 담당인과 저랑 이해관계가 전혀 맞지 않아요. 판단 기준이 모호하거나 전례가 없으면 민원인 실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업인이나 귀농인이 토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으려면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기준이 초본상 직전 주소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귀농 준비 중에 정착 지역을 변경했으면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귀농인 자격을 잃은 걸로 봐서 귀농 관련 보조사업을 전부 신청할 수도 없고요. 해당 주무관한테 판단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문의했지만 기준이 그렇다는 답변에 못 들었어요. (중략) 정착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정책들이 있지만 기준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책 수혜 기회도 전혀 균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하수 히트펌프 사용하려고 과수농가 관정 개발 사업 신청을 준비했는데 사업 대상 작물을 제한한다던가,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청창농 대출금을 자산에 포함한다던가…” (사례자3)

- 지원의 불안정성에 더해, 정책 수혜 정보의 확산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예컨대, 정책 취지를 퇴색시키는 임대료 상승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 왜곡과 비용 전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외부 자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과 단기 수익 추구는 로컬 상권의 활력 및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는 결국 정주 기반을 약화시켜 인구의 지속적 유입을 저해하고 재유출을 초래하게 됨

“‘희망 키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낸 사람이나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좀 많이 뵈다가 아무래도 점점 많이들 혜택을 받으시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받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월세가 100만 원부터 시작해요. 너희 그거 받지 않냐 하면서... 이제 그러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략) 주거 지원도 있기는 해요. ‘청년 스테이 주거 지원’이라고 LH에서 관리하는 공간에 빈집들을 연동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좀 너무 멀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 골라서 들어가면 월세나 이런 게 되게 저렴하긴 하지만요. 남은 공간으로 하다 보니 수량이 매번 다르기도 하고...” (사례자4)

“저는 로컬 문화가 형성되는 데 가장 방해되는 게 건물주들이라고 생각해요. 서울분들이 지역이 발달하면 부동산을 사세요. 부동산을 사서 건물주가 바뀌면 갑자기 임대료를 막 올려요. 로컬이 좋아서 건물을 산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고 더 비싸게 팔려고 산 거기 때문에 상권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임대료를 바짝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아요. 속초의 조양동이라고 속초 해변 앞에 피난민들이 와서 살던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로컬가게나 앵커시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임대료가 거의 6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이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양양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례자6)

- 실제 현장의 복합적 상황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제도 설계와 유연한 행정 운영, 정책 수혜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커뮤니티 약화와 기능 변질에 따른 정착 지원 한계

- 커뮤니티는 이주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로로 기능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는 이주자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역 커뮤니티의 폐쇄성·배타성, 형식적인 운영, 공적 차원의 연계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형성과 소속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교육 등 공동의 관심사가 존재한다면 자발적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일정 수준의 교류는 가능하지만, 공식 단체나 협의체의 적절한 연결 역할 수행 없이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정보의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또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 대부분 지역의 권력 단체로 전락하는 등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오히려 이주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더욱 저해할 수 있음

“외지에서 왔다는 경계심이 처음엔... 저는 앞에 나와서 말하고, 이걸 바꿔보자고 활동하는 깨어 있는 분들은 외지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협의회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전북에서도 올해 학교 관련해서 부회장을 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하는데,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서 되게 힘들어요. (중략) 학부모들은 ‘교육’이라는 공동 관심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교류는 돼요. 사실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커뮤니티가 읍면마다 지회가 있어서 이걸 해줘야 하는데 안 하세요. 제가 제안도 많이 하고, 많이 말씀드려봤는데 그분들은 그냥 지회장님들이 와서 밥 먹는 정도만 하고... 새로 온 사람들이 연결해 줘야 하는데 하지 않고요. 센터도 안 하고, 협의회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 돈들이 너무 아까워요. 청년협의체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하고...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활동도 안 하면서 직은 유지하고요.” (사례자6)

“군청에서 알려준 청년단체가 있는데, 기존에 농업인 위주에 유지나 2세, 3세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저같이 귀농하거나 도시에서 온 뉴페이스가 있었고요. 되게 잘 도와주고 친해지려고 하고 해서 정보나 네트워크 많이 받긴 했는데, 어느 단체든 사실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 보니까 운영할 때 폐단 내지는 배타성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거...” (사례자5)

- 더욱이 기 형성된 커뮤니티도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결속력 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연령대, 라이프스타일, 관심사의 이질성으로 인해 교류가 구심점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인 정보 교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동체 형성이나 소속감·유대감 고취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 중심의 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 중심의 관계 형성, 수혜 기반 참여 방식, 커뮤니티 간의 분절화는 커뮤니티 활동의 실리적 왜곡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지역 내에서 사적 지지·격려나 소속감 및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네트워크 구축, 창의적 활동 기반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존에 협의체가 있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모아 놓은 거였어요. 그랬다가 한 2년 전부터 청년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협의체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책 이런 거 논의하고, 만나고 이런 거는 좋은데 각자의 삶이 워낙에 다 다르고 바쁘다 보니까 어떠한 구심점이 딱 있을 때만 만나고, 카톡도 전체 카톡방이 있지만 구심점이 있을 때만 논의해요. 가끔 만나기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전체가 모이기는 힘들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커뮤니티가 엄청 활발하게 잘 된 다기보다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중략) 또 청년이 거의 만 49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청년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은 데도요. 어떤 분들은 20대 초반이고, 어떤 분들은 40대 후반인 거잖아요. 육아하는 아이들도 나이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커뮤니티가 결집하는 의미보다도 그냥 서로 정보 교류하는 정도죠.” (사례자2)

“저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청년정책협의회도 했고, 영농인들 모임도 했고, 사회지도활동도 하고 있고요. 보통 공식적인 단체들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상 한 명한테 5천만 원짜리 사업을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러기 위해서 내 일을 포기하고 일당을 포기하고 나가 줘야 하는 그런 걸로 전략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의 가치관이나 취지 같은 게 전혀 안 느껴져요. 기관 편의적인 행정이란 맞달아 있기도 하고... (중략) 영농하는 사람들끼리도 점조식으로 하는 소수의 모임... 진짜 그냥 서로 같이 힘들었던 사람들 유대감으로 형성된 모임이에요. 한 10명 이내. 그렇게 각자 각자 있는 거지, 이게 뭐 규합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그냥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사적인 모임 같은 거죠.” (사례자3)

“여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스스로 해야 해요. 그래서 힘든 거죠. 다들 와서 창업하기 바쁘다가 점차 정착하고 나니까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것저것 해보고 하는데, 지치는 거죠. 이게 또 창업가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랑 그냥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커뮤니티는 나뉘어져 있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좀 잘 섞이면 좋는데 하나로 뭉치기는 어렵고...” (사례자4)

“지원 사업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워진 점도 있어요. 나와 같이 무엇을 할 사람들을 찾기가 무척 어렵죠. 사실 정말 친분을 위해서 만나는 게 옛날에는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하나 기획해도 ‘돈 준대?’, ‘어디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식이 달라졌어요. (중략) ‘이거를 좀 사업화해 볼까?’ 하더라도 지원사업을 통해서 무료로 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형태로 되는 게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외지인들은 비싸다고 느끼지 않는데 여기 사람들은 무료 또는 저가에 익숙하다 보니까 수익화가 너무 어려워요.” (사례자7)

- 이주자들의 초기 적응·정착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중개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참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정주 만족도 저하와 재유출 가능성

-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주거비와 일부 생활물가가 체감상 낮아 대도시권에서 이주한 배경이 있는 개인일수록, 자연환경, 느슨한 경쟁, 소규모 교육환경 등의 삶의 방식에 가치를 두는 개인일수록 정주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또한, 동일한 소득수준 하에서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 정착·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특정 비교군 없는 지역살이 경험 자체가 정주 만족도를 안정적으로 제고하고 있지는 못함. 문화·여가, 교통, 주거, 소비환경 등 일상적 생활 인프라 부족은 정주 안정성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생활 편의시설 부족, 교통 인프라 미비,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족, 비현실적인 부동산 가격, 낮은 금융 접근성 등이 생활 전반에 대한 불편으로 이어져 재유출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역의 인프라 부족은 선택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자율성과 가치 실현에 제약을 주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울 때는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골도 똑같이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경제적인 걸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서도 어쨌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데 부지런만 떨면 사교육비를 드리지 않고도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좋아요. 경쟁도 없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국제학교 보내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 면에서 돈이 절약돼요. 그런데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통비야 무조건 차 타고 다녀야 하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차량도 무조건 한 집에 두 대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픽업 다녀야 하니까요. 생활환경 거리가 넓어요. (중략) 작은 학교를 다 둘러보고 분교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차도 안 오는데 제가 픽업할 수 있는 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TV에서 봤던 로망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리면 집중해 주고, 케어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방임이 돼버리더라고요. 시골에 왔으니까 저도 ‘자유롭게 놀아!’ 그랬는데 4학년이 되었는데도 구구단을 못 하는 거예요. 반에 3명밖에 없는데도.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친척들을 만나거나 하면 저학년인데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물론 학원을 많이 보내서 그만큼 비용이 들었겠지만, 우리 아이는 ABC도 모르니까 비교가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엄청 고민스러웠어요. 교육이 제일 아쉬워요. 저야 적응해서 살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 때문에 강제로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중략) 또 장 보러 갈 때도 지역이 장을 보러 가면 비싸서 싸게 사려면 전주로 나와야 해요. (중략)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32평대가 3억 후반, 40평대가 4억 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기 들어가느니 차라리 전주에 집을 사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게 비싼...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은행 가잖아요? 시골이라 시세가 안 잡혀서 대출 불가. 담보 대출이 안 나와요. 공무원이나 기본적으로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거주 공간이 부족하니까 공급이 적어서 무조건 비싸지더라고요.” (사례자6)

“배달이 없어서 강제로 돈이 아껴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대용량을 사려면 대전이나 이렇게 나가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덜 들거나 그런 건 아난... (중략) 제가 창업 교육을 하면서 창업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지역을 선택하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가 원하는 형태의 삶을 꾸리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그렇게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안에서도 잘하고 싶고, 더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분들은 내 삶의 규모가 작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에 많은 인프라가 없으면 가끔 맘 먹고 전주 가고, 용산 가서 영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랑 같이 왔던 분은 한 2년쯤 뒤엔가 서울로 돌아갔어요. 자기는 그런 문화생활이 자기 옆에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건 되게 다르잖아요. (중략) 저는 버티고 차를 안 사고 있긴 한데 다 거리가 있고 버스를 한 번 놓치면 1시간 뒤에 오니까...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돼 있는 편이 아니어서... 주변에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너무 불편해요. 지역 규모가 작은 데로 내려가면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사례자4)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는 말씀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집값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물가 정도가 서울 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청 낮아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물론 저희 회사 급여가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 급여를 받는 거는 서울이나 여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급여로 삶의 질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2평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최소 전셋값으로 2억 5천만 원이 들 텐데, 최근에 제가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전셋값이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지방에서 사는 게 윤택한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례자1)

- 지역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정주 유도를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통한 장기적인 정주 만족도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 창업정책의 구조적 편중과 생계형 창업·소상공인 배제

- 실제 지역 이주자 상당수는 생계형 창업을 통해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업 지원 정책이 기술 기반 창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재유출될 확률이 높은 기술 창업자들과 비교해 볼 때, 단기 성과보다는 지역 내 지속가능성과 정주 안정성을 추구하는 특성이 강한 생계형 창업자들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창업 기회가 제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이에 일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 프랜차이즈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지역 상권의 프랜차이즈 중심 재편을 가속화시켜 로컬 경제·문화 생태계의 고유성과 다양성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현행 로컬크리에이터나 지역특화 지원사업은 지역성과 차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소규모 창업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법인·단체 중심 지원체계는 개인 창업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정량적 기준(예: 연매출 1억)에 기반한 선정 방식은 소상공인 등 초기 창업자의 수혜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며 궁극적으로 로컬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기반 정주 유도라는 정책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창업 정책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창업이 보통 종류가 기술창업이 있고 생계형 창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도 그렇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창업 지원이 기술창업 중심이에요. 시로 새로운 거 발명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 세상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는 한두 명뿐이잖아요. 대부분은 다 실패하죠. 여성 창업자들이 살아남으려면 저는 생계형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 창업자들은 지원받고 한두 해 지나면 ‘힘들어, 다시 서울 올라갈래, 서울 가서 선생님 할래, 공무원 할래’ 이러세요. 지역에 많이 정착을 시키려면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해야 하는 거예요. 카페를 하겠다, 치킨집을 하겠다, 그런 거 컨설팅 잘 해주고 도움을 줘야 해요. 그 사람들은 기술 창업자들처럼 한 번에 ‘아이고 망했어. 난 돌아갈래’ 이러진 않잖아요. 쪽 가긴 하잖아요. 그래서 생계형 창업자들을 도와줘야 해요. 그게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중략) 기본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구성된다면 ‘여기 그래도 살기 괜찮겠네’하는 인식이 퍼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지역을 찾겠죠.” (사례자7)

“소상공인 지원한다는 게 약간 로컬크리에이터로 풀렸는데, 저희 팀 모두가 ‘난 로컬이 아닌가 봐’라고 말해요.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요건을 한 마디도 못 써요. 너무 어렵고… 지역성이라는 게… 더 기초적인 사업 분야에서도 뭐든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자꾸 ‘남들이랑 달라야 해’를 바라는… 나 혼자 있는 게 다른 건데, 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차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지원마저도 강한 사람을 찾아요. 법인이라든지 어떤 단체여야 하고요. 개인 사업자, 간이 사업자로도 버티고 다 하는데, 그런 영역에서 다 배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중략) 사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점핑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무언가 크게 계획해서 크게 한 사람들만 지원해 주니까 사람들이 지원 자체를 못 해요.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창업 자체를 자기는 소상공인 창업을 하고 싶은데 법인 단체 구성하라고 하니깐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창업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례자4)

“서류를 아무리 잘 써도 매출이 1억 이상이 나오는 데가 뵈혀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소상공인이 연매출 1억을 어떻게 만들죠? (중략) 기반 사업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매리트를 느끼지 않을까… (중략) 시골만의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프랜차이즈가 많아져요. 또 지역에서는 보통 시장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유치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상권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례자6)

- 이처럼 지역 일자리 관련 정책이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복잡한 자격 요건과 엄격한 선정 기준, 제한적인 조건 적용 등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극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제 생태계 조성과 이를 통한 유입·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경직된 조건 중심의 선별적 접근에서 포괄적이고 유연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

“저는 불만이 좀 많아요. 지역에서는 ‘우리 집 잔치하는데, 음식 진짜 많아. 맛있는 거 많으니까 놀러 와!’해서 막상 가면 ‘너 남자니까 안 돼. 너 30대면 이거 못 먹어.’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견어내고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청년정책 같은 경우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해요.” (사례자3)

- 지역에 적합한 창업 모델의 다양성과 접근성 확보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매력도를 강화하여 유입률·정주율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생계형·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컨설팅, 자율적인 점포 입지 선택권 보장, 개인·간이사업자 대상 보편적 지원 확대 등 생계형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관한 초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아울러,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나. 교육

■ 배움, 돌봄, 치유를 위한 교육 기반 지역 이주

- 전북 지역으로의 교육 기반 이주는 단순한 학령기 자녀 교육이나 개인의 학위 취득 목적을 넘어서 가족 돌봄의 재구성 또는 개인의 정체성과 가능성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님
- 이러한 배경에는 외부 이주자들에게 매력적인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예술·문화 중심의 특화된 교육 콘텐츠, 농촌 유학 프로그램,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다양한 교육 기회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전북 지역 고유의 교육 자원은 수도권과의 경쟁적이고 고비용 중심의 교육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며 유입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제 전공이 가야금이라서 ‘국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럼 국악은 전북이니까…” (사례자8)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뭐랄까… 변화가 좀 필요했어요. 그러던 차에 지인이 농촌 유학을 한 1년 정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아이들의 교육 방향이라든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하는 게 많이 통하는 지인이어서 그분이 선택한 거니까 의심을 안 하고 저도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덕에 전북에 왔어요. (중략) 저 올 때만 해도 전교생이 9명이었는데 지금은 38명 됐어요. 다 농촌 유학으로 와서요.” (사례자9)

“저는 원래 경기도 사람인데 대학교를 이곳으로 왔다가 그때부터 계속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중략)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돼서 (수도권으로) 올라갔었는데, 회의를 느꼈어요. 인생을 너무 다 직장에 허비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다시 제2의 고향 같은 익산으로 내려가서 활동해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내려왔죠. 그냥 활동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여기서 기회적인 자원? 그런 데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도권은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거기서보다는 이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략) 특히 청년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공감하실 건데 지역 청년들이 자꾸 유출되잖아요. ‘인구 유출이 수도권으로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례자11)

“제 남편은 아직 서울에 있고, 제가 애들 넷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입시 학원을 운영해서 너무 바쁘니까 제가 독박육아를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등·하원부터. 학교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가야 되고,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힘들잖아요. 제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방법을 알아보다가 농촌 유학을 알게 되어서 내려왔어요. (중략) 여기서도 저 혼자서도 케어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중략) 저는 경제적인 문제도 컸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희 집이랑 시부모님 댁 집의 월세를 다 내고 있었거든요. 두 집 월세 하면 300만 원 정도는 되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온 것도 있어요. (중략) 서울에선 아예 돈을 모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랑 아이들이 이곳으로 오면서 집을 뺐죠. 하나를 없애고 남편이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월세가 반이 줄었죠.” (사례자12)

- 교육 기반 지역 이주는 학교 교육뿐 아니라 주거환경의 질, 의료 접근성,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생활 기반 서비스와 정착 관련 제도 시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결과임
- 비록 도청이나 도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학교·지자체·지역 커뮤니티 차원의 정보 습득 편의성 제고(예: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주거 및 생활 인프라 지원, 정착·정주 지원조직(예: 청년시청) 운영은 이주 유인을 높이고, 초기 이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정착 지속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땐 너무 (정보가) 미미했어요. 농촌 유학 홈페이지도 당시에 있긴 있었는데 딱 뭔가 (필요한 정보가) 올라온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봤는데 학교마다 자기네로 오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 (중략) 처음에 혹했던 거는 고창에 무슨 초등학교가 바닷가 바로 앞인 거예요. 당시에는 강원도가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바닷가 앞 학교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사람이 살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류했어요. (중략) 무주도 봤어요. 스키 선수로 키워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스키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로 갈까 했는데 집세가 너무 비싸고, 애들이 많아서 층간 소음이 좀 예민한데 집이 빌라 형식이어서 ‘여차피 시골 갈 건데 왜 내가 또 빌라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근데 마침 순창군에서 좋은 집을 마련해주셔서 정착하게 되었죠. (중략) 농촌 유학은 도 교육청 플랫폼이 있는데, 도청 플랫폼은 못 봤어요.” (사례자9)

“다른 분들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학교에 문의해 보고 할지 몰라도 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신청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사례자10)

“여기는 군이지만 읍이랑 가까웠고, 순천에 있는 학교는 너무 번두리에 있으니까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집이 너무 작았어요.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작은 원룸이었거든요. 애들이 4명이니까 방이 2개는 있어야 하잖아요. (중략) 누리집 같은 농촌 유학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했어요. 직접 다니지는 않았고요. 홈페이지만 봐도 느낌이 와요. 웃풍 들고, 너무 오래된 집에 살아서 애들이 아프고 그러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신축으로 알아보려고 했고요. 같은 학년에 아이들의 남녀 구성 비율 봤고, 방과 후 활동이 뭐가 있는지 봤고요. 애들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뺐고... 그다음에 주거랑 유치원 있는 곳. 유치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그런 거 봤죠. (중략) 사실 저는 읍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한 20~30분은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가까워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접근성이 괜찮으니까 살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사례자12)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지원이 딱히 없었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청년시청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정착할 수 있겠다 싶어...” (사례자11)

- 또한, 교육 기반 이주는 교육 여건의 변화와 돌봄의 재구성을 통한 자신과 자녀의 심리·정서적 치유·회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현되기도 함
- 특히 학습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나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소규모 학급 운영, 공동체적 돌봄 환경 조성, 맞춤형 예술교육프로그램 마련, 특수 학급 운영 등 전북 지역의 포용적이고 유연한 교육환경이 중요한 이주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나아가 이러한 교육적 포용성과 유연성의 확대는 향후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정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저희 아이가 ADHD가 있어서 학교에 다니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중략) 발달도 2년 정도 느려서 치료실에 많이 데리고 다녔었어요. 언어치료, 놀이치료부터 시작해서 6년 넘게 데리고 다녔는데 제가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쳤고... 우리 애가 다른 애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나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학생 수가 별로 없는 농촌 유학을 가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다른 애들이 우리 애 때문에 피해를 덜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그래서 무주에 여자에 딱 하나가 다니는 학교가 있길래 신청했어요.” (사례자10)

“제 지인이 작년에 (농촌 유학을) 왔거든요?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는데)... 근데 온 지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너무 좋아졌어요.” (사례자9)

“저희는 예술고잖아요. 원래는 특수학급이 예술고에는 없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학교가 최초로 올해 만들어서 한 아이가 들어왔거든요. 이 친구가 지체 장애가 있는데 타악을 해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을 두드리고… 저희가 고등학교이지만 초4에서 중3까지 토요일 격주로 무료로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거를 전북권 아이들이 와서 듣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와서 배웠던 거예요. 드럼도 해보고, 발표회도 해보고… 재밌어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학교에 오고 싶다고 해서 특수 학급을 만들어서 입학한 거거든요. 너무 생활을 잘해요. 기악과 수업할 때 같이 수업 듣고요. 또 특수 학급 아이들은 그 아이들만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업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수업을 같이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해요. (중략) 내년엔 온다는 아이들도 2명이 있고, 그 후에도 대기가 쏙 있거든요. 저희가 7명이 넘으면 학급을 늘려야 하는데 학습할 교실이 없어서 7명까지만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사례자8)

■ 우수한 교육 자원의 전달 체계 미흡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농촌 유학 프로그램, 방과 후 및 주말 교육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교육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왔으나, 외부 지역, 특히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정보 전달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음
- 개별 학교·교사 차원의 학부모 소통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고, 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무상 프로그램과 유소년 스포츠단, 해외 연수 등 지역특화형 교육 기회도 제공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이주 유인으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는 못하고 있음

“전북도 농촌 유학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들여서 한 걸로 알아요.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홍보가 정말 안 되어 있어요. 강원도 보세요. 강원도가 농촌 유학 시작하자마자 몇천 대 1이었잖아요. 전북은 여기 안에서만 공들이신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위(수도권 사람들)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중략) 저 되게 반가웠던 게 제가 가끔 KTX 이용하는데 그때 순창 나오는 거. 위(수도권)에서는 솔직히 그런 공익 광고 볼 때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충북, 강원, 이런 데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강원도하고 가깝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전북자치도)나 강원도나 시간으로 따지면 비슷해요. 그런데도… (중략)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농촌 유학을 오면 (학교가) 천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걸로 해외 연수를 가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매년 5월에 테마로 가요. 일본 갔다가, 일러권 갔으니까 대만 갔다가, 그러면 중화권도 갔으니까 이제 영어권으로 해서 올해 필리핀에 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일본에 갈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도시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중략)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전북은 다 비슷비슷해요. 골프, 승마, 피아노, 미술, 수영… 저희 아이는 첫해에 유소년 승마단 1년 했는데, 저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헬멧부터 승마 바지, 부츠까지 장비를 다 줄 줄 몰랐어요. 놀랐어요. 진짜 조끼 빼고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회도 다 나가고… 사실 위(수도권)에서 승마를 배웠었는데 한 달에 14만 원을 냈었어요. 그런데 다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놀랐죠. (중략)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혹했던 그 방과 후 프로그램 질은 사실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내 돈 내고 하는 그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무상으로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중략) 작은 도서관이 활성이 잘 돼서 작은 도서관에도 데려다주고… 애들이 모든 활동이 다 끝나면 6시, 7시예요.” (사례자9)

“학교가 사업을 많이 따내면 (지원이 달라져요). A학교는 1억 정도 따내서 작년에도 전교생이 해외 가고, 독도 가고, 상하이 가고, 이번에도 며칠 있다가 오사카 가거든요. 사업을 잘 따내니까 해외로 막 가는 거예요. 저는 여권만 발급하면 돼요. 애들은 딱 용돈만 들고 해외 가는 거죠. (중략) 와서 보면 지역에서 해주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사례자10)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아이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연락해 주는 일도 자주 있는데, 나쁜 얘기가 아니라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학교에서 뭘 했는지 알려주시고, 사진 같은 것도 가끔 보내주세요. 매일 올려주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개를 한 번에 올려주시는데, 학교도 밴드가 있어서 야외 활동이라든지 자치 활동한 거를 찍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많아요. (중략)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영이라든가 골프를 학년별로 나눠서 하는데, 수영이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저희 남편도 거기 가서 애들이 건강해진다면 찬성이라고 했고요. 거의 그런 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면은 승마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기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수영을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려면 너무 비싸고, 저희는 애들도 많으니까… 애들이 뭘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잘 못 했는데 여기 와서 다 하니까 애들이 감사해해요. 여기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다 무료잖아요. (중략) 근데 사실 학교생활만 가지고는 좀 관리가 모자란 게 4시에 끝나잖아요. 저는 애들이 마냥 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보면 읍내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세요. 방과 후 끝나고 집에 왔을 때도 지역아동센터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방 알아봐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태권도 학원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매일은 아니어도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코딩 수업 있어서, 그걸 무료로 해주시니까 신청해서 수업 듣게 하고 있어요.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좋아요. (중략) 주말에도 여기에 애들이 할 게 있으면 서울이나 다른 데를 안 갈 거 아니예요? 유소년 스포츠단이 있는데 그게 또 저렴하거든요. 1년에 한 20만 원 되려나…. 그리고 이제 댄스라든지, 배구, 축구, 야구, 테니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중략) 유치원 너무 좋아요. 서울에 있는 일반 국공립 유치원을 다녔었거든요. 국공립 다니고, 병설이나 단설 이런 데를 주로 보냈는데 서울보다 여기가 좋은 게 엄마가 갈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애가 너무 가고 싶어 해요. 아파도 가고 싶어 해요. 너무 잘해주고… 몇 명 안 되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세요.” (사례자12)

- 따라서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한 인구 유입·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통합 홍보 플랫폼 구축, 타 지역민 대상의 전략적 홍보 강화,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전달 체계 정비가 필요함

■ 교육 경쟁력 및 중·고교 교육 연계 강화 필요

- 일부 타 시도에서 농촌 유학 지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 지역은 현행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주 가족이 자녀 교육과 정주를 장기적으로 계획·실현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

- 또한, 전북 지역의 농촌 유학은 초등교육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중·고등학교로의 교육 연계 체계가 미흡함. 이는 상급 학교 진학 시 교육 불연속성을 초래하여 이주 가족의 장기 정착·정주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대외 인지도가 높은 우수한 중·고등학교가 부족한 편이라 자녀 교육을 이유로 타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실 위(수도권)에서는 중학교 유명한 데가 화산중이랑, 청심(국제중)이었는데 어떤 책 때문에 영선중이 났어요. 지평선중은 대학 학교라서…. 전남 보성 용정중이랑 화산중, 영선중. 이 세 개가 지방에서 있는 학교 중에 되게 유명해요. 여기에 농촌 유학 왔던 분도 용정중학교에 붙어서 농촌 유학을 포기하고 아예 광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중략) 농촌 유학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니까 중·고등 교육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2까지 농촌 유학이 된다고 하는데 정작 농촌 유학을 받아주는 중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중략) 지원을 도 교육청만 중2까지 해줘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제 기준으로 70만 원을 받았던 게 30만 원이 되는 거죠. 저는 첫째 아이가 초·중·고까지 여기서 다녔으면 해요. 대학 갈 때 농촌 특별 전형 그게 되잖아요. 또 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원금이요. 입학금 얼마, 중학교 졸업하면 얼마,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동수당 이런 것도 있고요. (중략) 농촌 유학 조건이 3년인데 저는 5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남이 농촌 유학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전남중에서도 해남이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구례가 되게 핫해요. 구례만 5년으로 변경해서…. (중략) 농촌 유학이 3년 지원이라 전남에서 하다가 정읍으로 왔다가 그렇게 옮겨요. 그런데 만약에 전북에서 전남 가려면 1년 정도 거주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전북은 그런 게 없어요. 전남에서 바로 전북으로 올 수 있거든요. 전북이 그런 조건 없이 열려 있어서…. 그리고 원래는 한 번 순창을 선택하면 전학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 다 된대요. 무주도 갈 수 있고, 김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데, 1년은 마냥 행복하고 재밌었고, 2년 차 때는 마음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차피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새로 오신 농촌 유학 엄마들하고도 그렇고, 읍에 계신 엄마들하고도 그렇고요. 근데 올해는 또 그런 게 다 오해여서 풀렸고, 지지 층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머무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해더라고요.” (사례자9)

- 더욱이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 속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더디고 경직된 경향이 있음. AI·디지털 교육 도입, 기초 학습 프로그램 설계, 외국인 유학생 수용 등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접근보다는 타 시도 사례에 의존한 후발적 대응에 그치고 있고,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미흡하여 교육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됨

“근데 아마 다 비슷할 건데 저는 수도권에 있을 때는 당연히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서는 조금 느슨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전북이 정말 청년에 관련된 교육이나 복지, 이런 것도 너무 답답할 정도로 느려요. 사실 전남보다도 느리고, 경남이나 경북보다도 느린 게 전북이거든요. 정말 발 빠르게 교육을 준비하신다고 전북도에서 해도 2순위로이고…. 하다못해 뭐 요즘 하고 있는 챗GPT같은 것들이 다른 데서는 벌써 다 했는데 지금 이제야 현안이 되고 있고요. 전북이 경쟁력 있는 곳인데도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느리다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사례자11)

“들어와 살아보니깐 전북이 도시가 되게 세련되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아침에 책 읽기를 저희 애기는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우리 애가 여기 5학년 때 왔는데 안 하다가 6학년 때 되어서야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교육이 10년 넘게 늦게 되는 거거든요.” (사례자9)

“저도 교육이 항상 느리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친구도 사실은 저희가 한 6년 전부터 계속 도 교육청에 알아보고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안 됐었거든요. 실제로 6년이나 지나서야 입학했잖아요. 전북도에서도 이미 아이들이 숫자가 너무 줄어드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례가 있느냐?’였어요.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어서 조례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제주도 교육청, 제주도 다 알아보고 조례 찾아서 드렸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왔다는 건 올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생각의 전환이 빠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교육기관에서는 아이가 원하면 교육을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외국인 전형이요.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례를 드렸어요. 경북에서 하는 학교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도 직업 교육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도 직업 교육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전북은 예술이 있으니까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해서 딱 그것만 한다는 게... 서울에 있다가도 남원에 내려올 수 있잖아요. 전북도에 문화예술이 특성화되어 있는데 밀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경북에서 직업 교육을 했으면 우리는 확장해서 문화예술 분야를 했으면 어떨까...” (사례자8)

- 전북 지역 이주 매력도 제고와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해서는 농촌 유학 지원 기간 연장, 중등 교육단계의 농촌 유학 수용 확대, 지역 명문 중·고교 전략적 육성, 교육 혁신 및 지역특화형 교육 콘텐츠 발굴·확산 등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중·고교 교육 연계가 필요함

■ 전반적 생활 인프라 부족

- 기초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 주거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이주 가족의 정주 의향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음. 지역 내 병·의원의 제한적 운영시간, 소아·청소년과 부족 등의 불편이 지속되어 어린 자녀를 둔 이주 가족이 의료적 돌봄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주·정주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게 만듦
- 일정 수준의 정착지원금, 행복수당 등이 초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실제 주거비용, 과도한 공과금 부담 등은 정주 지속 결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도시 살다가 오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5시면 병원들이 다 문을 닫고….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는데 병원이 문을 다 닫아서 하는 수 없이 약국 가서 약만 받아왔는데…. 수요일 오후 진료도 없고…. 농촌에 더 적응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영업을 늦게까지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상비약을 항상 뒤야 하는…” (사례자10)

“저는 서울에서 농촌 유학 신청했을 때 6개월간 지원금을 받았어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전복과 협약이 돼 있어서 줬을 거예요. 아무튼 초기 정착비, 이사비를 충당했죠. 여기서도 정착지원금은 없었고, 농촌 유학으로 왔으니까, 학교에서 농촌 유학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행복 수당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있으니까 애들 식비라든지 그런 게 충당이 되고 남더라고요. 저는 월세 한 15만 원 정도에 공과금을 내는데… 그런데 최근에 오신 분들 보면 유학타운에 사는데 공과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왜 왔지?’ 싶은…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현타가 왔대요. 겨울에도 난방 많이 하지만 겨울이 아닐 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을 잘못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살 만하게 지어주지.’ 싶은 거죠. 공과금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부담되잖아요. 두 집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행히 저희 집은 그전에 지어서 LPG라 공과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새로 온 분들이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주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고 주거비가 많이 들면 부담돼서 오래 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전기세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오면 누구라도 그걸잖아요. (중략) 병원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특히 소아과가 없거든요. 혹시나 아이들이 크게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아픈 게 많이 줄었어요. 원래는 맨날 비염, 축농증, 이런 거 심해서 약을 거의 달고 살았는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 와서 약을 먹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사례자12)

- 반면, 전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도권과의 이동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라 농촌 유학과 같이 가족 구성원들이 분리되어서 지내는 경우 기존 생활 기반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해 주어 이주·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전남 같은 경우는 남편이 반대했어요. 저는 해남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너무 멀어지면 1년에 한번 가기도 힘들 것 같다고 반대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한 3시간이면 오는데, 거기는 5시간은 걸리잖아요. 버스도 잘 없고요. 그래도 여기는 직통 버스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례자12)

- 즉, 전북 지역 이주·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기초 의료 서비스 보장, 주거 여건 개선,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한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의 종합적 개선이 필요함

■ 지원정책의 변동성 최소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요구

- 전북지역 농촌 유학 관련 지원은 초기 이주 및 생활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정책 변동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는 경우 이주 가족의 거주 계획 수립과 생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농촌 유학을 포함한 이주·정착 지원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함

“올해 초인가? 24년 초인가? 도하고 군하고 해서 10만 원씩 2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그걸 이제 가구당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에 농촌 유학 온 엄마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갑자기 3월에 바꾸겠다고 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12월부터 2월 안에 이걸 연장할지 말지 고민하고, 연장을 안 할 거면 이사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농촌 유학분들이 2월 말까지 전입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모든 걸 다 마쳐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대로 갈 거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 1년은 좀 아쉬우니까 연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바꾼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지원금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그러면 진짜 돈 보고 온 거냐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생활비가 들지만 또 아빠 생활비까지 이중으로 생활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공과금이다, 뭐다 해서 못해도 한 달에 백만 원은 필요해요. 저 진짜 가스보일러만 쓰다가 기름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집이 좁고... 그래서 뭔가 지원을 할 때 변동 없이 그냥 쪽 안정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바뀐다고 했을 때, 한 명이면 30만 원, 2명이면 40만 원, 3명이면 50만 원, 이렇게 증가된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꾸준히 변동 없이 좀 가졌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솔직히 애들 데리고 와서 불안하잖아요. 그게 좀 불만이에요.” (사례자9)

■ 부모 일자리 연계 및 가족동반 정주 지원 강화 필요

- 부모(특히 아버지)의 괜찮은 일자리 및 지역 내 경제활동 기반 부족으로 인해 농촌 유학은 주로 가족 단위 지속 정주가 아니라 학령기 자녀와 모의 한시적 이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어머니의 경우 지역 내 돌봄 관련 업무나 공공기관 단기 근로 등 많은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만, 아버지의 경우 전북 지역으로의 이주 후 생계 기반 확보가 불확실하므로 통근이나 분리 거주를 선택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지역 정착을 저해하고 농촌 유학 이후 재이탈률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

“아빠까지 내려왔으면 장기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아빠가 안 왔기 때문에 결국 저 혼자 아이들 둘을 돌보잖아요. 아빠가 와서 좀 도와줘야 하는데 일 때문에 내려오기 어렵고...” (사례자10)

“주변에 농촌 유학을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지내는 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농촌 유학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사례자12)

“아빠는 일자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통근하시더라고요. 보통 교육은… 부모들은 아이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다 오고 싶은데 직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통근 거리 2시간 정도인데 그냥 통근하세요. 안 그러면 엄마만 오든지, 아니면 기숙사로 아이만 보내든지 하시는….” (사례자8)

“근데 시골에 내려와서 남자가 할 게 없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좀 할 게 많은데, 남자들은 주변에서 보면… 한 집은 아빠가 내려왔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고, 아빠는 집에서 애를 봐요. (중략) 저희 학교에도 있지만 다른 농촌 유학하는 학교의 엄마들 보면 늘봄실무사,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면사무소가 가깝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면사무소에서 알바도 하거든요. 애들이 학교 가고, 도서관 갔다 오면 6시니까 근무 시간도 딱 맞는 거예요. 늘봄실무사도 10시에 출근했다가 3~4시면 끝나니까 가능한데, 아빠들은 그렇게 해서는 가정을 꾸리기 힘들잖아요. (중략) 자격증 시험 준비도 좀 지원하고 하면 좋겠어요. (중략) 부모들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거 노력은 하시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례자9)

- 부모의 지역 내 재취업·직장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 일자리 연계 모델 등 가족동반 정주를 촉진할 수 있는 생계 기반 마련 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와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나 연고가 없는 이주자는 지역 주민의 배타적 인식, 라이프스타일 차이 등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 적응 및 지역민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나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기도 함. 지역사회 내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실패는 정착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음
- 반면, 선이주자와의 비공식적 멘토링, 커뮤니티센터 중심의 이주자 간 네트워크 형성, 지역 행사 및 공공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 등은 지역사회 적응·정착을 돕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함

“뭐가 자꾸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갑작스러운 게 많아요. 모임도 그렇고… 미리 알려주는 게 없어요. 여류가 없어요. (중략)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랑 멘토링?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례자10)

“원래는 두 집밖에 없어서 사실 커뮤니티라고 할 게 딱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농촌 유학이 12가정이 되고 나서 거기 커뮤니티센터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엄마들끼리 티타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기적이진 않지만요. (중략) 저희는 주변에 마을이 없어서 괜찮은데, 지금 유학 센터가 만들어진 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애들이 12가구면 한 집당 2명만 잡아도 20명이 넘잖아요. 개네가 막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뛰어놀고 하니까 언덕 위에 타운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죠. 또 개구리 잡는다고 옆에 있는 논에 들어가서... 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위험하고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질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체계가 갖춰져야겠죠.” (사례자12)

“농촌 유학할 때 지원을 받아요. 현금 지원이요. 도 교육청에서 한 가정당 원래 가족 체류형 기준으로 하면 3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올해 또 바뀌었어요. 1명이면 30만 원, 2명이면 40만 원, 3명이면 50만 원으로. 그리고 또 추가로 시에서 10만 원, 군에서 10만 원, 그게 1인당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도 교육청하고, 전북도청하고, 군하고, 이렇게 세 곳에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중략) 저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받았어요. 문제는 저희가 공짜로 혜택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들 생각하는데, 제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남는 걸로 전기세 내면 끝나요. 근데 또 여기 집 공과금도 있지만 위(수도권)에도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지원금이 많다!’라고 하는데, 다 공짜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싶어요. (중략) 월세도 다양해요. 행복주택으로 고친 집은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야 해서 공짜로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40만 원 내는 집도 있고, 50만 원 내는 집도 있고... (중략) 도에서 농촌 유학 가족을 위해서 집을 공짜로 임대하는 집(농촌 유학용 체류형 하우스 지원사업)을 짓는다는데 저희는 그게 26년도에 완공될 예정이에요. (중략) 농촌 적응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건 농촌 유학은 없어요. 귀농귀촌센터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예 교육청 소속이라고 생각하니까. (중략) 그나마 신경 써주는 데가 전주 귀농귀촌센터. 농촌 유학 1회차 때랑 2회차 때 그 센터 통해서 전북에 있는 농촌 유학 엄마들을 다 만나서 교류하고 그랬어요. (중략) 저는 운이 좋았는데, 옆집에 유지이신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그 어머니가 예뻐해 주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저희(농촌 유학 가족)끼리 너무 잘 사는 걸 보니까 마을 사람들과 융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군민 체육대회를 나갔어요. 지금 온몸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맨날 저녁 7시마다 줄다리기 같은 거 연습하고요. 내 저녁이 없는 삶이 되니까 귀찮을 수 있죠. 근데 이게 1년 내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딱 10일 정도 거든요. 이것만 하면 동네에서 돌아다닐 때 편하다고 제가 농촌 유학 오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편이에요. 진짜 1년에 한 번, 4월이랑 10월만 딱 해드리면 1년이 편하거든요. 군민 체육대회랑 축제도. 축제할 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니까,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해야 하고요. (중략) 도시는 굉장히 느슨한데 여기는 끈끈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힘들면 지내기 어려워요.” (사례자9)

“처음에는 사실 지역사회에 배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고가 없이 여기서 제가 자립적으로 청년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누굴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서 너 어디 고등학교 나왔더라?’더라 고요. (중략) 제가 보기엔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기 연고 사람 아니잖아.’라는 의미로...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지역사회는 어렵구나...’하고 생각했어요. (중략) 지금은 어느 정도 활동하고, 조금 인정받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소됐다고 할까요? 싹 없어졌어요. ‘여기 고등학교 안 나와도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례자11)

- 멘토링 프로그램, 이주자 대상 지역생활 적응 교육, 지역 주민 대상 이주 지원 이해 교육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정착 초기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비정형 발달 아동·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도입 제안

- 전북 지역은 치유·돌봄 관련 교육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ADHD나 경계선 지능 아동과 같은 비정형 발달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비함.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질환 또는 장애군에 특화된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나, 확진 장애에 한정된 지원 기준 적용으로 인해 비정형 발달 아동과 같은 일부 취약 아동이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아이 치유나 ADHD에 관련된 지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과 제도의 혜택을 다 빠져나가거든요. 확실한 장애가 있으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 ADHD이거나 경계선 지능 같은 것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증명하기가 힘들거든요. (중략) 그런 것까지 해준다면 정말 완벽하겠죠. (중략) 진안인가는 농촌 유학을 아토피 쪽으로 하고, 장수가 장애인 특화로 (농촌 유학을) 해요. 그런 건 있는데 ADHD나 경계선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사례자10)

- K-POP 등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예술과 같은 지역 특화 교육을 목적으로 전북에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유학생 수용과 관련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체계가 매우 미비한 상황임
- 특히 언어 장벽이 비교적 낮은 예술·문화 분야조차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인원 충족 등의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외국인 학생 유치와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국인 전형 역시 정원 외로 국한되어 국내·외 학생의 교육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 현시점에서 외국인 전형 도입·확대, 유학생 수용을 위한 전담 행정 지원체계 구축, 지역특화비자 분야 확대·개선, 소규모 유학생 맞춤형 언어·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교육적인 면에서… 루마니아 학생이 K-POP을 보다가 ‘이거 재밌겠네’ 해서 사물놀이를 했는데 거문고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거문고를 배우다가 거문고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다 안 받으셔서 저희한테도 유학 올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하고 싶은 아이는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유학 와 있어요. (중략) 그런데 이 아이를 유학으로 받으려고 보니까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그거를 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도 교육청에서도 ‘제도가 있긴 있어. 그런데 너희가 알아서 해’ 하니까 교무부장 선생님이 대사관이란 연결해 보고….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분증 전해드리고, 유학 비자 받아야 해서 비자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됐어요. 이 절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또 아이가 와서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는 게 있어서 해보려고 했더니 인원이 차야만 되는 거래요. 안 그러면 아이가 못 배우는 건데,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가 뭐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한두 명밖에 없을 텐데…. 인원이 안 차더라도 한두 명이더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중략) K-POP이 알려지면서부터 댄스도 있고, 한국무용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걸 배우러 오고 싶어 해요. 외국인 유학생을 올해 처음으로 받는데 직업 교육으로만 받아요. 근데 사실은 예술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습득이 가능한 분야잖아요. 악기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언어가 되면 더 좋지만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전형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외국인 학생은 정원 내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외국에서 온다는 아이들은 꽤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다꿈’이라는 무슨 시스템이 하나 있어서 정원 외로 오거든요. 외국인 전학으로 2학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MOU가 돼 있어서 몽골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교육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될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예술하는 애들이 많지 않은데, 몇 명이 안 채워지면 폐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외국인 아이들이 와주면 우리 국내 아이들도 폐과가 안 되어서 교육받을 수 있거든요.” (사례자8)

- 발달·정서적 취약 아동과 가족,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다. 귀촌(귀농, 귀어, 귀산촌)

■ 삶의 질과 일자리 대안을 위한 지역 이주

- 귀촌 사례자의 지역 이주는 주로 웰빙 추구하고 생계 및 일자리 등 경제적인 문제를 지역살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됨
- 일부 사례는 반복된 일상과 직업적 스트레스 누적, 삶의 만족도 저하,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 휴식에 대한 갈망이 발생했을 때 환경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삶의 질을 회복하고자 지역으로 이주

“(이전 일자리를) 20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중략) 언니가 좀 아파서 건강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 그다음에 저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좀 땡가땡가 놀려고 하는 그런 거. 이게 딱 시점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시골살이를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아는 데도 없고 소개도 없어서 해마다 우연히 상하면서 하룻밤 자고 고창이라는 데가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꽃혀가지고… (중략) 몸이나 마음에 병이 왔을 때, 지치고 그럴 때, 그때 지역을 찾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례자13)

“타이트하게 4~5년을 살다 보니 그런(교사로서의) 사명감도 줄어드는 것 같고, 사람을 너무 만나다 보니까 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전혀 모르는 공간에 가는 방법이 있고, 내가 잘 아는 공간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공간에 와 있자는 생각을 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착했어요. 계획적으로 정착했다기보다는요. 아무튼 쉽기 필요하다가 주된 동기였습니다.” (사례자14)

“건설 쪽 공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되게 사람들도 거칠고 밀수도 많이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이전 일자리) 오래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딴 거를 좀 알아보다가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18)

- 또 다른 사례는 기존 생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고용 불안정성,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내 자원과 일자리 기회를 활용하고자 지역으로 이주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회사 분위기도 좋고 재미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돈이었거든요. 월급쟁이니까요 월급이 다잡아요. (중략)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어요. 잔금까지 다 됐는데 똑같은 급여가 들어오더라고요. 제 윗분은 다시 얘기해 본다는데 전 이미 끝났어요. 원래 사업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찾다가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농업을 6차 산업이라고 엄청 밀었어요. 제 부모님이 어업을 하셔서 솔직히 말해서 돈이 되는 걸 알았는데 그냥 어업만 하서는 안 되고 6차 산업을 하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서울권이나 제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연봉이 높아요 어차피 한계는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 빨라져서 40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잘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빚을 갚아야 되고 그게(서울에서 사는 게) 저는 좀 싫었어요.” (사례자15)

“농대를 졸업하고 필리핀 환경청에서도 잠깐 근무하고 마카오 월드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도 해서 내가 장사하는 걸 굉장히 잘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생산해서 팔아야겠다가 됐던 거죠. 제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 융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까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중략) 농사를 지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 하다가 어머니께서 김제시가 이모작을 한다고 추천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몇 필지만 있어도 최저 생계비가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귀농하게 됐죠.” (사례자16)

“이제 딱 거(일자리)를 좀 알아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전주에 조그마한 땅을 경매받은 게 있어서 그 땅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농을 할까 해가지고 교육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여기(전북특별자치도)가 좋은 게 전북인력개발원인가 거기서 교육이 되게 많더라고요. 교육이 많이 있어서 받다가 스마트팜이 조금 붐이 일어서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18)

■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청년 귀농인 유입 및 정착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더불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온 점은 귀농인, 특히 청년 귀농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함. 이러한 제도는 청년 귀농인의 초기 생활 안정과 스마트팜 창업 기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생활비를 위해서 귀농하게 됐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기존의 농업에서 스마트팜으로 도약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저 때는 청년 창업농이었거든요. 영농 정착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비, 그리고 토지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저만의 사업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점차 성장하지 않았나...” (사례자16)

“현재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총 한 17명 정도? 11명에서 17명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이제 3억 1,000만 원 지원이죠. 총사업비 4억 4천.” (사례자14)

-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부 구조적인 한계도 지적되고 있음
-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교육사업을 통해 매년 일정 규모의 청년 농업인이 배출되고 있어 귀농에 따른 지역 이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토마토·딸기 등 특정 작목에 대한 편중으로 인해 시장이 포화 상태에 근접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신규 발굴과 조정이 요구됨

“신기한 게 저는 농사(스마트팜 작물 재배)를 처음 하는 사람인데도 안 망했어요. 망한 사람이 없어요.” (사례자18)

“토마토는 몇 년 동안 가격이 좋았어요. 그래서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내리막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파산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거예요. 토마토는 꼭대기에 와 있어요. 전국에서 1인당 소비량이 한 6.9kg 정도 돼요. 이걸 맞추려면 1,424ha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토마토 면적이 딱 그만큼이에요. (중략) 교육생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이에요. 네 군데 혁신밸리에서 50명씩 배출하니까 200명씩 나와요. 1년에 200명씩이요. 그중에 10%만 투자를 한다고 치면... 토마토, 딸기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서 가장 포화가 (심하죠).” (사례자14)

- 또한, 정책의 과도한 ‘청년 중심’ 설계는 기존 농업인(귀농인 포함)의 상대적 박탈감, 멘토에 대한 과중한 책임 전가와 낮은 보상, 형식적 심사에 따른 보조금 과잉 지급과

공정성·형평성 훼손 등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귀농인 유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존 농업인 간의 균형 있는 지원체계 구축, 수혜자 선정 기준의 정교화, 정책 실효성 강화 등이 필요함

“이미 장수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공모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농사를 큰 규모로 운영하거나,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은행을 다니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야 먹고살려고 찾아보고 계속 시도했던 거고.” (사례자17)

“근데 확실히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최대 경계가 49세.” (사례자13)

“멘토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멘티에게 정책의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가 청년에게 가 있으니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멘토-멘티 사업이 있으면 멘토에게는 40만 원을 주고 멘티에게는 80만 원을 줘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책임은 멘토가 져야 해요. 그러면 멘토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내 일을 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멘티를 책임을 지고 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멘티를 받아서 교육 시켜달라고 기술센터나 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거꾸로 (지원)해도 멘토가 할까 말까 한데 정책이 잘못됐죠. 두 번째로는 그 시군이나 기술센터에서 주는 사업에 청년 할당률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주민들도) 똑같이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이데 만약에 지원했을 때 비슷한 성적이라도 청년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존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청년을 육성하면 육성할수록 내가 배제되는 거죠. 새로 온 청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줄수록 손해인 거죠. 기술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만 배척, 배제되는 게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중략) 농업 쪽은 이미 밥그릇을 뺏기고 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단지 기존 농업인에게 너무 보수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지원을 8 대 2라든지 7대 3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데… 지원자에 상관없이 청년농을 우선하다 보니 훨씬 매출이 많은 기존농도 떨어져요. 청년농이 그냥 0원으로 지원해도 청년농은 100% 지원. 아무리 능력 좋은 사람이라도 기존농은 탈락. 그래서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정착은 아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중략) 지원사업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줄 만한 사람한테… 만약에 청년 대상이 없으면 기존농 중에 뽑아서 또 줘도 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사례자14)

“청년을 육성한다는 명목 하에 지금 너무 돈을 허투루 쓰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기존농들에게는 그게 진짜 단비 같은 느낌일 텐데 청년농들은 솔직히 노력하지 않아도 (지원)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못 받으면 화를 내요. (중략) 청창농 처음 선정될 때는 어마어마한 계획서를 냈어야 했어요. 충분히 설득할 수 없으면 다 떨어졌죠. 그때는 경쟁률이 꽤 높았고 지금은 낮아요. 지금은 3만 명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그냥 다 붙여줘요. 5년까지의 계획도 너무 허술한데도 다 합격이고 돈(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돈을 정말 농업에 쓰기보다는 투기 목적으로도 많이 써요. 땅 이만큼 사놓는 거죠. 저도 청년농으로써 손해자이긴 하지만 청년에게 우대해 주는 것처럼 하는 청년농 육성 정책은 좀 실 패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3억 정도의 시설만 하면 돼요. 근데 청년농들이 이게 공동같은 느낌이 드니까 7억, 8억짜리로 오버해서 투자해요. 누가 봐도 최첨단처럼 그럴싸해 보이려고요.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스마트팜, 스마트팜하니까 TV에 나오는 네덜란드식의 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아요. 업자들도 사실은 500만 원이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이걸 2,500만 원을 받아요. 청년농들은 일단 은행에서 빌려준 돈이니까 2,500에 하고요. 그러면서 스마트팜 물가 상승이 일어났죠.” (사례자16)

■ 귀어인 유입 및 정착 지원프로그램 부족

-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귀농 분야에 비해, 귀어 분야는 유입 촉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귀어·귀촌 교육은 실질적인 현장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금융 및 자금 지원 역시 제한적이어서 예비 귀어인의 초기 진입과 자립 기반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귀농은 있는데, 귀어는 거의 그냥 (지원정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저야 부안이 고향이라 수산업 분야에서 부안의 장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주해 왔지만… (얼마나 지원프로그램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가 제일 많이 올 거예요. 회사 메일이나 전화로 ‘저 귀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라고. (중략) (처음 귀어로 왔을 때) 텃세도 많았고, 저도 이제 선원으로 배웠죠. 17년도에 내려와서는 이제 선원 일을 거의 1년 했고, 18년도 여름부터 배를 지어가지고, 19년도 딱 해 바뀌면서 이제 제 거 선장이 됐었죠. (중략) 정착하는 데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찾아와서 배우고… (중략) 모든 일들이 막상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잖아요. (중략) 귀어귀촌학교 있잖아요. 근데 귀어귀촌 학교는 뭐하냐면 눈으로만 교육해요. 배도 나가긴 하는데 구경만 해요. 실제 어업이 아니라. 그래서 귀어가 성공적이지 않아요. 실습교육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가서 체험 현장 학습을 (해야 해요.) (중략) 청년 귀농 지원은 5억으로 올랐는데 귀어는 아직도 3억이에요. 또 들어오려면 귀어 지금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협이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해준다고… 부안은 달았고, 여기 중앙 수협 전주에 있는 데도 달았대요, 최근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례자15)

- 더욱이 이러한 공공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 귀어인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선배 어업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어촌 지역 내 뿌리 깊은 텃세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이중의 고초를 겪고 있음

“그나마 저는 고향에 친구도 있고 뭐라도 있으니까 정 붙이고 그랬지, 지금도 심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뭐라 하시냐면 지금 교육하는 교육생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할 자리를 뺏는다고...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시골에 있는 특히 제가 농업도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어업은 아직도 마찬가지예요(텃세가 심해요). 심지어 이거는 인권 유린이죠. 작년에 50대 부부가 오셨어요. 아들 뒷바라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TV나 이런 거 봤을 때 어업이 이제 돈이 되는 거를 아니까 하러 오셨는데 어촌계장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인 게 금어기 때 어구 손질을 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너네 일 알려주니까 공짜로 일하라고. 그분들도 절박하니까 했나 봐요. 그랬으면 (어업이 가능하면) 기본적인, 하다못해 최저임금이라도 줘야 하는데 돈을 거의 안 주셨더라고요.” (사례자 15)

■ 귀촌인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 현재 귀촌(귀농·귀어·귀산촌)인을 위한 정책은 지역 유입 과정에서 제공되는 획일적인 소규모·분산형 지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정착·정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지원금의) 문제는 이제 그 돈 가지고도 택도 없다는 거죠.” (사례자14)

“처음에 왔을 때 지원받으라고 1억을 갖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뭘 할지도 모르고 농사도 모르고 하니까요. 언니랑 제가 도시에서 장을 20년을 담귀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군에서 1억 원을 갖다주면서 하라는 거야. 아직 항아리도 안 샀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1~2년 지나니까 돈이 없어서 군청 가서 지원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연매출액이 몇억이내요. 아니 신생 업체가 무슨 몇억이예요. 몇천도 안 된다고 했더니 뭐 몇억이어야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립하기 시작했어요.” (사례자13)

- 특히 성장·육성 단계에 진입한 귀촌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배제되거나 제한됨으로써 정착의 지속성·안정성과 지역 내 파급효과가 저해되고 있음

“지원금을 새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농촌이나 어촌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써야 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저도 작년에 이렇게 회사 키우면서, 공장 확장하는 데 쓴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저는 10억 원이 내려오면 정말 까다롭게 심사해서 큰돈을 줘도 될만한 곳에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장이 또 지원받아서 더 커지면 인프라가 되는 거잖아요. 혼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세금도 내야 할 거고, 지역 발전도 이루어지고, 누군가 그걸 보고 오는 사람도 생길 거고. (중략) 초기에 조그마하게 할 때는 괜찮는데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례자15)

- 그러므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유입 촉진 중심에서 선별적 집중지원,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 자동화·첨단화·고도화 지원 등으로 전환하고, 기존 귀촌인의 내실 있는 육성을 통해 지역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 10억 원이 내려오면 잘게 쪼개서 500만 원짜리 몇 명, 1,000만 원짜리 몇 명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 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더 써서 이 사업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충남이랑 거래하면서 보니까, 샐러드 유통을 충남이랑 하는데 충남은 10억 원짜리 저온 저장고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물어봤더니 충남은 사업 액수를 쪼개지 말고 집중육성하라고 공문 같은 게 내려왔대요. 이거 10명 줘서 10명 다 망하는 것보다 1명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파이를 키우는 게 맞다는 거죠. (중략) 그쪽은 집중화가 잘 돼 있으니까, 저희가 오히려 하청업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전복이 상 위권이었는데 이제 거기로 가는... (중략) 충남이 샐러드 시장의 중심지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집중육성을 해주니까 충남이 그 인프라로 강원도고 경기도고 전북이고 전남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샐러드를 다 사서 가공해서 현장에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뺏기고 있어요. 버 같은 것도 타 시군이나 타 도로 뺏기는 게 엄청 많아요.” (사례자14)

“농업은 스마트팜도 있고 수산업보다 나은 것 같은데 수산업은 낙후된 산업 중 하나예요. 진짜 다 손으로 해야 해요.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낙후가 돼요. 농업도 사람이 줄지만 어업은 5년 안에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줄 겁니다. 지금 65세 이상 가구가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안에 거의 없어져요. (중략) 수산업 자체를 키워야 해요. 시스템화를 해야 하죠. 자동화도 해야 될 거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중략) 일례로 노르웨이 있잖아요. 노르웨이가 이제 수산 선진국이죠. 거의 전 세계 1등인데, 개네는 3,500톤. 우리 유람선만 한 게 어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사자가 7명이에요. 선장하고 선원인데 다 기계화니까. 제 배는 3톤이거든요. 근데 저까지 5명, 6명이 타요.” (사례자15)

■ 지역정착 관련 정보 획득 경로와 개선점

- 귀촌인의 도내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보 획득은 주로 개인의 적극적인 탐색, 청년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용,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비공식적 전달 등의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음

“저는 농사도 아니고 그냥 귀촌이고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인터넷 사이트도 많이 찾아보고, 현장에 귀농귀촌 센터도 가보고, 청년과도 가보고. (중략) 여기(전북자치도)에 청년허브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청년들이 하는 활동을, 장수에서 퇴근하면 전주에 맨날 가서 그런 모임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 저 같은 청년, 14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지를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원사업 있으니까 이거 해 봐, 저런 지원사업 있으니까 저거 해 봐 이렇게 알려주셔서... 처음에는 지자체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 동아리 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짜리 지원사업으로 1년 동아리를 운영하고, 다음 연도에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행안부에서 하는 경로 대회 개최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전북에서 하는 청년 도약 프로젝트를 하고, 한 번 어떤 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을 알게 되니까 행정에서도 사업들을 알려주시고, 저도 더 관심 있게 찾아보게 돼요. 찾다 보니 로컬크리에이터 초기 창업 패키지같이 엄청나게 지원이 많은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아이টে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토대로 단계별로 계속 성장했죠. 하다 보면 역량이 올라가고...” (사례자17)

“2010년도에 기술원에 농촌관광, 관광 경영대를 1년 동안 다녔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아카데미까지 해서 관광학부에서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해서 수료가 아니라 졸업장, 개근상까지 받았어요. (중략) 제가 젊은 층에 속하니까 모든 교육은 먼저 연락이 와요. 참석도 잘하니까.” (사례자13)

-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배경 및 역량, 정보 접근성 등에 따라 정책 수혜 격차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정보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 및 전달 시스템 구축·강화가 필요함

라. 은퇴자

■ 은퇴 후 제2의 삶 실현을 위한 지역 이주

- 은퇴자 유형의 지역 정착민들은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라, 제2의 삶을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전북 지역을 주체적으로 선택함
- 이들은 은퇴 전부터 계획한 전원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 창업, 사회활동,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

“저한테는 연고도 없고 생소한 지역이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시골 생활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삶이었고 그래서 지금 애초에 내려오기 전부터 계획했던 거지만 조그마한 민박 공간을 집이랑 같이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중략) 퇴직 이후 계획으로 생각해 왔던 게 펜션을 해보고 싶었어요. 직접 지은 펜션.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직하기 직전 한 3년 동안은 펜션 시장에 관한 스테디를 나름대로 좀 했었는데 잘못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워낙 시장이 과포화 상태인 데다가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하다가 안 되면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펜션 계획을 접고 민박을...” (사례자19)

“마지막 퇴직을 군산에서 하면서 군산 지역의 땅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것이 꽃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산 지역의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꽃을 길러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돈벌이도 없이 그냥 이렇게 꿈만 벌려놓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시청에다 대고 ‘말원식물을 심자’, ‘요즘에 벌들이 죽었으니, 우리가 인력을 덜 테니까 당신들이 작은 돈이라도, 노인 일자리 식으로라도 해서 임금을 주라’고 해서 지금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섯 군데에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자21)

“저는 34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고향으로 다시 왔습니다. 절대 객지 생활은 아니다 싶어서... 거기서 자녀들을 다 학교, 시집, 장가보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략) 저는 도시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시골 마을로 총각 때 나가서 할아버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16년째 쪽귀농·귀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순창군민 농촌협의회 회장도 한 5년 하고, 그다음에 군마다 있는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람들 교육시키는. 그 센터장도 몇 년 하고 하면서 멘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한 3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이 좀 뜸해요.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은퇴해서 귀촌 (많이 하십니다.) (중략) 저는 바빠서 아플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요. 아침밥을 먹으면 9시, 늦어도 9시 반 안에 집을 나갑니다. 우리 경영센터나 협의회 들리고,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요. 또 여가생활을 즐겨요. 요새는 붓글씨, 한지 공예, 오만 걸 다 배우고 다니고. 나이 먹었지만,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해요. 그렇게 그냥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례자22)

“저희 부부는 퇴직하면 귀촌해서 전원생활 하자고 옛날부터 계획해 왔어요. (중략) 김제는 노인 인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김제에 들어오기 5년 전에 내가 이사 갈 지역에서 뭘 좀 활용을 할까 싶어서 사회복지 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중략) 귀촌해서는 귀농 교육을 받았죠. 그게 마지막에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시간이 있거든요. 김제의 관광지를 도는데, 아리랑 문학마을이 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아리랑, 태백산맥 싹 다 읽었거든요. 해설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한 20여 년 전에 읽었던 아리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리 좋은 직업이 있구나.’ 생각해서 그런 것 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시청에서 모집한대요. 그래서 응시해가지고 지금 문화 해설사로 있습니다.” (사례자20)

“제가 노인 일자리 식으로 밀원식물 심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한테 작년에 어떠셨냐고 여쭙 보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행복했다고 해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서로서로 알게 되고,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람을 친구로 맺게 돼서요. (중략) 그래서 저는 뭐가 됐든지 간에 자격증을 따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자격증으로 인해서 모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생활하면서 또 다른 삶,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단니까요.” (사례자21)

■ 지역 자원 기반의 매력적인 정주 공간

- 자연환경, 경관, 복지 인프라, 빈집 활용 가능성, 저렴한 토지 등 풍부하고 우수한 지역 자원은 지역 선택의 주요 요인이자,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한 3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귀촌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우리 퇴직하면 고향(섬)에 갑시다.’ 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도시 생활했으니까, 문화생활도 해야 되니까 살 지역을 한 번 찾아봅시다’ 했어요. 그렇게 찾고 있는데 2012년에 김제에 시골집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빈집을 봐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2년도에 시골집을 사고, 한 10여 년간 계속 주말 농사지으러 다녔죠. 근데 이제 시골 생활을 해보니까 별레가 너무 많고 밤 되면 캄캄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 집을 17년도에 샀어요. 거기도 역시 빈 집이었죠. 이사를 나가고 한 5년 정도 된 빈 주택인데 그걸 사서 22년도에 밀어버리고 신축했어요. 퇴직하고 바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만족해요. (중략) 딱 지리산 모퉁이를 본 것 같은 그런 공원이 우리 거실하고 마주 보고 있어서 너무 만족해요. 또 시어머니가 연세가 드니까 복지센터 다니셨고… 지금은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김제는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사례자20)

“무주에 땅을 사서 우리 가족이 살 살림 공간과 딱 한 팀만 숙박 가능한 그런 농어촌 민박 공간을 하려고 계획했어요. 공간 경쟁력을 좀 갖춘 그런 민박으로 세련되고, 깔끔해서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그 대신 객실 단가를 조금 높게 하고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입지 조건을 따져봤는데 무주가 덕유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으니까 선택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영업 공간이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리조트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고, 또 너무 외진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집에서도 전망이 좋았으면 좋겠고, 마을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거나 너무 멀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조건이 다 마음에 들면서 가격은 싸으면 좋겠고요. 근데 집 지어놓고 살면서 정말 이 땅 구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집안 어디에서든 보이는 풍경이 정말 좋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사례자19)

“내가 살 땅은 내가 구해 보자.’ 해서 풍수를 공부했어요. 집터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군산에) 와 보니 제가 풍수에서 배웠던 교과서적인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달려들었더니 비싼 땅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을 놓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딱 집을 지으려고 달려드니까 이 경사도 때문에 못 짓는대요. 3년을 시랑 싸웠어요. 경사 때문에. 토목 측량하는 분이 산을 깎으면 된다고 해서 결국 3m를 깎아 내고 집을 지었어요.” (사례자21)

■ 정착·정주 저해 요인 : 지역사회 폐쇄성과 인적 네트워크 부재

- 이주 준비 단계에서 외부 인구는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접근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자원 및 주거지 탐색·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선주민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와 안내가 초기 진입 장벽의 해소와 정착 안정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은퇴자를 포함한 외부 유입 인구의 원활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멘티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비롯한 지역사회 연계형 네트워크 구축과 역외 인구를 위한 정보 전달 체계 마련 및 활성화가 필요함

“귀촌한 분들은 외딴집, 그다음에 산자락, 그다음에 물가, 이런 데를 원해요. 저는 강조하는 것이 절대 물가 좋아하지 말고 산자락 좋아하지 말란 겁니다. 산자락도 절개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같이 수수한 데는 잘 안 무너지지만, 절개지는 반드시 비가 오고 무너지거든.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들 보고 물가 좋아하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외딴집은 마을의 번두리 집은 몰라도 일단 이웃사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농인들한테 집, 땅 전부 소개해 주고 안내해 줘요. 순창에 한 8,600명 귀농인 중에서 2022년도 말 통계를 보니까 4,684명이 제 손을 거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람으로... 진짜 보람 있고 참 좋아요.” (사례자22)

“저는 소개해 준 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로 맨땅에 헤딩했어요. 이삿짐 꾸려서 읍내에 빌라 얻어가 지고 한 6개월 동안은 매일매일 땅 보러 다녔어요. 땅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동안에 여기 저기 살살이 훑고 다녔어요.” (사례자19)

“시골집은 쉽게 샀는데 시내 집을 사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시내 집 사는데 한 2~3년 걸렸습니다.” (사례자20)

“귀농·귀촌 정보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들, 내려와. 정부에서 3억 준다. 그놈 가지고 집 짓고 나랑 여기서 농사 같이 짓자’ 하는 거예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부재한 상태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남들이 다 하는 거, 쉽게 하는 거, 뭐 딸기 하우스, 토마토 하우스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포화 상태예요. 진짜 정보를 현재 살고 계신 분들한테 먼저 주지 말고, 귀촌을, 귀농을 원하는 젊은이들한테 연락을 통해서라도 보내줘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지역으로 들어와서 잘 살 수 있게...” (사례자21)

- 지역 유입 인구와 원주민 간 갈등으로 인식되는 이른바 ‘텃세’는 일방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 문화와 의식 차이에서 비롯된 양 방향적 문제로 볼 수 있음
- 지역소멸 위기와 생활 인프라 축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주민의 수용성과 정착민의 적응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 이해 기반의 통합적 관계 구축이 필요함

“소위 말하는 텃세가 귀농·귀촌인이 100명이면 100가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반드시 원주민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드시 귀농·귀촌인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 유독 배타적인 마을 주민들한테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귀농·귀촌인한테 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농·귀촌인들은 원주민들한테,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오신 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어른으로서 존중하고 예를 갖춰서 공경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도 좀 필요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귀농·귀촌인은) 내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담장 쌓고 울타리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의식 세계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네 것과 내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내 영역 안으로 조금이라도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용납 못 하는 거죠. 도시 사람들은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어디 그런가요? 앞집 경계가 우리 집 창고 절반을 지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환경과 그 환경에서 형성된 의식이 너무 간극이 큰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귀농·귀촌인들은 텃세라고 말하고, 원주민들은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고요. (중략) 근데 원주민들은... 농촌 지역은, 중소 지방 도시도 그렇지만, 인구감소, 또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읍내만 살아도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읍내에서 벗어나서 면 단위로 들어가면요, 정말 심각해요. 이러다가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는 날도 올 거예요. 지금 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70 후반에서 90 초반까지가 가장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마을을 떠나고 있고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마을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마을이 거의 빈집, 정말 흉물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 소재지는 어떠냐 하면, 일반적으로 면 단위 인구가 3천 명 이하로 떨어지면 생활 기반, 생활 인프라가 붕괴된대요. 예를 들면, 면 소재지에 있는 의원이 문을 닫고, 약국이 문을 닫고, 세탁소가 문을 닫고, 이발소가 문을 닫고요. 지금 면 단위가 거의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생활 기반 시설들이 붕괴되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원주민들도 외지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을, 좀 이렇게(수용적으로) 의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례자19)

■ 은퇴자 유입 및 정착 지원정책 미비

- 은퇴자의 지역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들은 현실적으로 비공식 민간 네트워크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응을 시도하고 있음

“저는 (지역 이주 관련해서) 지원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 회원가입이랑 조합활동이랑 귀농교육지원센터 각종 기본교육을 수료한 게 귀촌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지만...” (사례자20)
 “저도 없습니다.” (사례자21)

■ 은퇴자 유입 및 정착 지원정책 방향 제안

- 은퇴 후 전북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이들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유입 정책은 여전히 다양한 인구를 위한 지원보다는 ‘귀농’ 중심의 농촌 활성화 측면에 편중되어 있어, 은퇴자 등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농업 이주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극히 제한적인 실정임
- 즉, 정책 설계와 정책 대상의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인의 95%가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지 않는, 다른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귀촌인이예요. 귀촌 후에 농업으로 시프트 하는 인구까지 포함해도 귀농은 십몇 퍼센트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정부의 지원 정책을 보면 귀촌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자잘한 것들뿐이에요. 이사비 같은 거요. 근데 귀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은 큰 게 있죠.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마련 7,500만 원. 물론 그것도 나중에 원리금 상환 들어가면 굉장히 벅찬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귀농·귀촌인의 대다수는 귀촌인인데도 불구하고 굶직한 정책 지원은 귀농에 포커싱 돼 있는 게 저는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사례자19)

- 또한, 관련 정책이 획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이주자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귀농·귀촌이 농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구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귀농·귀촌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농업의 문제로 포커싱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잖아요. 거기서 전체적인 큰 정책을 세우고 밑으로 하달하면 전북도에서 그 정책에 맞춰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다시 기초지자체로 내려보내면 군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영리 사단법인 귀농·귀촌 협의회나 센터로 이관해서 거기서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귀농·귀촌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관심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문제고, 인구활력과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예산도 전부 다 매칭 사업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고 특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귀농·귀촌 정책이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갈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특색으로 차별화 돼야 해요.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똑같이 하잖아요. 사업량과 사업 내용 다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똑같다고요. 박람회도 가보면 부스 쪽 돌아봐도 똑같아요.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은 지자체마다 다 똑같아. 차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그래야 예산 운영의 폭도 넓힐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가 해보고 싶은 사업을 독자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중략) 귀농·귀촌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2차 베이비 붐 은퇴가 막 시작되고 하니까 정책을 잘 운용하면 인구를 더 늘릴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다시 점검해서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인 게 아니라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고,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략) 좀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문제를... 무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봤다가 작년에 인구관리과를 신설해서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변화를 꾀했다는 게 저는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례자19)

- 단순한 정착 자금 등 일회성·현금성 지원보다 더 실효적인 방안은 문화·여가·복지 등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특히 소규모 문화공간이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의 확보 및 집적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은 정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소속감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

“시골에 인프라가 거의 없잖아요? 저희 동네에 보면 먼 소재지에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서관이 붙어 있는데, 도서관은 그냥 옛날 학교방·판잣집, 작은방·같아요. 도서관은 놀이터 개념의 도서관, 카페 개념의 도서관, 옛날 만화방 개념의 도서관이 되어 주어야 해요. 도서관하고 동네 카페를 옆에다가 붙이기만 해도 노인 양반들이 언제든지 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아이들이 책보는 걸 보고 즐길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면사무소에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또 도서관이랑 분리되었어요. 왜 그렇게…” (사례자21)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문화생활을 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문화생활을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문화생활을 접해본 분들이잖아요. 그 요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라도 문화생활을 즐길만한 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례자21)

“‘돈을 지원해서 인구를 늘려보겠다’라는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을 거로 생각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여기로 오면 정말 살기 좋다, 큰 불편 없이 시골 생활을 즐기면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와서 보니 생활 기반 시설이 다 붕괴되어 있고, 살기 정말 불편하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어떤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들 큰 매리트가 없죠. 여기 이미 귀촌해서 잘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홍보 수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면 오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면 뭐를 지원해 주고,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고… 이거는 사실 큰 규모의 스마트팜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소수일뿐더러 귀촌인들한테는 매리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제 주변을 봐도 어떤 정책 지원을 보고 여기로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로 왔죠. 자연환경이 좋아서, 무주가 좋아서, 연고가 있어서, 이런 이유죠.” (사례자19)

- 타지역에서 은퇴 후 도내 지역으로 이주한 역외 유입 인구가 정착 초기 단계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임. 특히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해 온 경우, 지속적 정착·정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초기 주택 매입·건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정주 기반 마련이 어려움

- 이에 일본 사례처럼 노인 인구의 주택이 사후 빈집으로 전환되기 전에 선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빈집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 이주 희망자가 이를 임시 주거지로 활용하여 중·장기간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역 탐색과 정착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제가 최근에 어떤 일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 노인들이 몇 년 안에 다 돌아가셔서 그 집들이 도심 속에 공동화가 된대요. 근데 그 빈집을 일본에서는 정책적으로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정부 기관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사후에 매매되든가, 기증하든가, 미리 얼마를 준다든가, 아무튼 미리 계약해서 계약서 서류화가 다 되더라고요. 그 후 돌아가시면 집이 수년 방치가 안 되고 바로 시에서 관여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더라고요. 우리도 20% 이상 공동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빈집이 경관을 망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이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정부가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중략) 시에서 국민주택처럼 관리해서 사람들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사례자20)

“정책적으로 이런 거는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데, 귀농·귀촌인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집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귀농이든 귀촌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꽤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겪는 불안 중 하나는 내가 과연 여기서 제대로 터 잡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불안한 과정을 어느 정도 겪기 마련이에요. 그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덜컥 집을 짓는다든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임시 체류형 시설들이 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단기간만 머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한 1년? 최대 3년? 그 정도의 기간동안 지자체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여기에 와서 걱정 말고 지내면서 집을 지을 거면 땅도 알아볼 수 있고, 지역 탐구도 해가면서 어느 곳이 나에게 맞을 것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좀 쌓고...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걱정 없이 머물 수 있는 거주시설을 많이 늘려가면 귀농·귀촌인들이 겪는 초기의 불안정한 과정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자19)

- 인구 유입 정책을 ‘농촌 유지’가 아닌 ‘지역 정주와 인구 활력 제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다양한 배경의 이주자들을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의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전략 마련과 정책 자율성 확대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체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 유입에만 중점을 둔 지원을 넘어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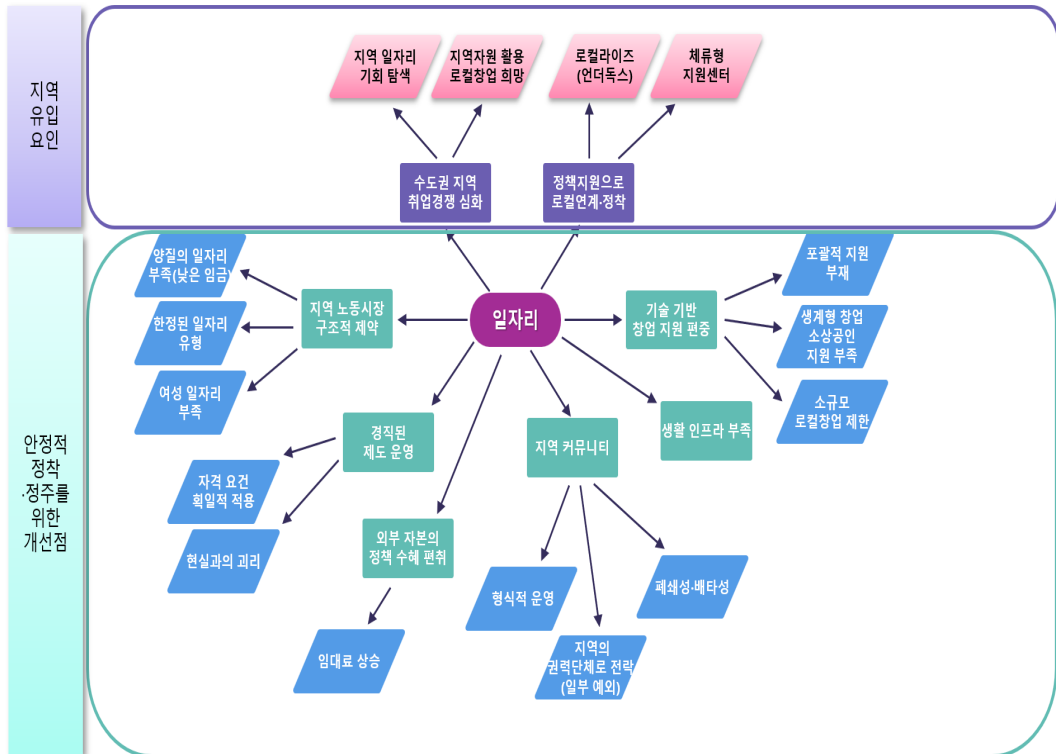
-
-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이주 희망자들이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 탐색하는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전환기 거주 공간’을 공공적으로 확보·확충하고, 고령자의 빈집을 사전 계약 방식으로 관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거주지 마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외부인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정주 안정성과 지역 내 주거 자원의 순환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 소결 및 시사점

- 전북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크게 일자리, 교육, 귀촌(귀농, 귀어, 귀산촌), 은퇴자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주된 이주 요인과 안정적인 정착·정주 유도 측면의 정책적 요구 및 과제가 상이하게 나타남

■ 일자리 유형

- (이주 계기와 유인) 수도권의 취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이직이나 로컬창업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연고가 없는 이들도 지도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찾아 전북 지역으로 이주해 오고 있으며, 로컬라이즈 사업, 체류 시설 제공, 창업 지원금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주 초기에 일자리 연계나 지역 탐색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정착·정주 유도를 위한 개선점) 그러나 전북 지역의 노동시장이 구조적·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기술창업과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체 중심의 편중된 정책 설계로 인해 실제 이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생계형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따라 로컬 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는 이주·정착 유인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정주를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 (정책제언)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수용하고, 생계형 창업자·소상공인·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의 유연화,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포괄적이고 체감도 높은 일자리 기반 지역 정착지원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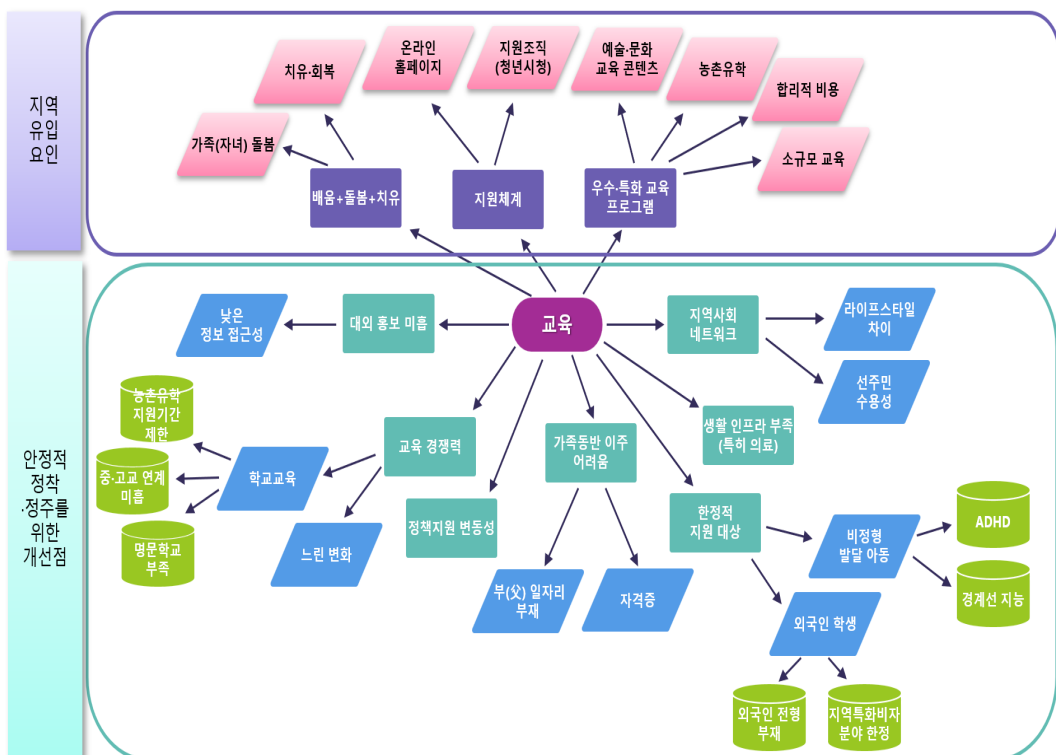
[그림 3-3] 일자리 유형 내용 유목화

■ 교육 유형

- (이주 계기와 유인) 학령기 자녀 교육이나 본인의 학위 취득뿐 아니라 가족 돌봄의 재구성, 심리·정서적 치유, 자아실현 등 복합적인 계기가 전북 지역으로의 이주 실현으로 이어짐
- 예술·문화 중심의 특화 교육 콘텐츠, 농촌 유학 프로그램, 소규모 학급 운영, 공동체 돌봄 환경, 비교적 낮은 교육비, 다양한 학습 기회 등이 경쟁적이고 고비용 중심인 대도시 교육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정보체계가 지역 탐색과 이주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 (정착·정주 유도를 위한 개선점) 우수한 교육 자원에도 불구하고, 중등 교육으로의 연

계, 명문 중·고교 육성, 농촌 유학 지원 기간 확대 등 중·장기적인 교육 경로 설계가 미흡하며, 교육프로그램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 교육 경쟁력이 낮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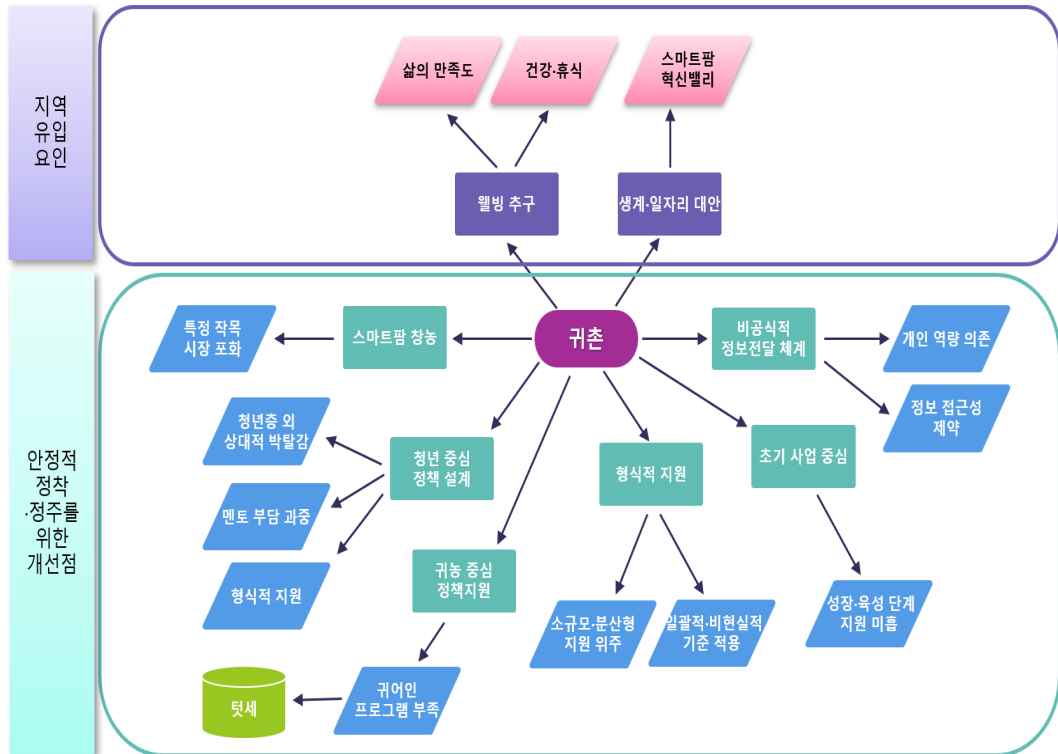
- 또한, 아버지 일자리 연계 부재와 생활인프라 부족이 가족동반 정주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광역 차원의 통합 홍보 체계 부재, 외국인 유학생·취약 아동 수용체계 부족 등도 인구 유입·정착을 저해하는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정책제언) 지역 명문 중·고교 육성과 연계 확대, 교육 콘텐츠의 지역특화 및 다변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 유학생 수용 기반 조성, 발달·정서적 취약 아동에 대한 포용적 교육 시스템 도입이 병행되어야 하며, 가족 단위 정착 유도를 위한 일자리 연계와 생활 기반 서비스 확충, 광역 차원의 홍보·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기반 지역 정착 유인을 강화해 나가야 함



[그림 3-4] 교육 유형 내용 유목화

■ 귀촌(귀농, 귀어, 귀산촌) 유형

- (이주 계기와 유인) 귀농, 귀어, 귀산촌을 포함하는 귀촌은 삶의 질 향상이나 생계 불안 확보를 위한 지역살이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기반한 스마트팜 창업 지원, 정착금 지원 등이 청년 귀농인을 유입하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정착·정주 유도를 위한 개선점) 작목 편중 및 과도한 청년 중심 정책 설계는 시장 포화로 인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어려움, 기존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멘토에게 과중한 부담 전가 등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정책 실효성을 저해함
- 귀어 분야는 귀농 대비 체험·교육·금융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현저히 부족하고, 어촌 내 폐쇄적 관행과 텃세 등으로 인해 예비 귀어인의 이주·정착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귀촌인 정착 지원이 현재는 초기 유입 중심의 분산형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성장 단계별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정주 유도로 이어지기가 어려움
- (정책제언) 향후 정책은 초기 유입 촉진 위주의 단기 지원에서 내실 있는 성장 단계별 육성과 정착 기반 강화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귀농뿐 아니라 귀어, 귀산촌 등 다양한 귀촌 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공공 주도의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정착·정주 지속성을 높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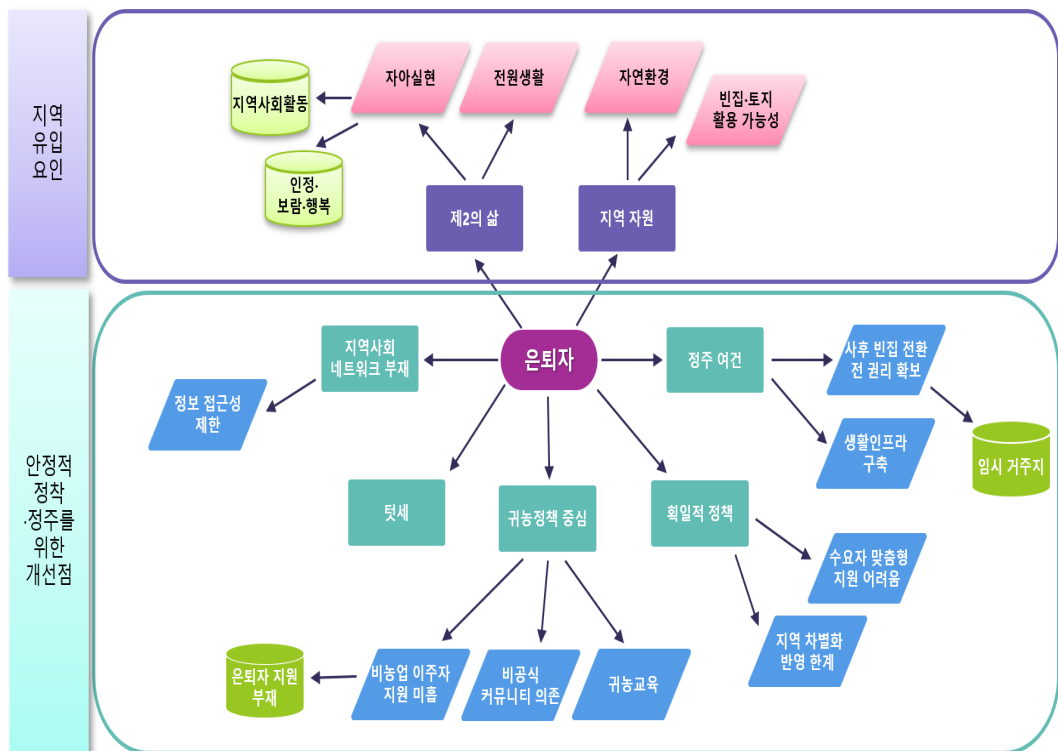


[그림 3-5] 귀촌(귀농, 귀어, 귀산촌) 유형 내용 유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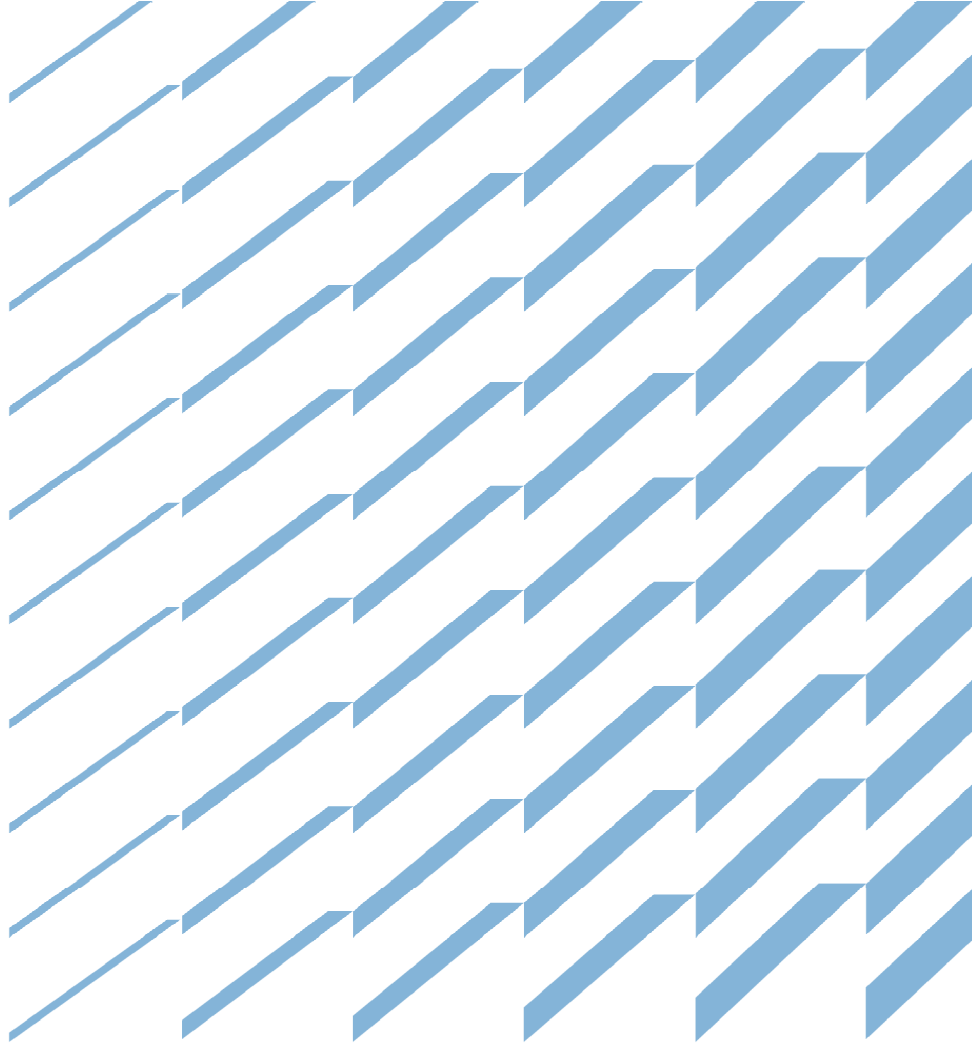
■ 은퇴자 유형

- (이주 계기와 유인) 은퇴자는 제2의 삶 실현을 위해 전북 지역의 자연 친화적 환경, 저렴한 토지, 조용한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대개 은퇴 이후 소규모 창업, 여가 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 참여를 추구하며, 인정과 보람·행복의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이주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정착·정주 유도를 위한 개선점) 현재 귀농 중심의 획일적 정책 설계는 비농업 은퇴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나이가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부족, 안정적 주거지 확보 곤란, 텃세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심리적 거리감 등이 정착·정주 기반 형성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책제언) 장기 체류 및 정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은퇴 이주자를 위한 지원은 정착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 소득연계활동 지원, 지역사회 통합 교육, 사회적 역할 확장 등 제2의 삶과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요구되며, 고령자의 예비 빈집을 활용한 ‘전환기 거주 공간’ 확보로 정착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귀농 중심을 넘어 다양한 비농업 이주자를 포괄하는 인구 활력 제고 정책을 통해 유입·정착을 유도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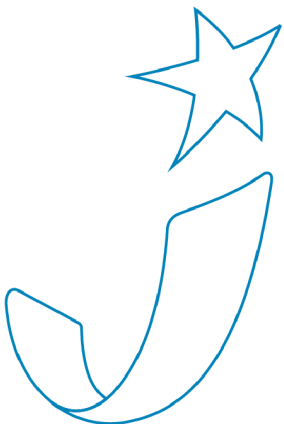
[그림 3-6] 은퇴자 유형 내용 유목화



제4장

전북자치도 지역정착 정책 방안

1. 정책방향
2. 추진과제



제 4 장 전북자치도 지역정착 정책 방안

1. 정책방향

가. 전입·전출 요인분석

■ 인구이동

- 2024년 전북자치도로의 타 시도 전입자는 54,486명, 타 시도 전출자는 60,546명으로 순유출은 -6,060명을 기록
- 이러한 전체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도 연령대별 특성은 2030 청년층의 순유출이 두드러지는 반면, 40대 이상,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순유입이 관찰되어 인구 구조 변화의 단면을 보여 줌
- 이는 청년층 유출 방지책과 더불어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함

[표 4-1] 전북자치도 인구요인 분석결과

구분	내용
총전입자수	54,486명
연령별 전입자	20대 (16,201명, 29.7%), 30대 (9,055명, 16.6%), 40대 (7,032명, 12.9%), 50대 (7,122명, 13.1%), 60대 이상 (8,465명, 15.5%)
주요 사유별 순이동	직업 (-7,395명), 가족 (+1,499명), 주택 (+238명), 교육 (-1,831명), 자연환경 (+1,163명)
주요 전출지(상위3개)	경기 (13,001명, 23.9%), 서울 (9,842명, 18.1%), 광주 (5,181명, 9.5%)
주요 전입시군(상위3개)	전주시 (18,088명, 33.2%), 군산시 (8,891명, 16.3%), 익산시 (8,473명, 15.6%)

■ 주요 이주동기

- 전북자치도의 인구이동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이 전출입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순이동에서는 -7,395명으로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하였고, '교육' 역시 -1,831명의 순유출을 기록함
- 반면, '가족'+1,499명과 '자연환경'+1,163명)을 이유로 한 순유입은 전북자치도가 가진 정주 매력의 일면을 보여 줌
- 이러한 통계는 직업과 교육 분야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인구 유출의 핵심 원인임을 명확히 하며, 동시에 가족 친화적 환경과 우수한 자연환경이 잠재적 유인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직업'을 찾아 전입하는 인구보다 전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점은, 초기 일자리 기회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력 발전이나 소득 수준, 직업 만족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는 특히 경력 개발에 민감한 청년층의 유출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이주 지리적 패턴

- 전북자치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주로 경기(23.9%), 서울(18.1%), 광주(9.5%) 등 대도시 및 인접 지역에서 유입되며, 전출 또한 경기(23.8%), 서울(19.2%), 충남(10.0%) 등 유사한 패턴을 보임
- 이는 수도권과의 활발한 인구 교류를 의미하며, 수도권 거주자 대상 정책 홍보 및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음
- 도내에서는 완주군,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등이 순유입을 기록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순유출을 보이고 있음
- GIS를 활용한 읍면동 단위 전입 사유 분석 결과는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전입사유별로 구분해서 구현해보면, 직업, 가족, 교육 사유는 군 지역의 경우 읍 단위를 중심으로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 주거환경, 자연환경 사유는 비교적 면 단위에서도 고르게 구현되며, 특히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의 경우 각 군 지역의 면 단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족'과 '자연환경'이라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업'과 '교육'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나. 인구유입 유형분석

■ 일자리

- 일자리와 창업 기회는 인구 유입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로컬라이즈 군산'과 같은 창업 프로젝트나 지자체의 창업 자금 지원은 실제로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을 전북자치도로 유입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사례자 1은 지인 추천으로 군산 소재 기업에 취업하며 정착했고, 사례자 4는 창업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군산에 남아 로컬 행사 기획 일을 하고 있으며, 사례자 7은 익산시 청년시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저렴한 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에 이끌려 창업 후 정착한 사례임
-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수준임
- 사례자 6은 "여기 평균 급여가 너무 낮아서" 여러 직업을 병행하는 'N잡러'가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며,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줌
- 특히, 여성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하에서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례자 1은 "군산 같은 경우는 완주, 익산이랑 해서 3대 제조업 도시임에도 여자들이 일할 만한 데가 많이 없어요"라고 언급하며, 서비스업 또

한 대기업 공장 가동 중단 여파로 위축되었음을 증빙함

- 이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며,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음
- 창업 지원 정책 역시 현재 지원이 기술 기반 창업에 편중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거나 생활에 밀접한 '생계형 창업'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 사례자 7은 "대부분의 창업 지원이 기술창업 중심이에요... 여성 창업자들이 살아남으려면 저는 생계형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라며, 생계형 창업이 지역 정착과 인프라 구성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정책 지원 과정에서의 경직성과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사례자 3은 행정 담당자와의 소통 어려움과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정책 지원에서 배제된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례자 4는 지원금 소문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지적됨
- 반면, 사례자 5와 7의 경험처럼, 군청 주무관이나 청년시청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공감적인 지원은 정착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정책 전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교육

- 전북자치도의 특색 있는 교육 자원, 예를 들어 국악과 같은 예술 특화 교육, 농촌 유학 프로그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경쟁 환경은 자녀 교육이나 개인의 성장을 위해 이주하는 가족 및 개인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사례자 8은 국악 전공을 위해, 사례자 9, 10, 12는 자녀의 농촌 유학을 위해 전북을 선택함
- 특히, 사례자 9와 10은 ADHD 성향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며, 농촌 학교의 포용적 환경이 중요한 유인책임을 시사하였고,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우수한 교육 자원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였는데, 사례자 9는 "홍보가 정말 안 되어 있어요. 밖에 사람들은, 위(수도권 사람들)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지적하며, 전북의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외부, 특히 수도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함
- 초등교육 이후의 연계성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대부분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어 중·고등학교로의 진학 시 교육 단절이 발생하고, 이는 가족의 장기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사례자 9는 "농촌 유학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니까 중·고등 교육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며, 농촌 유학을 받아주는 중학교가 거의 없다고 언급함
- 지원 인프라 부족 역시 정착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으며, 소아과 부족과 같은 의료 접근성 문제, 가족 단위 거주에 적합한 주택 부족 및 과도한 공과금 부담, 그리고 이주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일자리 부족 등은 교육을 목적으로 이주한 가족들의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있음
- 정책의 변동성과 혁신 지체도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지원금 변경 계획은 이주 가족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AI 교육 도입 등 새로운 교육 트렌드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대응이 타 지역에 비해 느리다는 인식도 존재
- 사례자 8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행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전담 지원 체계의 부재와 경직된 규제가 국제 학생 유치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 귀농·귀촌·귀어

-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일자리 모색,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전북자치도의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
- 사례자 14는 반복된 일상과 건강 문제로, 사례자 15는 교사로서의 소진감으로 인해 귀촌을 선택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진로 고민 끝에 귀농·귀어를 선택한 사례도 있

고,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 지원 사업들은 청년 귀농인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러나 귀농·귀촌·귀어 분야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귀농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귀어와 귀촌 지원임
- 사례자 16은 "귀농은 있는데, 귀어는 거의 그냥 (지원정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죠"라며, 교육, 자금 지원 등 모든 면에서 귀어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의 초기 진입과 정착을 매우 어렵게 만들며, 심지어 선배 어업인에 의한 착취적 관행에 노출될 위험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사회 통합의 어려움과 "텃세"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어촌 지역의 폐쇄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신규 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음
- 농업 분야에서도 청년농 중심의 정책 편중은 기존 농업인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멘토링 제도의 부실, 보조금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 사례자 15는 멘토에 대한 보상은 적고 책임은 과중한 현실을 비판하며, 청년 할당제로 인해 오히려 경험 있는 기존 농업인이 역차별받는 상황을 지적함
- 사례자 17은 청년농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격 미달인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되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있다는 점을 지적함
- 특정 작목에 대한 시장 포화 위험이 향후 귀농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스마트팜 교육이 토마토, 딸기 등 특정 작물에 집중되면서, 향후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농가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음
- 성장단계에 있는 귀촌 사업체에 대한 지원 부족은 이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초기 정착 지원에 비해 사업 확장이나 고도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지역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 사례자 15는 충남의 집중 육성 사례와 비교하며 전북의 분산적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분산지원보다 집중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은퇴자

- 은퇴 후 제2의 삶을 찾아 전북자치도로 이주하는 인구는 단순한 거주지 이동을 넘어 소규모 창업(민박 등), 사회활동, 여가 활동 등 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사례자 20은 오랜 계획 끝에 무주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자 22는 군산에서 퇴직 후 밀원식물 재배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동을 이끌고 있고, 사례자 23은 고향 순창으로 돌아와 귀농·귀촌 멘토 및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음
- 이처럼 은퇴자들은 풍부한 경험과 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전북자치도의 우수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경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 그리고 빈집 활용 가능성은 은퇴자 유치에 있어 중요한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례자 21은 김제시의 잘 갖춰진 노인복지시설과 아름다운 공원에 만족하며 정착 생활을 하고 있고, 사례자 20 역시 덕유산 국립공원 인근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민박 사업의 입지 조건으로 고려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은퇴자 정착 지원에는 여러 미비점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은퇴자 맞춤형 정책의 부재한 상황임
- 현재 인구 유입 정책은 대부분 귀농이나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농업 분야 은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제한적임
- 사례자 20은 "귀농·귀촌인의 대다수는 귀촌인인데도 불구하고 굵직한 정책 지원은 귀농에 포커싱 돼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봐요"라고 지적하며, 정책 대상과 실제 수요 간의 괴리를 지적했으며, 사례자 21과 22 역시 지역 이주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함
-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주거 탐색의 난항 또한 은퇴자들이 겪는 주요 문제로, 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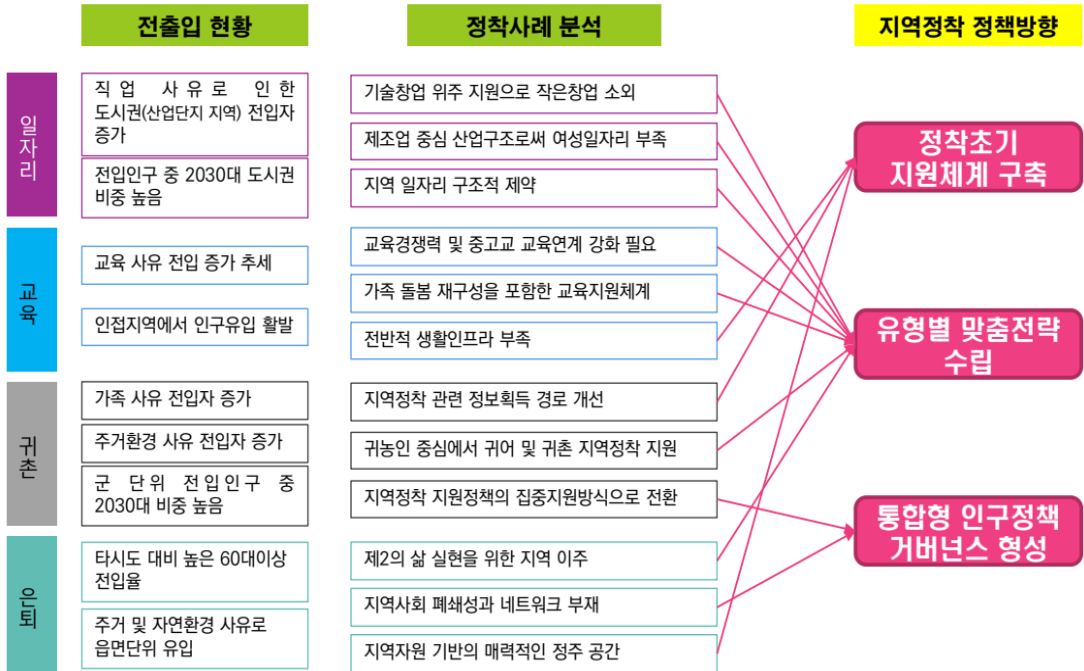
없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역 정보나 주택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 사례자 20은 "소개해 준 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로 맨땅에 헤딩했어요"라며 땅을 구하기 위해 6개월간 매일 발품을 팔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초기 정보접근성의 중요성을 제기함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는데, 주민과의 인적 네트워크 부재는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음

[표 4-2] 지역정착 유형별 주요 이슈

유입유형	핵심도전과제	주요 정책수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다양성 미흡 낮은 임금 수준 창업 생태계 불균형 (기술창업 편중) 정책 경직성 및 부작용 (임대료 상승 등)	일자리 다양화 및 질적 개선 균형 잡힌 창업 생태계 조성 (생활형 창업 지원 확대) 정책 유연성 확보 및 부작용 최소화 여성 고용 기회 확대
교육	교육 프로그램 홍보 부족 초등 이후 교육 연계 미흡 지원 인프라 (소아과, 주택, 부모 일자리) 부족 정책 변동성 및 혁신 지체	교육 자산 전략적 홍보 강화 농촌유학과 중고교 교육 연계성 강화 가족 지원 생태계 구축 정책 안정성 확보 및 교육 혁신 선도 국제 학생 유치 지원
귀농·귀촌·귀어	귀농 대비 귀어 지원 절대 부족 지역사회 "텃세" 및 통합 어려움 청년농 중심 정책 편중 특정 작목 시장 포화 위험 성장 단계 지원 미흡	귀어·귀산촌 지원 확대 및 형평성 제고 공동체 통합 및 갈등 관리 프로그램 운영 균형 잡힌 농업 지원 시장 지향적 작목 다변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은퇴자	맞춤형 정책 부재 (귀농 중심 정책의 한계) 정보 접근성 및 주거 탐색 어려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역할 부여 미흡	은퇴자 특화 정착 지원 전략 수립 정보 허브 및 주거 지원 강화 (전환기 거주 공간 등) 사회 참여 및 역량 활용 기회 확대

다. 정책방향 설정



[그림 4-1] 전북자치도 지역정책 정책방향 체계도

■ 정착초기 지원체계 구축: 초기 정착단계의 어려움 해소 및 안정적 정착유도

- 전북자치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임
- **원스톱 인구정책 지원센터 운영:** 정착 초기에 정보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 분산된 정책 정보, 생활 정보, 행정절차 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는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착민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초기 적응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
- **초기 정착 코디네이터 운영:**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춘 밀착 지원은 정착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담당자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이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초기 정착 코디네이터는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지역사회 연결, 애로사항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

정감을 주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역할 수행예정

- **주거와 일자리 패키지 지원:**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활동 기반은 초기 정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다양한 유입 유형에서 주거 탐색의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주 유형 및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 지원(임시 거주 공간, 주택 수리 지원 등)과 일자리 연계(지역 기업 매칭, 창업 공간 지원 등)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은 초기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정착 의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유형별 맞춤형 전략: 다양한 이주동기 및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전북자치도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 교육, 귀농·귀촌·귀어, 은퇴 등 다양한 동기와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각 유형은 고유한 특성과 정책 수요를 지니고 있음
- 각 유입 유형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략은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정착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
- 일자리 유형
 - **작은(스몰) 창업 지원:** 기술 기반 창업에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과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창업(로컬크리에이터, 생계형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높이고, 실제 이주자들이 시도하는 창업 형태에 부합
 - **여성 친화 일자리 창출:**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하에서 여성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업, 돌봄, 교육, 문화 분야 등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 **좋은 일자리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고도화를 통해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이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확대하여 청년층 및 핵심 인력의 지역 정착률 향상
- 교육 유형
 - **지방 교육 경쟁력 강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특성화 교육 강화, 우수 교원 확보 등을 통해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북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교육 브랜드를 구축하여 교육 이주 수요 창출
 - **배움·돌봄·치유 통합 케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케어 시스템을 구축, 특히 ADHD 성향 아동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은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K-컬처 활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악 등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K-컬처 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관련 행정 지원 체계 정비 및 언어·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

○ 귀농·귀촌·귀어 유형

- **성장·육성 단계별 지원:** 초기 정착 지원을 넘어 사업 확장, 기술 고도화, 판로 개척 등 성장 단계에 있는 귀농·귀촌·귀어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
- **귀농 중심에서 귀어와 귀촌 지원으로 전환:** 귀농에 비해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귀어 분야에 대한 교육, 자금, 인프라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다양한 형태의 귀촌 수요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
- **소규모 분산 지원에서 선별적 집중 지원으로:**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개인에게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성공 모델을 육성하고 파급효과 극대화

○ 은퇴 유형

- **지역 유입 은퇴자 자존감 회복:** 은퇴자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멘토링, 사회활동, 소규모 창업 등)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와 자존감을 높이고 활기찬 제2의 삶을 지원
- **필수 생활 인프라 확충:** 은퇴자의 편안한 정착 생활을 위해 의료, 교통, 문화시설 등 필수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히 빈집을 사전에 관리하여 은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전환기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거 안정 도모
- **갈등 조정을 통한 상호존중 공동체 조성:** 이주 은퇴자와 기존 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 조성

■ 통합형 인구정책 거버넌스 형성: 정책추진의 효율성, 협력,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 정착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및 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필수적임
- 현재 정책 전달의 경직성, 정보 부족, 부처 간 연계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역정착 지원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지자체, 교육청, 중간지원조직, 민간단체 등 지역 정착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연계하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정책 시너지 창출
- **이주민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실제 정책 수요자인 이주민들이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책의 현실 적합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
- **정책 공감대 확산:** 지역 정착 지원 정책의 목표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지역 주민 및 이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포용적인 정착 환경 조성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정착초기 지원체계 구축		원스톱 인구정책 지원센터	초기정착 코디네이터 운영	주거*일자리 패키지 지원	
유형별 맞춤 전략	일자리	작은창업 지원	여성친화일자리	좋은 일자리 확대	
	교육	지방교육 경쟁력 강화	배움·돌봄·치유 통합케어	외국인유학생 유치	
	귀촌	성장육성단계별 지원	귀어·귀촌 지원확대	선별적 집중지원	
	은퇴	은퇴자 자존감 회복	필수생활인프라 확충	상호존중 공동체 조성	
통합형 인구정책 거버넌스		지역정착지원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이주민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정책공감대 확산	

[그림 4-2] 전북자치도 지역정착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표 4-3] 전북 지역 정착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안)	추진 담당부서
정착초기 지원체계 구축		원스톱 인구정책 지원센터	인구청년정책과
		초기 정착 코디네이터 운영	인구청년정책과 (협력) 농촌사회활력과, 수산정책과
		주거·일자리 패키지 지원	인구청년정책과
유형별 맞춤 전략	일자리	작은 창업 지원	일자리민생경제과
		여성친화일자리	여성가족과 (협력) 농촌사회활력과
		좋은 일자리 확대	일자리민생경제과
	교육	지방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협력과
		배움·돌봄·치유 통합케어	여성가족과·교육협력과 (협력) 전북교육청
		외국인유학생 유치	교육협력과 (협력) 전북교육청
	귀촌	성장육성단계별 지원	농촌사회활력과, 수산정책과
		귀어·귀촌 자원 확대	농촌사회활력과, 수산정책과
		선별적 집중 지원	농촌사회활력과, 수산정책과
	은퇴	은퇴자 자존감 회복	여성가족과 (협력) 시군의 가족센터
		필수 생활 인프라 확충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위기대응팀 (협력)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상호 존중 공동체 조성	인구청년정책과 (협력) 농촌사회활력과, 수산정책과
통합형 인구정책 거버넌스		지역정착지원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인구청년정책과
		이주민정책 모니터링	인구청년정책과 (협력) 추진 사업 담당부서 전체
		정착 공감대 확산	인구청년정책과

2. 추진과제

가. 정착 초기 지원체계 구축

1) (중점사업) 원스톱 인구정착 지원센터

■ 필요성

- (정보 접근의 어려움 해소) 전북자치도로 유입되는 인구는 정착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정책 정보, 생활 정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분산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초기 정착 과정의 복잡성 완화) 이주민들은 주거, 일자리, 자녀 교육, 지역사회 적응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을 필요로 하나, 관련 지원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초기 정착 과정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
- (맞춤형 지원체계 부재) 개인의 유입 유형, 생애주기, 정착 단계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지원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 체감도가 낮고, 이는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정책 전달 효율성 제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발생함.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분산된 지원 플랫폼의 통합 필요성) 현재 전북자치도 내 지역정착 목적별 플랫폼이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농촌유학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분산된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

■ 세부추진과제

○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포털 및 모바일 앱 개발: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금융, 지역 행사 등 정착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
- 오프라인 상담 창구 운영: 분야별 전문 상담 인력 배치하여 심층 상담 및 정보 제공

○ AI 챗봇 기반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자주 묻는 질문(FAQ) 기반 실시간 자동 응답 시스템 구축
- 정착 단계별, 유입 유형별 맞춤형 정보 안내 및 초기 상담 기능
- 필요시 전문 상담사 연결 기능 탑재

○ 초기 정착 코디네이터 운영

- 이주민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정착 계획 수립,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주거 탐색 지원, 일자리 매칭, 교육기관 안내 등)
- 정착 초기 생활 적응 지원 (지역 커뮤니티 연결, 생활 편의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적응 및 네트워킹 지원

- 선배 정착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문화 체험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지원
- 유형별·관심사별 커뮤니티 정보 제공 및 활동 지원

○ 정책 및 서비스 연계 허브 기능 수행

- 중앙부처, 전북자치도, 시군, 교육청,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정책 및 서비스 연계
- 정착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원스톱 창구 역할

■ 기대효과

- (정착민의 편의성 증대 및 초기 적응 기간 단축) 분산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얻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 받아 정착 과정의 시행착오와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지원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민의 만족도 제고
- (안정적 지역 정착률 제고)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장기적인 정주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인구정책 효율성 증대) 정책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전달 효율화를 통해 중복 지원 방지 및 정책 자원의 효과적 배분
-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정착민 데이터 및 피드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책 개선 및 신규 서비스 발굴

2) 초기 정착 코디네이터 운영

■ 필요성

- (개인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 증대) 전북자치도로 유입되는 인구는 유입 유형, 생애주기,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원이 각기 다름.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이주민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밀착 지원이 정착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
- (정보 비대칭 및 접근성 한계 해소) 이주민들은 정착 초기 단계에서 지역 정보, 지원 정책, 생활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이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에서 보듯이, 코디네이터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착 초기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 지지자 및 안내자 역할이 중요함
- (기존 지원체계의 공백 보완) 현재 운영 중인 지원센터나 프로그램이 포괄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이주민과 지역사회,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촉진)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함

■ 세부추진과제

- 14개 시군 최소 1명 이상 초기정착 코디네이터 지정 및 운영
 - 각 시군의 인구 규모, 유입 특성,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 배치
 - 지역 실정에 밝고, 상담 및 소통 역량이 우수한 인력을 코디네이터로 선발 또는 양성
- 코디네이터 역할 및 주요 업무 정립
 - 1:1 맞춤형 컨설팅: 이주민 대상 정착 계획 수립 지원,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지역 생활 정보 및 지원 정책 안내, 유관 기관 및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적응 지원: 지역 커뮤니티 소개 및 참여 유도, 생활 편의시설 안내, 지역 문화 이해 교육
 - 정착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이주민 정착 상황 주기적 확인,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달
-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정기적인 직무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상담 기법, 정책 이해, 지역 자원 정보 등)
 -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학습 기회 제공

○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회 및 성과 공유 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회 개최를 통해 활동 내용 공유 및 애로사항 논의
- 우수 활동사례 발굴 및 포상, 타 시군 확산을 위한 사례집 발간 등
- 코디네이터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체계 마련

-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 확보
- 활동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 기대효과

- (이주민의 정착 성공률 제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 (정책 만족도 및 체감도 향상) 이주민의 필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증진
- (지역사회 통합 촉진)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
- (인구 유입 선순환 구조 마련) 성공적인 정착 사례 확산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잠재적 이주민 유치에 기여
-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코디네이터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 유사사례: 홍성군 새내기 귀농인 멘토링

○ 홍성군 새내기 귀농인 멘토링 제도

- 신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융화 촉진
- 영농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전수
- 지역 상생 및 정착 의지 고취

○ 주요 내용

- 멘토-멘티 매칭: 지역 내 영농기술과 상담능력을 갖춘 선도농가 및 귀농선배(멘토)와 최근 3년 이내 홍성군으로 전입한 새내기 귀농인(멘티)을 1:1로 연결 (예: 멘토, 멘티 각 15명씩 선정)
- 활동 지원: 멘토에게 월 40만원의 활동비(멘토링보상수당) 지급 (5개월간)
- 교육 내용: 실제 영농 현장에서의 기술 지도, 경영 컨설팅, 지역사회 적응 노하우 공유 등

○ 운영 성과 및 시사점

- 높은 정착률 기여: 2013년 사업 시작 이후 다수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홍성군 귀농 성공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 인기 사업으로 자리매김함
- 지역사회 기여: 멘토링을 통해 선배 농업인이 후배 농업인을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및 지역민에게 멘토링 활동 대가 지급

“마음 편하게” 선배 귀농인이 후배 멘토링

최근 도시민들 사이에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홍성군이 청정환경과 민간주도형 귀농·귀촌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귀농인과 지역주민이 서로 윈윈(win-win)하고, 선배 귀농인이 새내기 귀농인을 이끌어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홍성군의 귀농 귀촌 현장을 둘러보았다.

3) 주거+일자리 패키지 지원

■ 필요성

- (정착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이주민들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주거 마련과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주거 불안정 문제 동시 해결) 전북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특정 지역은 주거비용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일자리 기회 제공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결합하여 정착의 핵심 장벽을 동시에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유입 인구의 장기 정주 유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장기적으로 정주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정착 만족도를 높이고, 재유출 가능성을 낮춰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정착 선순환 구조 마련
- (다양한 유입 유형의 맞춤형 지원 필요)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은퇴자 등 다양한 유입 계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주거 형태 및 일자리 연계 중요. 사례 분석 결과, 일자리 유형, 교육 유형(부모 일자리), 은퇴자 유형 등에서 주거와 경제활동 기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나타남
- (정책 효과성 제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주거 지원 정책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이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세부추진과제

- 맞춤형 주거-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청년 창업가/취업자 지원 패키지: 창업 공간 연계형 주거 지원(직주일체형 공간 제공 등), 지역 기업 취업자 대상 주거비 지원 또는 기숙사/사택 제공 연계

- 가족 단위 이주자 지원 패키지: 자녀 양육 환경을 고려한 주거 지원과 함께 부모(특히 주 소득자)의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중장년/은퇴자 지원 패키지: 지역사회 활동 연계형 주거(커뮤니티 주택 등) 지원, 사회공헌형 일자리 또는 소규모 창업 연계
- 지역 자원 활용 주거 공간 확보 및 제공
 - 지역 내 빈집, 유휴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창업 연계형 복합 공간으로 제공 (예: 장수군의 빈집 수리 후 무료 임대 사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지역 일자리 연계 입주자 우선 선발 또는 가점 부여
 - LH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청년 스테이 주거 지원과 같은 사업 확대 및 일자리 연계 강화
- 기업 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
 - 지역 기업의 직원 채용 시 주거 지원(기숙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도 및 협력
 - 기업 유치 시 고용과 연계된 주거단지 조성 또는 주거 지원 조건 포함
- 정착 지원금 및 생활비 보조 연계
 - 패키지 지원 대상자에게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또는 주거 관련 보조금(월세, 공과금 등) 차등 지원(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생활비 보조)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패키지 지원을 통한 정착 현황,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연계
 - 임대료 부담 인상 등 부정적 외부 효과 발생 시 대응책 마련

■ 기대효과

- (초기 정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정주 기반 마련)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동시 지원으로 이주민의 초기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생활 시작을 지원
- (지역 정착률 향상 및 인구 유출 방지) 생활 안정성 증대를 통해 이주민의 장기 정주 의향을 높이고, 타 지역으로의 재유출 최소화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창출
- (정책 시너지 창출 및 만족도 제고) 분절된 지원이 아닌 통합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이주민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를 동시에 높임
- (다양한 인재 유치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 매력적인 정착 지원 조건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

■ 유사사례: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 사업명: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 사업 목표: 사회초년생, 취업·창업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청년부부)
 - 소득 기준: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준주택 포함)
 - 전입 조건: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 전입신고 완료자 (중개비 및 이사비는 특정일 이후 지출분)
- 지원 내용 (패키지)
 -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생애 1회)
 - 중개비: 임대차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직접 이사비용에 한함)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0개월(회) 지원 (제1금융권 대출 2억원 이하)
 - 주택 월 임차료(월세): 월 최대 20만원, 최대 10개월(회) 지원 (실제 임차료 기준, 보증금/관리비 제외)



나. 유형별 맞춤전략

▶ 일자리

1) (중점사업) 마을단위 생활형 스물창업지원

■ 필요성

-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마을 단위의 생활 밀착형 소규모 창업(스물창업)은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 생활형 스물창업은 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가와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
- (기존 창업 지원의 한계 보완) 현재 많은 창업 지원 정책이 기술 기반이나 성장 중심의 창업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생활형 창업 지원을 통해 스물비즈니스 활성화 도모
- (지역 자원 활용 및 특색 강화) 마을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특산물, 문화, 경관, 빈집 등)을 활용한 스물창업은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고 특색을 강화하여 방문객 유치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마을 내 다양한 편의시설, 문화공간, 로컬푸드 판매점 등의 스물창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해당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정주 만족도를 높임

■ 세부추진과제

- 마을 자원 기반 스물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마을별 유휴 공간(빈집, 폐교 등) 및 지역 자원(농특산물, 문화, 자연경관 등) 조사 및 DB 구축

-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 창업 워크숍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스몰창업 아이템 발굴
- 발굴된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맞춤형 창업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스몰창업에 특화된 실전형 창업 교육 과정 운영 (회계,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 성공한 지역 창업가,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및 1:1 멘토링 지원
 - 선진사례 견학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창업 공간 조성 및 초기 자금 지원
 - 마을 내 빈집,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료의 창업 공간(공동 작업장, 소규모 점포 등) 제공
 -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사업화 자금, 임차료, 시설 개선비 등 소액 지원)
 - 크라우드 펀딩 연계 및 지역 금융기관 저금리 대출 알선
- 로컬 브랜딩 및 마케팅·판로 지원
 - 마을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 온라인 플랫폼(마을 홈페이지, SNS 등) 구축 및 홍보 지원
 - 지역 축제 연계 판매 부스 운영, 로컬 마켓 개최, 마을 단위 공동 판매장 운영 지원
-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창업 후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창업가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및 정기적인 교류회 운영
 -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가와 마을 주민 간의 유대 강화

■ 기대효과

- (인구 유입 증대 및 안정적 지역 정착) 다양한 스몰창업 기회 제공으로 청년, 귀촌인 등 새로운 인구의 마을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 내 소비 증진, 소득 창출, 신규 일자리 발생 등으로 침체된 마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립 기반 강화
- (주민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마을 내 부족했던 생활 서비스(카페, 식당, 공방, 작은 상점 등)가 확충되어 주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
-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강화) 창업 활동을 매개로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이 증진되고,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공동체 의식 고취
- (지역 고유 가치 증진 및 방문객 유치)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스몰창업은 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부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계인구 형성 및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

■ 유사사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표 4-4]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례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억원)	규모	대상	개별 사업공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1:1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192.3	510명	예비 창업자	1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71.8	230개사	소상공인	1월
	글로벌 및 로컬브랜드 창출	글로벌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등이 상호 간의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 브랜드 구축	19.3	8개팀	소상공인	1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으로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발굴·육성	210	220개팀	소상공인	1월
	우리동네 클라우드 펀딩	투자·용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방식을 상품 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에 필요한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을 지원	40	1,300개사	소상공인	1월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산·유)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브랜딩·마케팅·제품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300	300개사	소상공인	1월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애로 해결 지원	95.8	6,500건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1월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사업 운영 과정에 필요한 기술 고도화,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이론·실습) 교육 제공	112.4	20,000명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1월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지식배움터)을 활용한 업종별·수준별 온라인 강의 및 전자책 서비스(전자도서관) 제공		50,000명		연중 상시

2)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

■ 필요성

-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 및 여성 고용 기회 부족) 전북자치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여성이 진입하기 용이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 약화 및 저임금·불안정 고용) 지역 내 여성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고용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여성인구의 역외 유출 및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어려움 및 잠재인력 활용 미흡)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잠재력을 지역사회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여성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 촉진)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은 다양한 배경의 여성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임
-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가계 소득 증대, 소비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평등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가 됨

■ 세부추진과제

- 여성 특화 유망 직종 발굴 및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돌봄 서비스(아이,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관광, IT·디지털 분야 등 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유망 직종 발굴
 - 유자녀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신기술·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창업 특화 교육 등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 제공

○ 여성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생활 밀착형 창업, 소규모 창업, 사회적경제 분야 등 여성 창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사례자7은 기술창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여성에게 적합한 생계형 창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여성 창업가를 위한 공유 오피스, 공동 작업 공간 등 인프라 지원
- 여성 창업가 간 네트워킹 및 협력 사업 지원

○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직장 내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보육시설 이용 지원 강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교육 지원

○ 여성 고용 우수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여성 고용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육아휴직 활용도 등이 높은 기업을 여성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 및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 제공
-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 지역사회 기반 여성 일자리 플랫폼 구축·운영

- 여성 구인·구직 정보 통합 제공, 경력단절 예방 상담,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 지역 내 여성 인력 수요처 발굴 및 매칭 지원

■ 기대효과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및 소득 증대)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
- (여성의 경력 유지 및 발전 지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직업 능력 개발 및 경력 발전 도모

-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다양성 확보)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서비스 분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인구 유입 및 정착 촉진) 여성들이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 인재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정착유도

■ 유사사례: 경남 청년여성 일경험 채용지원사업

- 사업명: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여성 일경험 참여자 모집
- 사업목적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구직활동과 취업 연계를 지원
- 지원조건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거주자(시·군·구 주민등록 유지)
 - 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 지원내용
 - 기본교육: 직업과 경제활동, 진로탐색, 진단검사 활용, 자기 이해와 직무적성 탐색 등
 - 심화교육: 청년의 직무 및 구직 역량 강화 교육 (직무 관련 필수자격증 습득 등 지원), 조직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직장매너교육
 - 청년여성 일경험 연계 지원: 기업체 주도 일경험 멘토링/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진행 지원. 청년의 직무 연계 관련분야 필수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역량강화비용 지원

3) 좋은 일자리 확대²⁾

■ 필요성

- (좋은일자리 개념)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란 상용직으로써 고용안정성, 중위임금 150% 이상의 임금수준,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의 일자리를 말함
- (전북자치도 좋은 일자리현황) 전북자치도 내 좋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 16.4% (전국 14위)로 매우 부족한 상황
- (청년 인구 유출의 핵심 원인 해결) 일자리는 청년 인구 이동의 주요 원인이며, 전북자치도는 청년층 순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구직자 눈높이 충족) 청년 구직자는 임금, 워라벨, 근무환경 등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현재 전북 일자리 정책은 양적 창출 위주로 질적 개선이 시급
- (지역경제 활력 저하 방지) 낮은 임금 수준과 고용 불안정성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N잡러를 양산하는 등 지역 경제 활력 저해
- (산업구조적 한계 극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여성 등 특정 계층의 고용 기회를 제약하며,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다변화가 요구됨
- (지속가능한 정착 기반 마련) 안정적인 소득과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는 이주민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

■ 세부추진과제

-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가칭) 전북자치도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정 추진
 -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고용기본계획’ 수립
 - 도민 인식 기반 좋은 일자리 요건 파악을 위한 ‘일자리 종합실태조사’ 실시

2) 김수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이슈브리핑 314호, 전북연구원, 2024 참조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특화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바이오, 그린에너지, 첨단 농생명, 문화콘텐츠 등) 유치 및 육성
- 주력산업(제조업 등)의 스마트화·디지털 전환 지원 및 ESG 경영 도입 유도를 통한 질적 고도화
- 관광, MICE, 의료·헬스케어, 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다양화

○ 맞춤형 고용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인재 양성 강화
-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 특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일자리 매칭 강화
- 워라벨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지원
- 안전하고 스마트한 일터 조성을 위한 기업 환경개선 지원

○ 좋은 일자리 창출 전담 지원체계 구축

-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실시, 기업-구직자 중개, 고용서비스기관 네트워킹,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한 ‘(가칭) 좋은 일자리 연구센터’ 설립 운영
- 좋은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및 기업 대상 포상·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 기대효과

- (인구 유출 감소 및 유입 증대) 청년층 등 핵심 인력의 지역 정착률을 높이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
-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보장으로 가계 경제 안정 및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전반적 개선
-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일자리 질 개선) 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안정성을 모두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 비중 확대로 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
-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토대 마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증가, 소비 활성화,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유사사례: 경북 좋은일자리 10만개 창출사업

- 경상북도는 좋은 일자리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인 지역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담당
- 양(量) 위주 일자리 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 질(質)개선에 초점을 맞춰 문화관광 일자리, 기업일자리, 농업일자리, 투자일자리, 복지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재정 3조 투입과 투자 유치 20조 달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계획 수립
- 경상북도는 행복·복지 일자리 3만 1018개, 투자유치 일자리 3만 874개, 기업 일자리 2만 6,969개, 문화관광 일자리 6,262개, 사회적 경제 일자리 4671개, 농업 일자리 4,446개 창출로 좋은 일자리 10만개 조기달성

▶ 교육

1) 지방교육 경쟁력 강화

■ 필요성

- (교육 목적 인구 유입 및 정착의 중요성 증대) 자녀 교육 및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기회는 인구 이동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며, 지방 교육 경쟁력 강화는 인구 유입 및 장기 정착을 위한 핵심 전략임
- (지역 특화 교육자원의 활용도 제고) 전북자치도는 국악 등 예술 특화 교육, 농촌 유학 프로그램 등 우수한 교육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외부 인지도 저조로 잠재적 교육 수요 유치에 한계가 있음(사례자8, 사례자9)
- (학령기 교육 연계성 확보 시급) 농촌 유학 프로그램 등이 초등 교육에 집중되어 중·고등학교로의 연계가 미흡, 이는 교육으로 유입된 가족의 장기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사례자9)
- (교육 지원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소아과 등 의료 접근성, 가족 단위 주거, 이주 부모의 일자리 부족 등 교육 이주 가족을 위한 생활 인프라 부족은 정주 만족도를 낮추고 재이탈 가능성을 높임
- (미래지향적 교육 혁신 요구 증대)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교육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세부추진과제

- 지역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브랜드화
 - 농촌유학, 생태교육, 예술·문화 중점 교육 등 전북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발굴·확대 및 전국 단위 전략적 홍보 강화
 - K-컬처(국악, 태권도 등)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례자8)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프로그램 도입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예: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검토 및 시범 운영을 통한 공교육 질 제고
 - AI·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강화
- 중·고교 교육 연계성 강화 및 진학 지원 확대
 - 농촌 유학 프로그램의 중·고등학교 과정 연계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 검토(사례자9)
 - 지역 거점 우수 중·고등학교 육성 및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내실화 및 지역 대학 연계 입학 지원 확대
- 교육 친화적 정주 환경 조성
 - 교육 이주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가족 체류형 하우스 등) 확대 및 생활 인프라(소아과, 문화시설 등) 개선
 - 이주 학부모 대상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
- 교육정책 안정성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 교육 관련 지원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 협력체계(교육발전특구 연계 등) 구축 및 운영

■ 기대효과

- (교육 목적 인구 유입 확대 및 정착률 제고) 매력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자녀 교육 및 개인의 성장을 위해 이주하는 가족 및 개인의 유입을 늘리고, 장기적인 지역 정착유도
- (지역 인재 양성 및 유출 방지)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 최소화

- (지역 교육 브랜드 가치 향상)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
- (지역사회 활력 증진) 교육 관련 인구 유입은 소비 증진, 관련 산업 발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 유발
-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 유사사례: 경기도 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 국제 바칼로레아(IB)
 - 1968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기구 주재원 자녀 등 외교관 자녀, 해외 주재 상사원 자녀들을 위해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개발
 - 이후 그 교육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23년 기준 159개국 5,400개 이상의 학교에서 7,400개 이상의 프로그램 제공
- 도입 배경 및 목적
 -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 필요성 대두
 - 획일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 탐구 역량 신장을 목표
 -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내에서 질 높은 국제적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노력
- 주요 추진 내용
 -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IB 프로그램(PYP, MYP, DP) 도입 및 운영 학교 지정 확대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단계적 추진)
 - IB 본부와의 협력을 통한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자체 교사 양성 시스템 구축
 - 한국어 기반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자료 개발 및 보급

- IB 교육철학을 반영한 학교 공간 재구성 및 학습 환경 조성 지원
-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IB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 강화
- 기대 성과 및 시사점
 - 학습자 중심 교육 실현: 토론·발표·프로젝트 중심 수업, 논·서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깊이 있는 학습 경험 제공
 - 미래 핵심 역량 강화: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에 기여

2) 배움·돌봄·치유 통합케어

■ 필요성

- (학령기 아동의 전인적 성장 지원)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심리적 치유를 포함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함
- (교육 취약계층 발생 예방 및 맞춤형 지원) ADHD 성향 아동, 학습 부진 아동,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조기 개입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례자9, 사례자10)
- (가족 기능 강화 및 양육 부담 완화) 교육을 목적으로 이주한 가족,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돌봄과 교육, 치유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족 전체의 안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함
-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활성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케어 시스템은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적 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
- (정주 매력도 향상 및 인구 유입 유도) 질 높은 배움·돌봄·치유 통합케어 서비스 제공

은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기존 주민의 정주 의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증시하는 젊은 세대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세부추진과제

○ 통합케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학교 또는 지역사회 내 거점 공간을 활용하여 배움·돌봄·치유 통합케어 지원센터 구축
- 전문인력(상담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배치 및 원스톱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통합케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배움)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 (돌봄)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치유)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미술, 음악, 놀이치료 등),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 ADHD 성향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사례자10)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 구축

- 학교,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병·의원 등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 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 자원(인적·물적) 발굴 및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
-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정 내 케어 역량 강화

○ 통합케어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 종사자 대상 통합케어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정기적인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를 통한 전문성 향상 지원

○ 통합케어 지원 시스템 고도화

- 학생 및 가족의 필요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위기 학생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

-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및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 사업 효과성 평가 및 환류를 통한 프로그램 지속 개선

■ 기대효과

-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 촉진) 학업 능력 향상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정, 사회성 증진 등 전인적 발달 지원
-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 포용성 증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높이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
-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기능 강화) 다양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
- (지역사회 교육 안전망 구축)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안전망 강화
- (정주 만족도 향상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은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 부여

■ 유사사례: 경북 구미혜당학교 찾아가는 농촌돌봄서비스

- 행사명 및 개요
 - 행사명: 2025 경북 찾아가는 농촌돌봄서비스
 - 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9일, 구미혜당학교 (발달장애 학생 중심 특수학교)
 - 대상: 구미혜당학교 재학생 약 300여 명
 - 주최/주관: 경상북도 / 농업회사법인 (주)힐링공유팜
 - 참여기관: 경북 지역 농촌 돌봄 농장 8개소, 농촌주민 생활 돌봄공동체 2개소
- 주요 내용 및 활동

- 목적: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체험 및 농촌 돌봄서비스 이해도 증진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말과 함께 힐링타임, 다육식물 심기, 딸기청 만들기, 압화 거울 만들기, 모기 퇴치제 만들기 등
- 경상북도의 농촌돌봄서비스 확대정책
 - 2020년부터 매년 농촌 돌봄 농장 및 공동체 발굴 지원
 - 2025년 12곳 선정, 5년간 25억 원 지원 계획
 - 농촌 환경을 활용한 치유, 돌봄, 교육 및 농촌 어르신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농업 활성화
- 시사점
 - 통합적 접근: 구미혜당학교 사례는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배움(농촌 가치, 체험 활동), 돌봄(사회적 농업 연계), 치유(동물 교감, 자연 체험)의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가능성을 보여줌
 - 대상 특화: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적 효과와 정서적 지원을 동시에 추구함
 - 지역사회 연계: 지자체(경상북도), 중간지원조직(㈜힐링공유팜), 다수의 농촌 돌봄 농장 및 공동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나타냄
 - 지속가능성: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농촌돌봄농장 발굴 및 지원 정책은 통합케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됨

3) (중점사업) K-culture 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 필요성

- (글로벌 K-컬처 확산 및 교육 수요 증대) K-POP,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한국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 특화 문화예술 자원 활용) 전북자치도는 국악, 태권도, 한지, 판소리 등 풍부하고 특색 있는 전통문화예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역 문화의 세계화 및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사례자8)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교육 수요 창출) 국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하고 교육기관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지역 국제화 및 문화 다양성 증진)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역사회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함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소비 활동, 문화 교류 활동 등은 숙박, 음식, 관광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세부추진과제

- K-컬처 특화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악, 태권도, 한국무용, 한지공예, K-푸드, K-뷰티 등 전북자치도 특화 K-컬처 분야 단기 연수 및 장기 학위 과정 개발
 - K-POP 댄스, 보컬 트레이닝 등 현대 K-컬처 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
 - 온라인 K-컬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전담 체계 구축
 - ‘(가칭) 전북자치도 K-컬처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 운영: 유학생 모집, 비자 발급 지원, 입학 절차 안내, 장학금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례자8은 유학생 유치 절차의 복잡성과 전담 지원체계 부재를 지적함)
 - 지역 대학, 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하여 유학생 유치 공동 마케팅 및 설명회 개최
- 유학생 맞춤형 교육 및 생활 지원 강화
 -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온·오프라인, 수준별 맞춤 교육) (사례자8은 소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의 어려움을 언급함)
 - 기숙사, 홈스테이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및 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험, 지역사회 교류 활동 등)

- 유학생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서비스 연계
- K-컬처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원 전문성 강화
 - K-컬처 교육을 위한 전용 실습 공간, 공연장, 체험관 등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K-컬처 분야 전문 교원 양성 및 초빙, 기존 교원 대상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 연수
 - 해외 우수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연계 K-컬처 교류 및 홍보 활성화
 - 유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K-컬처 페스티벌, 공연, 전시회 등 개최
 - 유학생 K-컬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연계
 - 유학생을 활용한 전북자치도 K-컬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해외 확산

■ 기대효과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규모 확대 및 교육기관 활성화) 매력적인 K-컬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수를 늘리고,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
- (전북자치도 문화예술 브랜드 가치 제고) K-컬처 교육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전북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K-컬처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국제 교류 기반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유학생의 소비 지출 증대,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K-컬처 관련 상품 개발 및 수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
- (지역사회 국제화 및 문화 다양성 증진)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유입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해지고, 지역 주민의 국제적 감각 및 상호 문화 이해도 증진

■ 유사사례: 경북교육청 전국최초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사업을 추진
- K-뷰티, K-푸드 등 K-컬처와 연계된 직업계 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



-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개요
 - 주요 대상: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 성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00여 명의 유학생이 입학, 한국 취업을 꿈꾸며 공부
 - 취업 관련: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도 발생
 - 2025학년도에는 8개 고등학교에 69명의 유학생이 입학. 2026학년도에는 6개 지역 9개 학교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업' 대상교로 선정됨
 - 유학생들이 순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할 후견인 지정 및 학생 한 명에 교사 한 명이 담당·관리

▶ 귀농·귀촌·귀어

1) 성장육성 단계별 지원확대

■ 필요성

- (초기 정착 이후 성장 정체 문제 해결) 현재 귀농·귀촌·귀어 지원 정책은 초기 유입 및 정착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이후 사업 확장 및 고도화 등 성장 단계에 진입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함 (사례자16)
- (지속가능한 지역 정착 및 경제 활력 제고) 귀농·귀촌·귀어 사업체의 안정적인 성장과 육성은 이들의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임
-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 분산적이고 소규모적인 초기 지원만으로는 개별 사업체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사례자15). 성장 단계에 맞는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사업체 육성이 필요함
-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구조 개선)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 체험, 서비스 등 6차 산업화 및 스마트 기술 도입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확장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사례자16, 사례자17)
- (중장년층 등 다양한 귀촌인 지원 확대) 청년층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험과 자본을 갖춘 중장년층 귀농·귀촌·귀어인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업 확장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요구됨

■ 세부추진과제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구축
 - (도약기) 초기 정착 이후 사업 안정화 및 확장 기반 마련 지원: 시설 현대화, 소규모 가공·유통 시설 지원, 경영 컨설팅, 기술 향상 교육

- (성장기) 본격적인 사업 확장 및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스마트팜·자동화 설비 도입 지원,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 판로 확대 지원(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성숙기/선도기) 고도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지원: 6차 산업화 모델 개발, 수출 지원, 선도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지원(후배 귀촌인 멘토링, 기술 전수 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 사업체 집중 육성
 - 성장 잠재력, 지역사회 기여도,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유망 사업체를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는 ‘(가칭) 전북형 로컬 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사례자15)
 - 단순 분산 지원에서 벗어나, 선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컨설팅, 기술, 마케팅 등 패키지 형태의 집중 지원 제공
- 첨단기술 도입 및 스마트화 지원 강화
 -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자동화 설비, ICT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 등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 컨설팅 확대 (사례자16, 사례자17)
 - 데이터 기반 생산·경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플랫폼 구축
- 융복합 산업화(6차 산업) 지원 확대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체험 관광, 치유 농업, 농촌 교육농장 등 융복합 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가공시설 공동 이용 지원, 공동 브랜드 개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컨설팅 및 바이어 매칭 지원
 - 지역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 중장년층 귀농·귀촌·귀어인 맞춤형 성장 지원
 -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 발굴 및 지원
 - 건강관리, 커뮤니티 활동 등 중장년층 특성을 고려한 정주 지원 병행

■ 기대효과

- (귀농·귀촌·귀어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소득 증대) 사업 확장 및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체 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기여
-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증대, 연관 산업 발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선도적 성공모델 육성 및 확산) 경쟁력 있는 우수 사업체를 육성하여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고, 후발 귀농·귀촌·귀어인의 유입 및 성장을 견인
- (지역사회 기여도 증대) 성장한 사업체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 후배 양성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발전 기여

2) (중점사업) 귀농중심에서 귀어 및 귀촌 지원으로 정책 전환

■ 필요성

- (귀어·귀촌 인구 증가 및 다양한 정착 수요 발생) 최근 농업 외 어업, 임업, 농촌 생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귀어·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은 여전히 귀농 중심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정착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귀어 분야 지원 절대 부족 및 형평성 문제) 귀농에 비해 귀어 분야는 교육, 자금,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여 귀어 희망자의 초기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사례자16)
- (귀촌인의 비농업 분야 정착 지원 미흡) 통계적으로 귀농·귀촌 인구의 다수는 농업 외 다른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귀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

책은 미미한 실정임 (사례자20)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재 유치 필요) 농업 인력뿐 아니라 어업, 임업, 농촌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다양성 증진에 필수적임. 귀농 중심 정책은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포용적 지원체계 구축) 인구 유입 정책의 목표를 단순 ‘농촌 유지’에서 ‘지역 정주와 인구 활력 제고’로 전환하고, 귀농, 귀어, 귀촌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세부추진과제

- 귀어 지원 대폭 강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귀어 학교 운영 내실화: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 강화, 어선 승선 체험, 양식 기술 교육 등(사례자16)
 - 귀어 창업 자금 지원 확대: 어선·양식장 구입 및 임차 지원,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지원 등 (현재 귀농 5억 대비 귀어 3억으로 불균형)
 - 귀어 초기 정착 지원: 어업 활동에 필요한 어구 구입 지원, 어촌계 가입 지원, 멘토링(선배 어업인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수산업 분야 스마트화·자동화 지원: 첨단 양식 기술 도입, 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 등(사례자16)
- 귀촌인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비농업 분야 귀촌인 대상 창업 지원: 로컬 비즈니스(카페, 숙박, 공방 등), 농촌 서비스업,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등 지원
 - 귀촌인 대상 주거 지원 확대: 빈집 리모델링 지원, 귀촌인 특화 주거단지 조성, ‘전환기 거주 공간’ 제공 (사례자20)
 - 지역사회 활동 연계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참여 지원, 지역 봉사활동 연계, 귀촌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생활 기술 교육 제공: 농촌 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술(집수리, 소규모 텃밭 가꾸기 등) 교육
- 정책 대상 및 기준 유연화

- 청년층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년층, 은퇴자 등 다양한 연령대의 귀농·귀어·귀촌 지원 확대
- 실질적인 정착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이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격 요건 및 심사 기준 현실화 및 유연화(사례자3)

■ 기대효과

- (다양한 유형의 인구 유입 촉진) 귀농뿐 아니라 귀어, 귀촌 희망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유입 인구의 다양성 및 규모 확대
-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률 제고)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지역 정주 유도
-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력 증진) 어업, 임업, 농촌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주민 유입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적 다양성 증진
- (정책 형평성 제고 및 만족도 향상) 소외되었던 귀어·귀촌 분야 지원 강화를 통해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주민의 정책 만족도 제고

■ 유사사례: 충남 귀어학교

- 귀어인 및 귀어 희망자에게 어촌실태와 어업 창업 교육 제공
 - 신청 자격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자로 충청남도로 귀어를 희망하는 자, 충청남도 귀어한 자 또는 어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등 30명
 - 교육 장소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내 귀어학교(보령시)
 - 교육 내용 | 귀어귀촌 및 어촌실태 이해, 어업 창업 교육 등

3) 소규모 분산지원에서 선별적 중심지원으로

■ 필요성

- (기존 소규모 분산 지원의 효과성 미흡) 현재 다수의 귀농·귀촌·귀어 지원 정책은 소액을 다수에게 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개별 사업체의 실질적인 성장이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사례자15, 사례자16)
-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사업체 육성 필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업체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 사례자15, 사례자16)
-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 초기 정착 단계를 넘어선 사업체가 규모를 확장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선 기술, 경영, 마케팅 등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사례자15)
- (정책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성과 극대화) 소규모 분산 지원 방식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반면, 선별적 집중 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사례자15)
- (지역 내 선도 모델 부재 및 파급 효과 미미) 다수에게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눈에 띄는 성공 모델을 만들기 어려워, 후발 주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확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사례자16)

■ 세부추진과제

- 유망 귀농·귀촌·귀어 사업체 선발 시스템 구축
 - 성장 잠재력, 혁신성, 시장 경쟁력,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 기준 마련
 - 전문가(농업, 어업, 경영, 마케팅 등) 및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 공모 방식과 발굴 방식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의 유망 사업체 발굴

- 기존 소규모 분산 지원 사업의 단계적 축소 및 전환

- 효과성이 낮은 소규모 지원 사업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절감된 예산을 선별적 집중 지원 사업으로 전환
- 초기 탐색 및 교육 단계의 지원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보이는 경우 집중 지원 대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

- 집중 지원 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 시스템 구축

- 지원 대상 사업체별 성과 목표 설정 및 주기적인 달성도 점검
-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맞춤형 후속 지원
- 사업 종료 후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 기대효과

- (경쟁력 있는 선도 사업체 육성 및 성공모델 창출)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귀농·귀촌·귀어 사업 모델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후발 주자들의 롤모델 제시 및 긍정적 파급 효과 확산
- (정책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투자 효과 극대화) 한정된 예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사업체의 규모화, 전문화,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적으로 성장한 사업체는 지역 내에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 증대 및 연관 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지속가능한 정착 지원)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귀농·귀촌·귀어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정착을 위한 견고한 기반 마련

▶ 은퇴자

1) (중점사업) 지역유입 은퇴자 자존감 회복

■ 필요성

- (은퇴 후 역할 상실 및 정체성 혼란 경험) 은퇴자들은 퇴직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이 줄어들면서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기 쉬움
-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가능성)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한 은퇴자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은퇴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 활용 미흡) 은퇴자들이 가진 풍부한 인생 경험, 전문 지식, 기술 등이 사장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 발생
- (능동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 필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을 통해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은퇴자들의 욕구 충족 및 자존감 회복 지원이 중요함
-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자존감 향상 유도) 은퇴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때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이는 자존감 회복 및 긍정적인 자기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세부추진과제

- 생애 경험 및 지혜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 은퇴자의 전문 지식, 기술, 인생 경험 등을 지역사회(청년, 학생, 주민 등)와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 강연, 워크숍,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나의 이야기 아카이브' 프로젝트: 은퇴자의 삶의 여정과 지혜를 자서전, 구술 영상, 인터뷰 등으로 기록하고 공유하여 삶의 가치를 재조명

- 맞춤형 사회참여 활동 연계 및 지원

- 은퇴자의 관심 분야 및 보유 역량에 맞는 자원봉사,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공익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 발굴 및 연계
- 지역 내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협력하여 은퇴자 참여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 은퇴자 역량 강화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제공

- 은퇴 후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예: 디지털 활용 교육, 인문학 강좌, 건강 관리 프로그램, 새로운 취미·기술 습득 과정)
-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새로운 활동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촉진
- 소규모 창업(민박, 공방, 로컬푸드 등) 희망 은퇴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은퇴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류 지원

- 공통 관심사 기반 동호회, 자조모임, 학습 공동체 등 은퇴자 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신규 유입 은퇴자와 선배 정착 은퇴자 간의 네트워킹 행사 및 교류 프로그램 정기 개최

- 지역사회 기여 인정 및 감사 프로그램 운영

- 은퇴자의 지역사회 봉사 및 공헌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인정 및 감사 행사 개최 (예: '명예시민 멘토 위촉', '지역사회 공헌상' 수여 등)
- 은퇴자의 활동 성과를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긍정적 역할 모델 제시

■ 기대효과

- (은퇴자의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성취 경험을 통해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무력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 확립
-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고립감 해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
- (은퇴자의 지역사회 성공적 통합 촉진)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

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고 원활한 적응 지원

- (은퇴자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세대 간 교류, 인재 양성 등에 활용되어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
-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년 문화 조성)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사회 참여를 통해 능동적이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문화 확산

■ 유사사례: 독일 Senior Expert Service (SES)

○ 조직 구조와 설립배경

- Senior Expert Service(SES)는 1983년 독일 산업연맹(DIHK)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은퇴자 및 휴직 경영자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자발적 자원봉사 진행
- 본부는 본(Bonn)에 있고, 독일 내 16개 지부, 해외 약 200개 대표기관을 통해 활동하며, 현재 약 14,000명의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음

○ 주요활동분야

-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에 60,000건 이상의 자문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주로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직업 훈련 기관 등에 '자문·기술전수'
- 독일 내에서는 직업 교육, 학교 멘토링(예: VerAplus), 교사 파견, 커리큘럼 개발 등을 지원하며 청년 및 직업 교육에 중점활동

○ 활동방식

- 자원 방식: SES는 전형적으로 자원봉사 형태지만, GSE³⁾는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이 수익은 SES의 비영리 활동 지원에 사용됨
- 전문가 선발 기준: 다년간 경험, 최신 전문성, 우수한 외국어 능력, 국제적 네트워크 보유가 필수
- 니즈 분석 → 2. 전문가 파견 또는 현장·온라인 자문 → 3. 개별 맞춤형 교육·멘토링 제공 → 4. 사후 평가, 필요 시 추가 파견

3) German Senior Experts(GSE)는 2024년부터 SES의 상업 부문으로 설립되어, 수익 활동을 통해 비영리 활동을 재원으로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

2) 필수 생활인프라 확충

■ 필요성

- (정주 만족도 저하 및 재유출 가능성 증대) 의료, 교통, 문화, 주거 등 필수 생활 인프라 부족은 정착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는 정주 만족도 저하 및 타 지역으로의 재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임(사례자4, 사례자12)
- (선택의 자유 제약 및 삶의 질 저하) 인프라 부족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정착민들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짐(사례자4)
- (의료 접근성 취약 및 건강권 위협)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 및 응급 의료체계 미흡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정착을 어렵게 함(사례자12)
- (교통 불편으로 인한 생활 반경 축소 및 비용 증가) 대중교통망 미비는 주민들의 이동성을 제약하고, 자가용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생활 반경을 축소시킴(사례자4, 사례자6)
- (문화·여가시설 부족으로 인한 정주 매력도 저하) 다양한 문화·여가·체육시설 부족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지역의 정주 매력도를 떨어뜨림
- (주거 불안정 및 생활비 부담 가중)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공급 부족, 농촌지역의 예상외 높은 생활비(난방비, 차량 유지비 등 '농촌 프리미엄')는 정착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사례자6)

■ 세부추진과제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필수의료 강화
 -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목에 대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이동 진료, 방문 간호) 확대 및 ICT 기반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 대중교통망 확충 및 교통 편의 증진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행복택시 등) 확대 운영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형 공유차량제도 도입

○ 생활권 중심 문화·여가·체육시설 확충

-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SOC 시설 확충
-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례자22의 도서관 복합문화공간화 제안 참고)
-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

○ 주거 안정성 제고 및 주거 환경 개선

- (빈집 선관리 체계 구축·운영) 거주자의 고령화 등으로 빈집화가 예상되는 주택을 사전에 지자체 등과 계약·관리하여, 이주 희망자에게 안정적인 임시 또는 장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
-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을 통한 난방비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농촌지역 가스 공급망 확충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지원 강화

○ 소비·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 로컬푸드 직매장, 마을 공동 판매장 등 지역 농산물 유통·판매 시설 지원
-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 생활필수품 공동구매 시스템(공공형 다기능 소매점 운영) 지원 및 이동형 편의점 운영 등 검토

■ 기대효과

- (정주 만족도 향상 및 인구 유출 방지)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인구 유출 방지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지역 매력도 증진 및 신규 인구 유입 촉진) 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잠재적 이주민에게 매력적인 정주지로 인식되어 인구 유입 촉진

- (주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 안전망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인프라 개선 관련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주민 소비 증진, 생활 서비스 관련 창업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
-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문화·여가시설 확충 및 주민 교류 공간 조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발전에 기여

■ 유사사례: 일본 타마 뉴 타운(多摩ニュータウン)

- 개요 & 역사
 - 1965년에 계획되어 197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14km에 걸쳐 21개 주거단지로 구성된 일본 최대 규모 신도시
 - 인구는 약 22만명이며, 도쿄 서부 4개 시(다마, 하치오지, 이나기, 마치다)에 걸쳐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대두
 -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 풍부한 녹지와 보행자공원으로 구성된 이상적 설계가 특징이나 초창기 단지들은 엘리베이터 부족·높은 계단 등으로 고령층의 거주 불편 발생
 - 현재 일부 단지는 고령자 비율이 40~55%에 달하며, 공동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령친화 도시재생 전략
 - (디지털·ICT 기반 재생) 도쿄도는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과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통해 차세대 중심지로의 전환을 추진 중
 - (통합 돌봄(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고령자 돌봄서비스를 위해 UR공사와 지자체, NPO와 협력하여 주거지 내 의료·복지 서비스 허브를 설치하는 실험이 진행 중
 - (주택·환경 재건축 및 리모델링) 일부 낡은 단지는 고층 새로운 주택(예: 11층, 14층)으로 재건되었으며, 노인용 배리어프리 설계와 다양한 세대 주거 유형 도입, 학교 부지를 활용한 재건축으로 거주자 이동 부담을 줄이고, 동선과 공공시설도 함께 정비
 -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나가야마·스와 지역에는 NPO가 운영하는 'Fukushi-Tei' 같은 고령자용 커뮤니티

티 카페와 사회적 교류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교통 & 접근성) 케이오·오다큐선, 다마 모노레일 등 3개 철도가 통과하며, 각 지구는 역과 연결된 상업·교육·문화 시설과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음. 주요 역 주변은 쇼핑 아케이드, 병원, 영화관, 문화센터 등 복합 환승 및 생활 거점 구축

3) 갈등 조정을 통한 상호존중 공동체 조성

■ 필요성

- 신규 유입 주민과 기존 주민 간 문화적 차이 및 오해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 상존
- 일부 지역 공동체의 폐쇄성 및 '텃세' 문화는 신규 정착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고립감 유발
- 성공적인 지역 정착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이 필수적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포용적인 공동체 분위기 조성이 지역 활력 증진에 중요함
- 은퇴자, 귀농·귀촌·귀어인, 교육 이주 가족 등 다양한 유입 유형에서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융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세부추진과제

- 갈등 예방 및 조정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정착민과 기존 주민 간 소통 워크숍 및 상호 문화 이해 교육 실시
 - 마을 단위 갈등 발생 시 초기 개입 및 조정을 위한 '마을 화해 중재단' 구성 및 운영 지원
 -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상호존중 공동체 문화 조성 사업

- 주민 공동 참여형 마을 축제, 공동 작업, 취미 활동, 봉사활동 등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세대 간, 이주민-원주민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스토리텔링 및 경험 공유의 장 마련
- '환대하는 우리 마을' 캠페인 전개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 이주민-지역주민 성공적 공동체 활성화 사례 시상 및 홍보
-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 귀농귀촌지원센터, 가족센터, 주민자치회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한 통합 지원 시스템 마련
 - 선배 정착민-신규 정착민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 갈등 사례 분석 및 교육 자료 개발
 - 지역 내 갈등 발생 사례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유형별 대응 매뉴얼 개발
 - 상호존중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영상, 책자 등) 제작 및 보급

■ 기대효과

- 신규 정착민과 기존 주민 간 갈등 감소 및 상호 이해 증진
- '텃세' 없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마을 공동체 분위기 조성
-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만족도 향상
- 주민 간 신뢰 회복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

■ 유사사례: 일본 이사가와현 노토 반도 농가민박

- 일본 이사가와현 Shunran-no-Sato (春蘭の里) - 노토 반도 농가민박 마을
 - 일본 石川県能登町の Shunran-no-Sato(春蘭の里)은, 1996년부터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해 지역 농가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조성한 농가 민박촌(농가民宿)

- 내일 퇴직자나 도시민 유입 시 갈등을 줄이고 상호공존 모델로 성공한 사례
- 배경과 설립동기
 - 고령화·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의 농촌 공동체 7명이 1996년 Spring Orchid Village 기구(실행위원회)를 설립
 - 1997년 첫 농가민박 “春蘭の宿”이 개점하였고, 2012년에 47호점까지 확대되며 관광 수용 능력도 최대 200명/일 규모 확보
- 공동체계 및 운영원칙
 - 모든 민박은 ‘1일 1조’ 단일 그룹만 수용, 현지 주민이 직접 숙박·식사·체험 진행
 - (통일된 서비스 품질 기준 시행) 현지 식자재(산채, 버섯, 강가 물고기 등) 및 전통 문화를 반영한 식기(輪島塗漆器, 수제 젓가락)사용, 囲炉裏(전통 난로) 배치,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요금 체계도 통일하여,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 유지
- 성과와 수익모델
 - 2017년 기준 연간 방문객 13,500명, 그중 약 900명은 해외 방문객이 포함
 - 농가민박으로 월 약 40만 엔(한화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창출, 이를 통해 젊은 세대 정착 유도 및 고령층의 안정적 삶 지원
- 갈등 조정 및 상호 존중 메커니즘
 - (지역 의사결정 구조) 실행위원회를 통한 주민 주도 운영
 - (교육과 통일 기준) 서비스 품질·문화를 공유하는 교육 시스템
 - (소통 채널) 정기회의, 워크숍, 주민-체험객 간 소통 강화
 - (역량 공유) 세대 간·도시-농촌 간 상호 교육과 교류
 - (투명한 수익 구조) 요금·보조금 공시로 갈등 최소화

다. 통합형 인구정책 거버넌스 형성

1) (중점사업) 지역정착 지원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 필요성

- (분산된 지원 기능의 통합 및 시너지 창출 필요) 현재 전북자치도 내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지원 기능이 전북귀농귀촌센터, 전북귀어귀촌센터, 청년허브센터, 전북농촌유학,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사업 중복 및 정보 공유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정책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 부재) 이주민들은 다양한 기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각 기관의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받고 연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 미흡) 각 지원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관 간 정책 연계, 우수사례 공유, 공동 대응 등이 미흡하여 정책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음(사례자17은 각 기관별 성과목표 지향적 사업 추진으로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재로 효율적 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지적함)
- (지역 정착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다양한 지원기관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중복 사업을 조정하며,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 및 개선) 각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이주민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세부추진과제

-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
 - 참여기관 범위 설정: 전북귀농귀촌센터, 전북귀어귀촌센터, 청년허브센터, 전북농촌유학 담당기관, 전북

국제협력진흥원, 농업기술센터(시군 포함), 중장년내일센터, 전북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필요시 민간 전문가 포함

- 정기 회의(분기별 또는 반기별) 및 수시 현안 회의 개최 규정
- 협의회 운영 주관 부서 지정 (예: 전북자치도 인구정책 담당 부서)

○ 주요 협의 및 논의 안건

- 기관별 지역정착 지원 사업 현황 및 계획 공유
- 우수 지원사례 및 실패 사례 공유를 통한 학습
- 기관 간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방안 모색
- 지역 정착 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 공유,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정부 및 전북자치도 인구정책 방향 공유 및 지역 맞춤형 정책 제언
- 이주민 유형별·생애주기별 지원 공백 분야 발굴 및 신규 정책 제언

○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 운영

- 필요시 유입 유형별(귀농귀촌, 청년, 교육, 외국인 등) 또는 지원 기능별(주거, 일자리, 교육, 공동체 등)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분과별 심층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 도출

○ 정책협의회 운영 성과 공유 및 확산

- 협의회 논의 결과 및 정책 제언 사항 기록·관리 및 관련 부서 전달
- 우수 협력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타 기관 및 시군 확산
- 정책협의회 운영 백서 또는 결과보고서 발간

○ 온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

-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자료 아카이빙, 회의록 관리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활용
- 비대면 회의 및 의견 수렴 기능 탑재

■ 기대효과

- (지역 정착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이주민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 (정책 중복 방지 및 예산 효율성 증대)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기반 마련) 이주민이 다양한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의 토대 마련
- (현장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신속한 대응) 다양한 기관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정착 관련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
- (지역 정착 지원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관 간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 형성

2) 이주민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필요성

- 정책 수요자인 이주민의 실제 경험과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직접 반영할 필요성 증대
- 기존 지역 정착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 및 실효성을 이주민 관점에서 검증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다양한 유형(일자리, 교육, 귀농·귀촌·귀어, 은퇴자 등)의 이주민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과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설계 기반 마련
-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정책 신뢰도 및 수용성 제고

- 각 지원기관별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사례자17)

■ 세부추진과제

○ 이주민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 다양한 유입 유형(일자리, 교육, 귀농·귀촌·귀어, 은퇴자 등),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위촉
- 지역 정착, 인구정책, 각 분야별(농업, 어업, 교육, 복지 등)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참여
- 공개모집과 관계기관 추천 방식을 병행하여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모니터링단원 확보
- 모니터링단원의 임기제 운영 및 활동 실적에 따른 연임 가능

○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 정기 간담회(분기별) 및 수시 현안 회의 개최를 통한 정책 논의 및 의견 수렴
- 주요 정책 분야별(예: 주거 안정, 일자리 지원, 교육 환경, 공동체 통합 등) 소위원회 구성 및 심층 모니터링 활동 전개
- 정책 현장 방문, 이주민 대상 심층 인터뷰(FGI),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실증적 모니터링 실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적인 정책 제안 및 애로사항 접수 창구 운영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보고서 및 정책 개선 권고안 작성, '지역정착 지원기관 정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정기 보고 및 환류

○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 지원

- 전북자치도 인구 및 지역 정착 관련 정책 현황, 주요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정기 교육 제공
- 효과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방법론(인터뷰 기법,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등)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타 시도 우수 모니터링단 운영 사례 벤치마킹 및 교류 기회 제공

■ 기대효과

- (정책의 현장 적합성 및 실효성 증대) 이주민의 생생한 경험과 실제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서비스 개선) 이주민의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만족도 및 서비스 질 향상
-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적 지원 강화)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포용적인 정책 환경 조성
- (정책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민관 협치 강화) 이주민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과 주민 간의 신뢰 기반 협치 문화 조성
- (지속가능한 지역 정착 생태계 구축)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선순환적 정책 생태계 마련

■ 유사사례: 독일 뒤셀도르프 시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Integration Monitoring)

- 추진배경 및 목표
 - 뒤셀도르프는 구역별 통합 수준의 격차가 심각해져, 특정 지역에만 이주민이 집중돼 정책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직면
 - 이에 따라 시는 지표 기반 통합 모니터링을 도입해, 구역별 데이터 기반 예산·정책 배분을 통해 통합 수준을 고르게 만들고자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통합모니터링 운영현황
 - 각 동(區)의 외국인 실업률, 사회복지 수급 비율 등을 분석해 통합 정도를 수치화
 - 각 동의 이주민 지원 시설(언어 센터, 복지소, 직업교육기관 등)을 지도화하여, 서비스 공백 지역을 시각적으로 식별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청, 구청, 복지기관, 이주민 단체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우선 대응 구역 설정, 맞춤형 프로그램 배치, 자원 재분배 등을 실시
- 구역별 결과와 자료는 『Integration Monitoring』이라는 형태로 출간 및 배포되어, 시장·구청장부터 이주민 단체까지 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

3) 정책 공감대 확산

■ 필요성

- (이주민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 경험 공유 및 확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잠재적 이주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영감을 제공함
- (매력적인 지역 브랜드 구축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살고 싶은 지역',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정착 우수 정책 홍보 및 정책 체감도 향상) 효과적인 지역 정착 지원 정책과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주민 및 지역 주민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신규 유입 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 이주민의 정착 과정과 지역사회 기여 사례 홍보는 기존 주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
-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지역의 매력과 성공적인 정착 이야기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강화함

■ 세부 추진과제

- '전북 정착 스토리' 발굴 및 아카이빙

- 다양한 유형(일자리, 교육, 귀농·귀촌·귀어, 은퇴자 등)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 사례 공모전 개최 및 우수사례 선정
- 선정된 우수사례 심층 인터뷰 및 영상, 스토리북, 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
- 온라인 '전북 정착 이야기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정착 수기, 인터뷰 영상, 관련 정책 정보 등 통합 제공)
- 매력적인 지역 브랜드 구축 및 홍보 강화
 - 전북자치도의 정주 매력(자연환경, 문화, 공동체, 지원 정책 등)을 담은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 타겟 그룹별(청년, 가족, 은퇴자 등)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및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집중 홍보 (SNS, 유튜브, 지역 박람회, 수도권 설명회 등)
 -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협력하여 전북살이 체험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지역 정착 우수 정책 및 지원사업 홍보
 -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요 정착 지원 정책(주거, 일자리, 교육, 금융 등)을 알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
 - 정책 수혜자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 홍보 및 정책 참여 독려
 -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온라인 정책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정책 접근성 강화
- 정착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 전개
 - 지역 방송사, 신문사 등과 협력하여 '전북에서 새로운 삶을 찾다' 등 기획 시리즈 제작 및 방영/게재
 - '우리 이웃의 정착 이야기' 사진전, 영상제 등 개최
 - 정착 관련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 지역사회 연계 정착 환영 분위기 조성
 - '새로운 이웃 환영 주간' 운영 및 지역 단위 환영 행사 개최 지원
 -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착 공감 토크콘서트', '마을 이야기 한마당' 등 개최
 -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정착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물 비치

■ 기대효과

-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향상) 성공적인 정착 사례와 매력적인 지역 브랜드 홍보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대한 대외적 관심과 호감도 증대
- (잠재적 이주 희망 인구 유입 촉진) 실질적인 정착 정보와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통해 이주 결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각
-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지원사업 활성화) 다양한 정책 홍보를 통해 이주민의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지원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책 효과 극대화
-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유대감 강화) 지역의 매력과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며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높이고, 이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및 정착 선순환 구조 마련) 긍정적인 정착 경험 확산이 또 다른 유입을 이끌고, 이는 다시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인구정책 기반 구축

■ 유사사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및 유공자 시상식

- 행사목적
 -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 특히, 지역 주도 저출산 대응 사업을 격려하고, 지자체 간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여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의 노력 강화
- 인구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유공자 시상
 -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
 - 인구감소 위기 대응 유공 시상식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고,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활동

참 고 문 헌

REFERENCE

- 백희원, 우성희. (2022). 청년 이주 정착 지원 프로젝트 ; ‘강화유니버스’ 사례와 협동조합 청풍의 전략 연구. 들는연구소.
- 민연경. (2023).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역선택요인과 정착 지원방안.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이정화. (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결정요인, 한국노년학회지, 25(3), 139-153.
- 이제현, 김현호. (2021).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석, 이진홍, 정재원, 이정명, 염하정, 이인숙, 이은숙, 박장순. (2020). 경기도 귀농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도농업기술원.
- 박대식, 마상진, 황정임, 김경인. (2018). 귀농귀촌 성공사례 조사분석 종합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준경, 이미홍, 윤정란, 송기욱, 최원철, 박미규. (2024). 도시민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박진경, 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정섭, 신소희, 구본경. (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시 청년허브.
- 통계청. (2015~2024). 「국내인구이동통계」.

SUMMARY

An Analysis of Regional Settlement Cases by Population Influx Patterns in Jeonbuk State

Dong Young Kim · Jiae Park · Jihoon Choi

1. Research Goals and Methods

■ Research Goals and Methods

- While existing population policy-related studies mainly focus on population outflows from the Seoul Capital Area to other regions and their underlying causes, empirical research on how urban-to-rural migration evolves into regional settlement is limited.
- As of 2024, 199,000 people nationwide moved to Jeonbuk State and its cities and counties, with the top reasons being job, family, housing, and education.
- This study aimed to 1) categorize individuals who have settled in Jeonbuk State into four types: job-driven settlers, education-driven settlers, urban-to-rural migrants for farming and village life, and retirees, 2) develop policies to facilitate migration to Jeonbuk State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3) leverage specific and well-researched case studies to explore reasons for settlement in Jeonbuk, migration routes, difficulties in selecting potential settlement regions and navigating settlement processes, and areas of improvement for sustainable settlement, thereby nurturing profound insights into the social and cultural attributes of these settlers.

■ Research Methods

- We analyzed migration patterns in Jeonbuk State, focusing on movement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as well as between cities and counties within Jeonbuk State. Additionall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relocating to Jeonbuk State, including their origins and reasons for moving.
- We categorized population inflows to Jeonbuk State into four types: job-driven settlers (employment and startups), education-driven settlers (education for themselves or their children), urban-to-rural migrants for farming, fishing, or village life, and retirees seeking rural life or returning to their hometown. We then explored representative type-specific settlement cases for Jeonbuk's 14 cities and counties.
- Moreover, we conducted a written surve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on selected regional settlement cases, followed by focus group interviews or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2.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Analysis of Policy Case Studies by Regional Settlement Type

- Job-driven migration: The tight job marke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ade moving to Jeonbuk State for a career a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r starting a local business a realistic option.
- Education-related migration: Multiple factors led to migration to Jeonbuk State, including education for migrants or their school-age children, reconstruction of family car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healing, and self-realization.
- Urban-to-rural migration for farming or village life: The idea of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or village life focuse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r securing a livelihood alternative served as a motivator behind migration to Jeonbuk State.

- Post-retirement migration: Drawn by green environments, cheap land prices, and quiet living conditions, retirees relocated to Jeonbuk State to begin their second lives.

■ Promotion of 3 Strategic Roadmaps and 18 Corresponding Action Plans for Regional Settlement in Jeonbuk State

- Initial settlement support: Dedicated support in the early settlement stage is crucial in helping individuals who relocate to Jeonbuk State seamlessly navigate the new environment.
 - Operating a one-stop population policy support center, designating early settlement coordinators, and providing housing-job packages
- Type-specific strategies: It is vital to formulate type-specific specialization strategies, given the various motivations and backgrounds of people who seek settlement in Jeonbuk State (such as job- or education-driven settlers, urban-to-rural migrants, and retirees).
 - Job support: Supporting small-sized startups, creating women-friendly jobs, and expanding high-quality jobs
 - Educational support: Strengthening regional competitiveness in education, providing integrated support for learning, care, and healing, and leveraging K-culture to attract foreign students
 - Support for urban-to-rural migration: Providing stage-specific support to streamline migration processes, shifting focus from “returning to farming” to “returning to fishing and village life,” and delivering selective focused support
 - Support for retirees: Restoring the self-esteem of retirees relocating to Jeonbuk State, expanding infrastructures for essential living, and building a community that fosters

mutual respe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 Integrated governance: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sustainable operations of regional settlement policies require securing organic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all concerned parties and encouraging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 Creating a policy consultation council for regional settlement support institutions, operating a monitoring group for migration policies, and promoting policy consensus

Key Words

Population policy, Population outflow, Population inflow, Settled population, Population migration, Regionalization, Ruralization

정책연구 2025-1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유입유형별 지역정착 사례분석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5년 6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75-3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예코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익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